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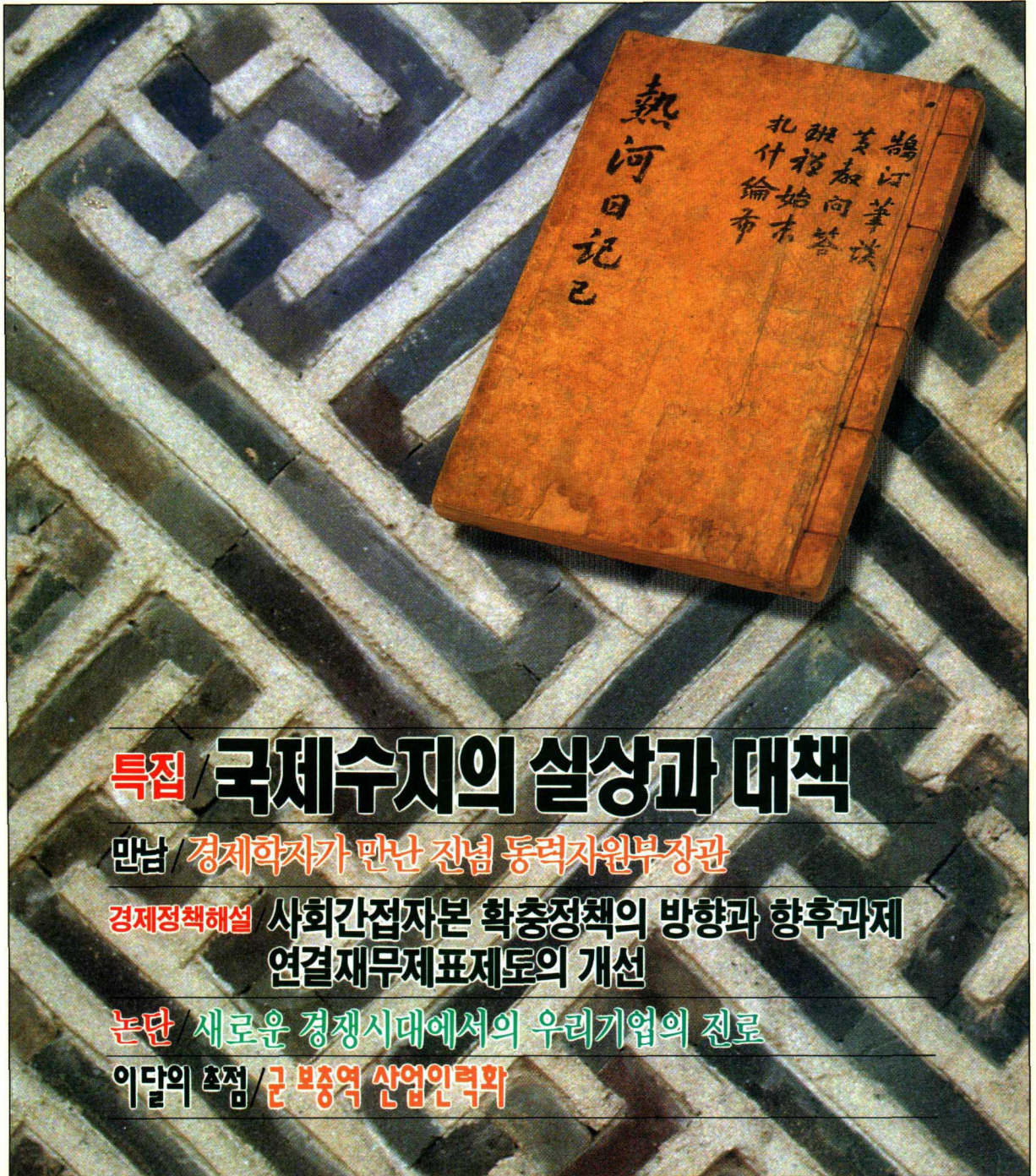
# 나라경제

제18호

1992

5

나라경제·1992년 5월 1일 발행·제3권 제5호·1990년 11월 14일 등록·등록번호 라-4859호 발행처/국민경제교육연구소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전화 (02)561-1400 1991년 8월 30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가·유통



## 특집 / 국제수지의 실상과 대책

만남 / 경제학자가 만난 전남 동력자원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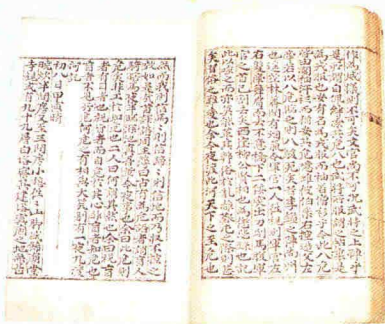
경제정책해설 / 사회간접자본 확충정책의 방향과 향후과제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

논단 / 새로운 경쟁시대에서의 우리기업의 진로

이달의 초점 / **군** 비중역 산업인력화

# 淸의 선진문명을 소개한 見聞錄

박지원(朴趾源, 1737~1805)



박지원은 영조 13년(1737) 서울 서대문에서 朴師愈의 둘째 아들로 출생하였는데, 호는 燕巖이었고 자는 仲美였다.

일찍이 父親을 여의고 知敦寧府事를 역임한 祖父 朴弼均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는데, 특히 16세부터야 글공부를 시작한 晩學의 어려움을 學問에 대한 탁월한 재능과 정열로 극복한 大學者였다. 연암은 집중적인 노력으로 儒敎經典과 諸子百家·兵農錢穀 등을 단계적으로 익혔을 뿐 아니라, 천문학과 지리학까지도 섭렵하여 20대에 이미 탁월한 문인이자 진보적인 사상가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또한 그는 이미 20대에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비판한 『兩班傳』을 비롯한 9편의 小說을 著述하였으며, 30대에 들어서는 스승으로서 朴齊家 등의 유능한 학자를 양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부패한 사회상과 위선적인 양반계층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은 지배계층 가운데서 많은 적을 만들게 되었고, 결국 그는 1777년(正祖 1년)에 서울을 벗어나 황해도 金泉의 燕巖峽으로 들어가 은둔생활을 시작하였다.

3년 후 그는 進賀使로 중국에 가는 三從兄 朴明源을 따라 淸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熱河와 燕京에 머무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었다. 이때의 경험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기록한 여행기가 바로 그 유명한 『熱河日記』이다.

그후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安義縣監을 거쳐 64세 때에는 府使職에까지 올랐다. 관직에 재직할 때에도 이미 탁월한 農書인 『課農小抄』와 혁신적인 토지개혁안인 『限民名田議』를 저술하였을 뿐 아니라, 69세(1805)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연암은 남다른 정열로 학문에 몰입하였다.

## ‘開放’을 통한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을 모색

『**熱**河日記』는 燕巖朴趾源이 자신의 北學思想을 체계적으로 피력한 中國 旅行記로서, 여기에는 그가 전문한 政治·經濟·兵事·天文·地理·文學 등의 각 방면에 걸친 淸의 발달된 新文物이 서술되어 있다.

『熱河日記』는 처음 박지원에 의해 25編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진보적인 著述은 그의 생존시에는 간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후에 세상에 알려지자 완고한 保守派들에게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 저술은 애호가들의 손으로 傳寫되어 많은 添削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록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著述이 正本은 아니더라도, 그의 진보적인 사고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연암은 중국의 선진문명을 통한 객관적 知識을 수용함으로써, 고루한 朱子學의 理念 대신 北學思想을 내세워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먼저 그는 당시 융성하던 中國의 歷史와 文明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동아시아의 현실에 대한 직시를 바탕으로 朝鮮 封建社會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완고한 사대주의자들이 尊明思想에 집착하여 아무런 실익이 없는 북벌책만을 부르짖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淸의 親朝鮮政策의 까닭을 밝히면서 北學論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利利用이 있는 다음에 厚生, 즉 經濟生活을 풍부하게 한 다음에 道德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권력층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農業의 原理를 분명히 이해하고, 工業의 技術을 安出해주며, 商業의 흐름을 터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현실의 경제생활을 무시하고 무조건 도덕만을 강요하는 당시의 완고한 儒生들에 대한 그의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 이른바 俗儒들의 僞學과 달리 經世致用學을 연구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을 여러 곳에서 명백히 하였던 것이다.

또한 연암은 科學的 知識을 더욱 심화해가는 가운데 ‘地轉說’을 받아들여, 이 새로운 학설의 보급과 확대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는 그의 친구인 湛軒 洪大容이 大谷 金錫文의 설을 부연하여 이 학설을 주창하였음을 밝혀 조선 천문학자들의 학설을 자랑스레 소개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熱河日記』를 통하여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朝鮮後期 知識人의 고뇌와 實學者로서의 투철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연암은 봉건사회 해체기에 들어선 당시 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통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후생학을 도입하고 쇄국주의 타파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것이었다.

특히 그의 북학사상은 이후 박제가·이덕무로 이어져 실학사상의 중요한 지맥을 형성하였다. 암울의 시대에서 ‘개방’을 통한 새로운 진보의 가능성을 선구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대안 없는 비판에 그치거나 추상적 논리만으로 목적을 높이는 오늘날의 창백한 지식인들에게 『熱河日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이다. 남원지

# 나라경제

1992 **5** 제18호



만남/진 님 동력자원부장관

## 권두칼럼

民族의 低力을 다시 살리자 / 박충훈·전부총리 **6**

##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내일을 설계한다  
- 건설부 국토계획국/이백만·객원기자 **8**

## 특집 국제수지의 실상과 대책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경제운용방향**  
/ 조학국·경제기획원 **14**

**수출 경쟁력의 재점검** / 김균섭·상공부 **20**

**수입증가 요인과 대응방안** / 이성재·상공부 **25**

**대일무역역조 개선 가능한가** / 현우석·경제기획원 **31**

**외채문제 걱정없나** / 김우석·재무부 **34**

**만남** 경제학자가 만난 진 님 동력자원부장관

전환기 에너지정책을 설계한다 / 신아순·연세대 교수 **76**

**이달의 초점** ·군보충역 산업인력화

실효성 거두려면 제도상 미비점 보완해야  
/ 이해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제도의 조기정착 위해 보완방안 마련 / 서만식·노동부 **45**

## 외국인이 본 한국경제

일본엔과 한국경제 / 오오츠카 마사노부·일본 노무라연구소  
관지웅·일본 노무라연구소 **38**

## 경제수상

기술선진국론 / 이종원·과학기술처 **52**

진실과 사랑의 리듬 / 노장우·상공부 **53**

의약품의 양면성 / 이강추·보건사회부 **55**

국가발전과 '정보화' / 정홍식·체신부 **56**

## 해외통신

한·일 경제문제를 보는 일본의 시각  
/ 강응선·경제기획원 / 일본 경제기획청 파견 **126**

워싱턴 사람들 / 안세영·상공부 / UNIDO 파견 **129**

## 경제동향

나라안 1/4분기중 물가와 국제수지는 개선된 모습  
/ 한승희·경제기획원 **58**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및 소비구조 변화  
/ 김해수·통계청 **63**

나라밖 일본경제, 경기후퇴기에 돌입 / 김기형·산업연구원 **70**

## 지상중계

우리 경제의 현황과 중소기업의 역할 / 최각규·부총리 **48**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건설부 국토계획국

## 경제정책해설

<b>사회간접자본 확충정책의 방향과 향후과제</b> / 배철호 ·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b>84</b>
<b>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b> / 이우철 · 재무부	<b>89</b>
<b>일반광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b> / 임규창 · 동력자원부	<b>95</b>
<b>아동 건전육성시책</b> / 변회연 · 보건사회부	<b>99</b>
<b>산학협동훈련의 활성화</b> / 최득소 · 노동부	<b>103</b>
<b>위성항행시스템의 개발과 우리의 대처방향</b> / 박근해 · 교통부	<b>109</b>
<b>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통신사업의 활성화</b> / 김창곤 · 체신부	<b>113</b>
<b>연구개발조사활동의 현황과 과제</b> / 박정택 · 과학기술처	<b>116</b>
<b>KS표시 허가 및 사후관리제도</b> / 박병태 · 공업진흥청	<b>120</b>
<b>출입기자코너</b>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정책을 / 신현만 · 한겨레신문 기자 / 경제기획원	<b>124</b>
疑似自律化 / 윤홍식 · 국민일보 기자 / 동력자원부	<b>125</b>
<b>나라경제 화랑</b>	<b>81</b>

## 나라경제 논단

새로운 경쟁시대에서의 우리 기업의 진로 / 전승훈 · 경제기획원	<b>131</b>
우리의 대외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 / 서용현 · 외무부	<b>139</b>
한국철도의 발전방향 / 이재봉 · 교통부	<b>144</b>
<b>생활경제 상담실</b>	
양도소득세 / 윤낙기 · 공인회계사 · 세무사	<b>152</b>
<b>건강한 삶을 위하여</b>	
사망원인별 사망률 / 홍명호 · 고려의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과장	<b>167</b>
<b>노영하 바둑칼럼</b>	
名盤	<b>168</b>
<b>경제용어해설</b>	
	<b>74</b>
<b>정책건의자료</b>	
기초연구의 진흥 및 과학기술인력의 양성방안 환경과학기술의 종합대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b>148</b>
경제부처 동정 정책일지 · 인사이동 / 편집실	<b>154</b>
경제부처 발간자료 안내 / 편집실	<b>161</b>
<b>나라경제를 읽고</b>	<b>169</b>

# 民族의 低力을 다시 살리자

朴 忠 勳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前 국무총리 서리

세상은 격변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소련이 저렇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冷戰이 종식되어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화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지만, 그 대신 총·칼 없는 ‘경제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눈 앞에 둔 오늘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넓었던 세상은 한 지붕 한 울타리처럼 좁아졌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한쪽으로 환경 문제 등 지구와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서로 복잡하게 얽힌 현상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아름답고 여유있는 문화생활로 이어갈 것인가. 모두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은데다 산이 많아서 농업을 주요산업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 부존자원도 빈약하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일기 시작했던 ‘수출제일주의’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그 시절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좀 융통성 없는 생각 같지만, 나는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제조업 생산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과감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젊은이들이 힘들고 귀찮은 일은 기피하고, 쉽고 편한 일만을 찾고 있다고 한다. 3차산업의 비중이 커져 가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지만 그것이 우리 실정에 꼭 맞는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나는 제조업의 적정수준이 유지되는 전제 아래서 다른 주장이나 어떤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나는 늘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꾸어 말하면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구나 지금 국운융성기를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기업의 경우 근본목적은 이윤추구에 있다. 그러나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다. 기업은 외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상식에서 벗어나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

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보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모두 옳은 것이며 나의 지시나 지도는 모두 정당하다는 自慢이 숨어 있어서는 안된다. 사업의 성공이 곧 위대한 도의의 실천은 아니다. 정의의 위한 자기희생도 아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에서 공산주의가 자멸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賤民資本主義로 흐르는 일도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근대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인 근로중견계층의 정신이 무너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중견계층의 힘이란 크고 대단한 것이다. 그



힘은 근로의 미덕을 살리고 분배의 형평이 지켜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불공정과 불로소득이 기승을 부린다면 중산층의 건전한 정신과 거기서 솟아나는 민주사회의 받침대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나아가 초강대국 미국의 위상이 변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아직 초강대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1960년에는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274달러, 일본은 343달러로 6.6대 1의 격차를 보였다. 그러던 것이 87년부터는 일본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미국은 세계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왕년의 4분의 3 내지 2분의 1에서 지금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고소비·저투자'가 빛은 폐단이 컸던 것이다. 늘어나는 범죄, 낮아지는 교육수준,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노후화하는 설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여기에다 지나치게 타협적으로 흐르는 미국의 정치체질, 이기주의 등이 구심점을 잃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미국과 상황이 다르지만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는 미국의 경우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다. 사치와 낭비, 무질서, 근로의 미덕을 외면하려 드는 일 등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닐진대 분명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다.

타고난 손재주와 눈썰미, 높은 교육수준 등이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전래의 근검정신을 합친다면 우리는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을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서울 올림픽에서 보여 준 민족의 저력, 그것을 다시 살려야 한다. 그리고 바짝 다가온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차분히 생각해야 한다.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대결이 아니라 너그럽게 감싸주는 자세이어야 한다. 그야말로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 만년을 내다보아야 한다. 어떤 정파나 기업의 이익은 民族의 百年大計, 千年大計의 막중함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제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의 미덕을 살려야겠다.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정신이 절실하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나부터 솔선해야 한다. 이러한 德目を 국가의 녹을 먹는 公職者들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나는 부총리로 일할 때 '官僚志士'라는 말을 자주 썼다. 개발연대에 있어 사명감에 불타는 清白吏의 높은 기상과 굽힐 줄 모르는 기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개발연대를 올바르게 이끌어온 기관차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정신과 자세는 시대가 바뀌어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만고불변의 哲則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필립**

#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내일을 설계한다

## 건설부 국토계획국

객원기자/이백만(한국일보 기자)

스케치(밑그림)를 잘못하는 화가는 결코 명작을 남길 수 없다. 화가의 능력은 스케치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국토개발’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면 건설부 국토계획국은 그 그림의 스케치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화가는 스케치에서부터 채색 등의 마무리까지 모두 혼자서 하지만, 정부는 각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와 부서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는 뜻이다.

국토개발이라는 大作을 위해 우선 국토계획국이 스케치를 하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작업을 한다.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집을 지으며 간척사업을 한다. 공단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스케치의 중요성이 절대적이긴 하나 막상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스케치는 화려한 물감 밑으로 잠기고 만다. 국토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국토계획국이 국가장래와 직결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개발의 功은 고속

도로나 철도·항만·공항·공장 등을 건설한 주무부처나 부서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국토계획국이 하는 가장 큰 일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작성이다. 지난 72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국토의 이용·보전·개발에 관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국토개발을 위한 스케치를 10년마다 내놓는 셈이다.

孫善奎국장은 “업무의 속성상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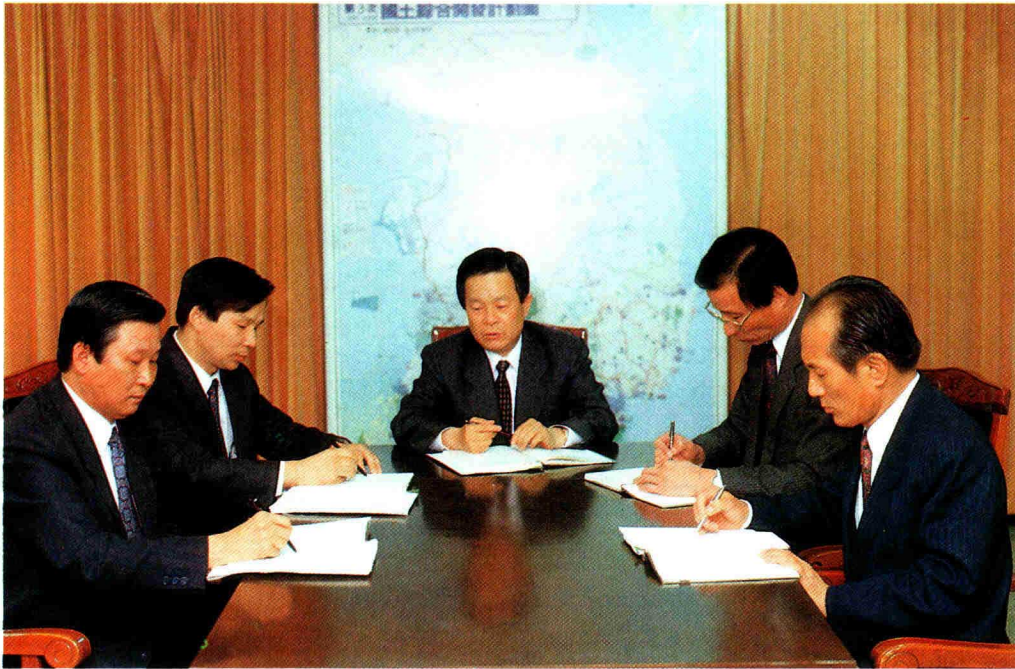
으로 화려하게 부각되는 작업은 아니지만,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의 결과를 생각하면 밤잠도 설치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시행기간중에 계획의 일부가 수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함부로 수정해서도 안된다. 이것은 마치 색칠을 하는 도중에 스케치상의 오류를 발견, 수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차질 잘못하면 그림 자체의 구도를 흐트러놓을 수 있다.

국토계획국의 브레인들은 단순한 행정공무원이 아니다.

경제학적인 사고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다 미래학자나 설계사의 자질을 겸비해야 한다.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國家百年大計를 위한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일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몽상가가 되기도 해야 한다. 기존의 관념이나 사고의 틀을 깨봐야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이다.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일부에서 ‘장미빛 청사진’이니 ‘구름잡는 얘기’니 하며 매도하기도 하지만, 10년 단위의 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면 이런 지적은 오





국토계획국의  
브레인들은 단순한  
행정공무원이  
아니다.  
경제학적인 사고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는  
미래학자나 설계사의  
자질을 겸비해야  
한다.

히려 들어 마땅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실무자들의 대답은 무척 진지하다.

曹宇鉉 국토계획과장은 “지도 위에 한 획의 선을 긋고 하나의 원을 그리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그들은 잘 모를 것”이라며 “청사진이 갖는 추상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계획국(국장 : 孫善奎)은 △국토계획과(과장 : 曹宇鉉) △수도권계획과(과장 : 金東薛) △지역계획과(과장 : 尹學老) △토지이용계획과(과장 : 崔鎮殷) 등 네 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계획국은 건설부의 首席局이다. 장남인 셈이다. 국토계획과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주무과이다. 특히 경제기획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과 연계시키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장기개발계획정책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경제기획원 기획국)과 국토종합개발계획(건설부 국토계획국)을 두 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교통·교육·국방·통신·보건·치안 등의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땅)에 무슨 구조물을 지으려 할 경우 모두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골격 안에서 이루어진다. 정부의 재정·금융정책도 이들 장기계획방향에 따라 운용된다.

건설부를 흔히 시쳇말로 ‘노가다’부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건설부 안에 이같이 아카데미한(?) 정책부서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수도권계획과는 국토개발정책에 있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정비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수도권계획과 업무의 중요성도 클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대도시권 정책도 연구하고 있다.

지역계획과는 道지역 등 지역개발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각 道에서 자체적인 건설계획의 지침을 수립하거나 설정할 때 지도·감독하는 일도 맡고 있다.

토지이용계획과는 국토이용계획을 수립·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항상 그렇듯이 국토계획국도 언뜻 보면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또 어찌 보면 ‘하는 일



하러 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과거 권위주의시대에는 통치자 한 사람이 일관성만 지키면 만사가 형통이었다. 반면 지금은 사공이 많아진만큼 객관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정말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다.

‘構成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어떤 면에서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토개발을 각 부처나 자치단체에 맡겨놓았다고 생각해 보자. 너도나도 지하철·고속도로·공원 등을 건설하려 할 것이고 요즘 인기있는 무공해공업단지 조성에만 열을 올릴 게 뻔하다. 어디엔가는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지 같은 기피시설이 들어서야 하는데도...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핵폐기물처리장이 좋은 예이다. 각 시도마다 인기있는 사업만 할 경우 그것을 미시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자체적으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일이지만 국가전체적으로는 기능마비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면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이 치밀하고 짜임새있게 짜여져야 한다.

국토계획국은 국토개발연구원을 산하기구로 두어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이 갖고 있는 기능상의 한계와 보직이동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92년부터 2001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는 3차계획은 1·2차 계획과 여러가지 면에서 질적인 차이점이 많다.

**국토계획국이 하는 가장 큰일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작성이다. 지난 72년부터 시작된 이 계획은 국토의 이용·보전·개발에 관한 1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3차계획은 국토의 균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통일에 대비한 국토공간의 통합성 도모를 지향하고 있다.**

1차계획(72~81년)은 공업단지·고속도로 등 주로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데 중점이 두어졌다. 고도성장의 바탕을 조성한 것이다.

또 2차계획(82~91년)은 京釜軸 중심의 국토개발을 균형화시키는 데 역점이 두어졌고, 국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했다. 주택 200만호 건설, 맑은 물 공급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반면 3차계획은 1·2차 계획의 골격을 이어받아 국토의 균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통일에 대비한 국토공간의 통합성 도모를 지향하고 있다.

향후 10년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통일 또는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차 계획에서는 남한만을 떼어 국토개발계획을 수립·집행했으나 3차계획은 통일(통합)되었을 때의 상황을 예상하여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철도의 연결이나 國道 연결은 계획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孫국장은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아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차원을 넘어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3차계획의 주요사업은 ① 공장부지 114km<sup>2</sup> 공급 ② 고속도로 1,500km 신설 ③ 국도 5,500km 확장 ④ 철도 1,300km 전철화 ⑤ 주택 540만 가구 건설 ⑥ 2,800kw 규모의 발전소 신설 ⑦ 해안 1,200km<sup>2</sup> 매립 등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3차계획의 사업비가 재정자금과 민간자금을 포함, 모두 2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대폭 증액될 수도 있다.

최대의 변수는 남북관계. 당장 통일이 된다면 3차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

瞿과장은 독일통일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면서 “남북통일이 반드시 독일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의 통일에 따른 경제통합과 국토개발에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2년여 동안 수백명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만들어진 3차계획이지만 통일이 되면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국토계획국은 또다시 그 고달픈 ‘푸닥거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푸닥거리라면 열번 백번을 해도 좋겠다고 입을 모으는 국토계획국 직원들의 모습에서 국토개발의 밝은 미래를 예감하게 된다. 남북



국제수지의 실상과 대책

#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경제운용 방향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수지 문제는 일시적 충격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오랫동안의 요인이 쌓인 결과이기 때문에 治療方法에 있어서도 일시적이고 충격적인 방법보다 우리 경제 내부에 구조적으로 수출증가 속도가 수입증가 속도를 앞지를 수 있는 自生力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조학국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장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경제운용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국제수지’의 본질과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의 理致가 그러하듯이 복잡다기한 문제일수록 문제해결의 核心은 그 본질 내지 概念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수지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국제수지의 숫자적 목표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 자칫 본질을 벗어난 정책대안을 선택하거나 또는 잘못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이다.

## 國際收支에 대한 기본 視角

일례를 들면 지난해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과는 달리 급격히 확대되자 국제수지가 年度中에 可視的으로 개선되도록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책성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9월 중 두 차례에 걸쳐 國際收支改善對策을 발표하자 정부가 아직도 樂觀論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의 내용이 ‘안정화 시책을 강화하겠다’, ‘기계류·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식의 너무 長期的이고 원론적인 정책 대응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물론 당시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이 앞서는 미진한 대책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시 정부는 왜 短期的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다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樂觀的 대응자세 때문인가, 아니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政策의 한계성 때문인가?

### 국제수지와 물가는 '시계의 두 바늘'

그 해답은 '국제수지는 물가와 더불어 시계의 두 바늘이다'라는 표현을 음미함으로써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계의 두 바늘은 현재의 시각을 나타내는 指針이다. 시계의 두 바늘이 정확한 시각을 가리키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시계바늘의 위치를 옮기는 방법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시계의 두 바늘이 움직이는 것은 시계내부의 수많은 부속품과 톱니바퀴가 서로 얽혀서 相互作用한 결과일 뿐이지 스스로가 역동성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國際收支와 물가라는 지표도 한 나라 경제가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總體的 指標에 불과하다. 현재의 지표가 소망스러운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표 그 자체를 人爲的으로 操作할 수는 없으며, 결국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원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치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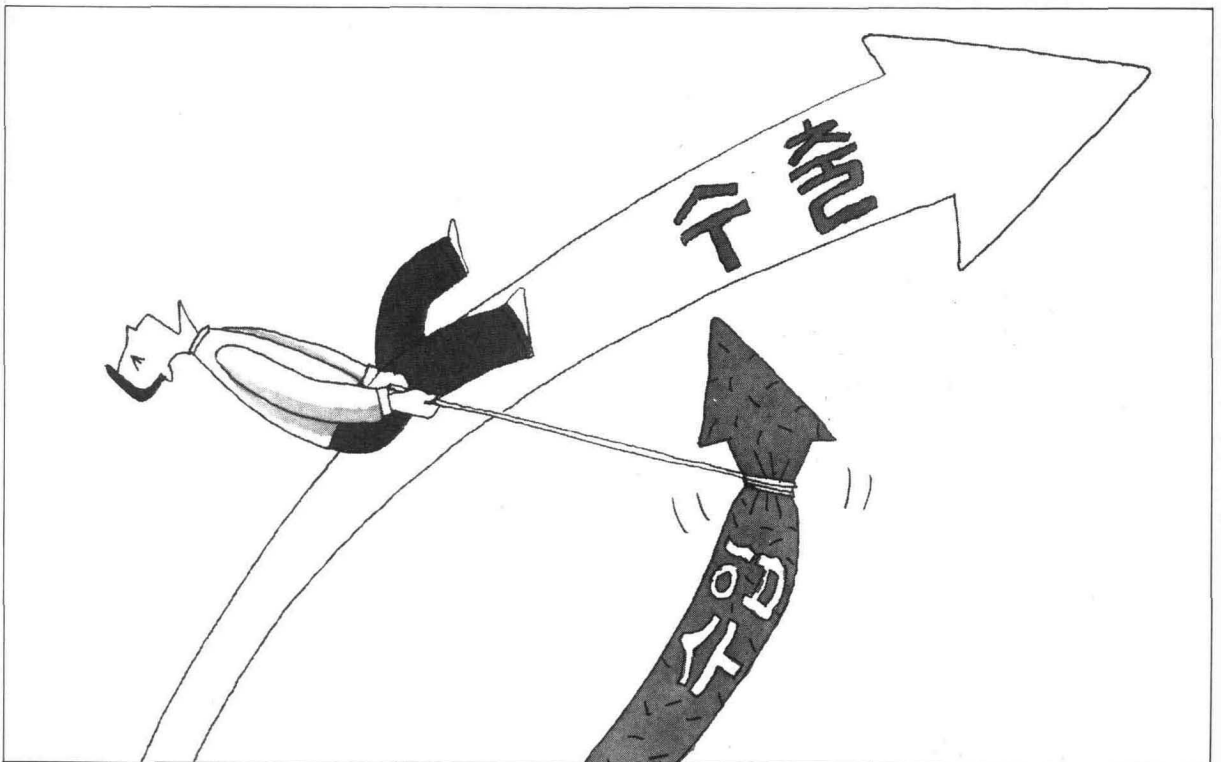
바꾸어 말하면 국제수지는 한 나라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기업·근로자·농민·가정주부 등 모든 經濟主體의 경제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흑자 또는 적자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合理的 경제행위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런 점에서 국제수지는 경제면에서 본 한 나라 국민 전체의 '人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 국제수지관련 政策의 選擇

만약 정부가 국제수지 개선을 단기간내에 가시화하는 것을 유일한 정책목표로 할 경우에는 전혀 정책수단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제수지를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단순화된 概念으로 정의한다면, 輸出增大를 위하여 단기간내에 가격경쟁력을 支持(품질경쟁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 정책수단이 아님)하는 방법을 쓰거나, 輸入需要를 인위적으로 진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면 가능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기간내에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회복시키려면 換率을 인위적으로 대폭 인



상시키거나, 貨金을 동결하거나 또는 低利의 政策金融을 확대공급하거나, 通貨量을 급격히 늘려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시키는 등의 정책을 단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오히려 국제수지문제를 더욱 惡化시키기 때문에 정책선택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단기간내 가격경쟁력 支持政策은 국제수지문제 악화시켜**

換率의 인위적 상승은 오늘날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는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의 원인이 됨은 물론 국내적으로는 수입가격 인상을 통한 국내물가를 자극하여 수출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貨金凍結問題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우리 경제가 이미 高貨金體制로 이행한 마당에서 과거와 같은 저임금을 더이상 기대하기 곤란하다. 政策金融支援 擴大問題는 금융자유화라는 또다른 정책목표와 상충되며, 통화량 공급의 확대를 통한 금융비용경감 문제도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名目金利를 인상시켜 기업의 비용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輸入需要의 人爲的 진정은 통상마찰 야기시켜**

한편 수입수요를 인위적으로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는 外資導入을 억제하거나, 品目別 輸入統制 등 직접규제 방안을 동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外資調達을 전면 통제할 경

우 기업의 투자계획에 차질을 초래하여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輸出潛在力 培養을 저해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수입을 통제하는 방식은 대내적으로 경쟁을 약화시키며,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을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이 단기간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支持하거나 수입수요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중국에는 對外 縮小均衡下에서 국내 물가의 상승을 야기시키고 성장둔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록 당장에는 고통을 주는 방법이 될지라도 환율을 안정적으로 運用하면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긴축을 통하여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수입수요를 진정시키는 데 국제수지 개선의 기본방향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수지 변혁기를 경험했던 外國의 事例를 보면 더욱 분명해지리라고 본다.

**국제수지 變革期의 외국 사례**

한 나라의 국제수지 赤字는 여타국의 국제수지 赤字로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국제수지의 합은 '0'이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수지는 한 나라의 經濟力 내지 산업의 競爭力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 나라 국력의 榮枯盛衰에 따라 국제수지의 적·흑자도 교차되기 마련이며, 영원한 흑자국 또는 영원한 적자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각국의 國際收支 分布의 변화추이를 보면 확연하게 나타난다. 70년에 미국·일본·EC 등 선진국이 흑자국으로, 其他 開途國이 적자국으로 대분되던 국제수지 분포가 75년에는 美國의 흑자 주도하에 영국·일본·개도국 등이 적자를 시현하였고, 80년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產油國이 흑자국으로 부상한 반면 서독·일본 등 선진국과 여타 개도국이 적자국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85년 이후에는 美國

〈표 1〉 各國의 국제수지 변화추세

(단위 : 억달러)

	70	75	80	85	89
미 국	23	181	18	-1,223	-1,100
EC 국가系*	27	1	-374	201	48
영 국	20	-34	75	48	-321
서 독	9	44	-139	170	554
프 랑 스	-2	27	-42	-0.4	-39
일 본	20	-7	-107	492	572
A S E A N	-12	-37	-30	-41	-29
한 국	-6	-19	-53	-9	51
기 타	-52	-119	546	580	458

註 : \*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제외  
 자료 : 한국은행, 「세계속의 한국경제」, 1991

이 세계최대의 적자국으로 몰락한 반면, 日本이 단일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흑자국으로 올라섬으로써 국제수지의 판도가 바뀐 것이다.

이러한 각국간의 국제수지 변화 추세 속에서 赤字에서 黒字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나라와, 흑자에서 적자로 反轉한 나라의 당시 상황을 일별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보여진다.

### 日本, 단합된 국민적 노력으로 국제수지 흑자국으로 부상

우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대만·일본·서독 등을 들 수 있는데, 지면 관계상 각 나라의 국제수지 변천 요인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공통적인 敎訓의 사례만 추출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정부가 경제문제를 응급처방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물가안정 및 대외개방 등 각 경제주체에게 다소 苦痛이 따르는 政策이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점과, 70년대에 이미 여느 국가보다도 높은 國民貯蓄率에 의하여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이웃 日本의 경우 85년 9월 ‘프라자 會談’ 이후 불과 1년 3개월 사이에 엔貨가 무려 5.14%나 切上된 후에 勞組까지도 자진해서 임금인상 요구를 철회하는 등 환율과 무역전쟁에서 국민 전체가 단합된 力을 보인 사례는 국제수지가 국민 모두의 人格의 結集體라는 점을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한때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반전된 나라로는 세계 超強大國의 지위를 누린 미국과 1920~30년

구조적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人力需給을 원활히 하고, 사회간접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技術開發投資를 확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대 經濟富國을 구가하던 南美國家の 예를 들 수 있다.

### 美國은 70년대 이후 國際收支 赤字國으로 反轉

미국경제가 군사·우주·항공 등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최첨단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이후 국제수지 적자 경제로 반전된 것은 철강·자동차 등 成熟産業에서의 기술혁신 노력과 중장기적인 産業構造調整을 통한 경쟁력 회복 노력이 지연된 데다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부진, 기업의 研究開發投資에 있어서 일본과 서독에 뒤진 점, 국민들의 過剩消費와 낮은 저축률, 정부의 과다한 福祉費 및 국방비 지출 등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등에서 기인하였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국제수지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는데, 이들 국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만성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고물가→고임금’의 악순환이 지속되었고, 政治不安定 속에서 국민들의 근면성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77년에 미미하나마 한때 흑자를 기록한 바 있었고, 86~88년에 소위 3低라는 대외여건 호전을 바탕으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흑자기 이후에 不動產投機 過熱 및 물가 불안, 정치·사회의 불안정, 격렬한 노사분규와 賃金上昇, 기술개발 및 품질개선 노력의 미흡 등 과도기적 혼란을 겪으면서 결국 국제수지를 균형기조로 정착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 최근의 국제수지 동향과 국제수지 관리시책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86~88년 중 큰 폭의 흑자를 보이던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90년에 赤字로 反轉되고 91년에 적자폭이 88억달러로 큰 폭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단기간내에 국제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景氣的 요인과 構造的 요인이 동시에 합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국제수지적자의 景氣的 要因

경기적 요인으로는 먼저 수출면에서 선진국의 성장둔화 및 교역량 감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큰 나라의 경우 결국 세계경기의 好·不況에 따라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世界交易增加率이 88년의 9.1%에서 90년에는 4.3%, 91년에는 0.6%로 크게 둔화되었고 특히, 우리의 최대 시장인 美國이 걸프戰 이후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난해에 1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對美 수출증가율은

86~88년의 평균 25.7% 증가에서 90~91년에는 5.2% 감소로 반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입면에서는 89년 이후 성장률을 웃도는 높은 민간소비와 국내 건설경기 活況, 設備投資 好調 등 내수경기 活況이 소비재·원유·건설관련 원자재·자본재 등 全部門에서 높은 수입을 유발하여 국제수지적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국제수지적자의 구조적 요인

한편 構造的 要因도 수출과 수입면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수출은 88년 이후 높은 임금상승과 근로기장 해이, 기술개발 노력의 미흡 등으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됨으로써 低價品目에서는 개도국에 의한 가격경쟁력에서, 高價製品은 선진국과의 품질경쟁에서 뒤지게 되는 샌드위치 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교역상대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최근 수년간 市場占有率이 계속 저하되어 온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수입면에서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우리 산업이 수입의존적인 구조 특히 對日 依存的인 수입구조를 지닌 결과, 국내의 생산활동(수출·투자·소비) 규모가 커질수록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의 산업구조가 기계류·부품·소재 등 기초산업이 脆弱한 상태에서 조립완성형 산업구조로 발전하여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수지적자 확대 상황을 맞아 지난해부터 경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景氣對應的 施策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경기대응적 시책으로서 내수경기 진정을 위한 安定化施策을 강화하여 總通貨를 90년의 21.2%에서 91년에는 18.6%로 긴축운영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建設景氣鎮靜對策을 추진하여 건설경기 活況에 따른 수입유발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다.

또한 86~88년 흑자기중 과도한 보유외환을 장기적 시설투자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한 특별외화대출제도가 자본재 수입급증을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91년 초에 이를 폐지한 데 이어 일반외화대출의 융자비율 인하 등 外貨貸出制度를 개선한 바 있다.

이러한 안정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경기적 요인에 의한 국제수지적자는 서서히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 균형문제

는 冒頭에서 밝힌 대로 일회성 정책 대응으로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국제수지의 構造的 均衡을 위한 정책과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국제수지 문제는 일시적 충격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오랫동안의 요인이 쌓인 결과이기 때문에 治癒方法에 있어서도 일시적이고 충격적인 방법보다 우리 경제 내부에 구조적으로 수출증가 속도가 수입증가 속도를 앞지를 수 있는 自生力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輸出增大을 위한 中長期 對策

구조적으로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人力需給을 원활히 하고, 최근 항만·도로 등의 적체현상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대가 경쟁력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技術開發 投資를 확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먼저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제조업부문으로의 人力誘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製造業 就業者 비율을 91년의 27.4%에서 96년에 29%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시책으로는 합리적인 解雇基準의 마련,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산업수요에 맞는 技術人力 養成方案 마련,

〈표 2〉 국제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

	87	88	89	90	91(잠정)
수출증가율	36.2	28.4	2.8	4.2	10.5
수입증가율	29.9	26.3	18.6	13.6	16.7
수출입차	63	89	9	-48	-97
경상수지	99	142	51	-22	-88
대GNP비율	7.6	8.2	2.4	-0.9	-3.3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국제수지」

비진학청소년·여성인력·고령자 등 유희인력의 산업 인력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社會間接施設投資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하여 90년에 GNP의 3.7%에 불과했던 투자비율을 92~96년중에 5% 수준까지 확대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도로 배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분야의 投資擴充을 위해서 정부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비율을 91년 2.1% 수준에서 96년까지 3~4%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인바, 기업도 기술개발 투자를 당장의 費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개발투자를 확충하는 노력을 병행해 주어야만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輸入需要의 구조적 鎮靜

수입수요를 진정시키는 방법은 크게 보면, 국내 소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선별적 투자로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하여 輸入誘發活動 그 자체를 극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계류·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수입유발적 産業構造를 개편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먼저 내수의 구조적 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安定化 施策을 강력히 추진중에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의도적으로 7%로 낮게 책정하여 통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건설투자를 적정관리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기업이 資金面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경영합리화의 계기로 삼아 무리한 기업확장보다는 자동화·성력화 및 연

수입수요 진정 방법은  
국내 소비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선별적 투자로  
과잉·중복투자를 방지하여  
輸入誘發活動 그 자체를  
극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계류·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수입유발적 産業構造를  
개편하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구개발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機械類·部品·素材産業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는 기계류對日 輸入依存度를 91년 37.4%에서 96년에는 34% 수준으로 축소(91년 기계류 총수입 460억달러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172억달러)하고, 기계류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를 91년 68억달러 수준에서 96년까지 25억달러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이미 마련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라 92~96년중 國産化 對象 4천개 품목을 선정·고시하여 개발하고, 수요기반 확충을 위하여 試製品 개발을 위한 소요자금 7천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며, 개발 기계류의 수요촉진을 위하여 92년중 국산기계 구입자금 및 자동화 설비 자금으로 5조1,3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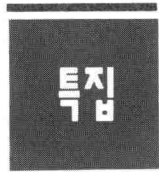
### 국제수지 균형기조 회복 위해 범국민적 노력 절실

우리 經濟發展 段階史 측면에서

볼 때 향후 2~3년 이내에 국제수지 균형기조를 이룩할 수 있으나 하는 문제는 90년대 후반 우리나라가 선진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수출증대 노력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産業競爭力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生産的 勞使關係의 확립 및 잃어버린 근로의욕의 재충전이 요구된다. 동시에 모든 국민들의 근검절약정신의 회복과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반에 국제수지의 均衡基調를 회복하고 계획기간 중반 이후 흑자 균형기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는 전체 국민의 총체적 경제행위의 결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경제현상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결집된 힘이 없이는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우리는 86~88년 흑자기 이후 과도기적 혼란이 가져다준 국제수지적자 반전의 뼈아픈 경험과 外國의 成功事例을 되새겨 보면서 수많은 부족품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국제수지라는 시계의 추가 제 위치에 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글



국제수지의 실상과 대책

# 수출 경쟁력의 재점검

고임금 구조에서도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간 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기존 산업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신속히 탈바꿈해 가는 산업내 구조조정도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김군섭

상공부 수출진흥과장

86년 이후 3저시대에 우리 경제는 무역수지 흑자를 경험하였으나 90년부터 다시 적자시대로 전락하고 적자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무역수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경제가 무역수지 흑자기를 다시는 맞이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아직도 純債務國인 우리는 적정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이룩하여 외채를 갚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곧 다가올 통일에 대비한 비용도 마련해야 할 처지이다.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통상환경상 어려운 일이므로 수입규모의 축소보다는 수출확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하루속히 흑자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최근의 수출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 최근의 수출동향

8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각종 수출지원 제도가 축소되면서 환율인하 및 급격한 임금인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 수출의 신장세는 88년의 28.4%에서 89년에는 2.8%로 뚝 떨어졌다. 수출금액 기준으로 2.8% 증가하였지만 輸出單價가 9.8%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수출물량은 오히려 6.4% 감소함으로써 수출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79년에 이어 두번째로 負의 효과를 끼치게 되었다. 90년에는 미국 경기가 하향국면

으로 접어들고 걸프전 발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면서 선진국의 수요 둔화 등 해외여건이 악화되는 속에서도 수출은 89년보다 조금 개선된 4.2%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기초적으로는 상향국면으로 접어들었다.

#### 중화학제품 수출은 호조세 보여

91년의 수출은 90년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증가율면에서는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10.5%라는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중화학 제품은 노사분규로 인하여 조업일수가 크게 줄어든 컨테이너를 제외하고는 전품목에 걸쳐 증가세를 나타냄으로써 17.7%의 호조를 보였다. 반면, 경공업제품은 몇년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던 섬유류 수출이 증가세로 反轉되기는 하였지만, 전체 수출에서 5.3%의 비중을 차지하는 신발은 10.9%, 완구·인형은 16.2%의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경공업 전체는 1.7%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특히 90년부터 91년 상반기까지

우리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었던 북방지역의 特需로 인하여 칼라TV·VCR 등 일부 가전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몇년간 노사분규로 큰 타격을 입었던 선박·자동차 부분의 수출이 노사관계가 안정됨으로써 크게 늘어나는 등 대부분의 중화학제품이 호조세를 보여 전체 수출이 두자리 수의 증가세를 시현할 수 있게 되었다.

#### 對美·對日 수출은 감소세

지역별로는 우리 수출의 25.8%를 점하는 미국 시장의 경기부진으로 89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17.2%를 점하는 일본 시장은 엔화 강세기에 地球化전략의 일환으로 가전제품 등 성숙기 단계의 제품 생산기지를 중국이나 동남아에 이전하여 현지공장 제품을 역수입하여 내수에 충당함으로써 일본 시장에 대한 우리의 中低價 제품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철강제품·시멘트 등은 일본의 건설경기 후퇴와 국내 건설경기 과열 등으로 수출이 부진하여 연속 2년간 감소세를 면치 못하

였으나 91년 하반기 이후 엔화 강세 기조에 힘입어 92년 들어 2월까지 0.2%의 증가세를 보여 일단 감소세가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 수출의 13%를 점하는 對 EC지역 수출은 統獨需要가 활발하여 전자·전기제품, 섬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 88년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91년 하반기부터의 유럽 통화 약세기조와 統獨수요의 소멸로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92년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이 부진한 것과는 반대로 동남아·중남미 등 과거 비주력시장이라고 여겼던 지역에 대한 수출은 이 지역의 급속한 공업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남아 시장은 이미 EC보다도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져 제3의 우리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자본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일어나고 앞으로도 꾸준한 신장세가 기대되는 지역이 되고 있다.

〈표 1〉 수출증가추세

(단위: 억달러, %)

	89		90		91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총 계	624	2.8	650	4.2	719	10.5
중화학제품	345	2.7	867	6.5	430	17.3
전자전기	171	5.1	179	4.3	202	12.8
철 강	43	9.6	42	-1.4	45	6.4
선 박	18	1.6	28	56.7	41	47.3
화 공 품	18	11.3	23	27.3	30	27.5
경공업제품	245	3.1	251	2.3	255	1.7
섬 유	151	7.3	147	-3.1	155	5.5
신 발	36	-5.6	43	20.1	38	10.9
완 구	9	-9.1	7	-17.7	6	16.2

자료: 상공부

#### 수출 부진의 배경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품목별로, 지역별로 수출의 명암이 현저하게 대비되고 있는 배경을 보면 景氣的 要因과 構造的 要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경기적 요인을 살펴보면, 수출시장에 따라 경기상황이 달라서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수출상품은 주로 중저가 소비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가격과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요시장의 경기상황은 우리 수출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때 우리 수출의 약 35%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은 89년 이후 계속 경기가 후퇴하고 있고, 약 20%에 달했던 일본도 동남아산 제품과의 경쟁격화, 건축경기 후퇴 등으로 우리의 양대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이 부진세를 보여 시장 점유율이 각각 26%와 17%로 떨어졌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리 수출의 약 20%를 점하고 있는 섬유수출은 미국의 경기침체와 거둬진 異常暖冬으로 중급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크게 줄어 들었고, 저급품은 중국산이나 동남아 제품에 시장을 빼앗기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임금 구조에서 고임금 구조로 급속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산업간 구조조정과 산업내 구조조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고 있는 실정이다. 단일상품으로 약 40억달러를 수출하고 있던 신발류는 우리 수출상품 중 대표적인 우수상품으로 호평을 받아 왔으나, 91년도 이후부터는 미국의 경기후퇴로 저급품만 팔리고 있어 중국이나 동남아 제품에 크게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공급능력 크게 위축돼

첫째,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공급능력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다소 기술집약도가 높은 중화학제품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수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종래의 우리 수출 주종상품인 노동집약도가 높은 의류·완구·신발 등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노동인력이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좋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로 이동하고 근로시간도 단축됨으로써 우리 수출산업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던 적기 공급체제가 무너지면서 공급능력도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주요시장에서의 수출 점유비 변화

(단위: %)

	88		89		90		91	
	증가율	점유비	증가율	점유비	증가율	점유비	증가율	점유비
미 국	16.9	35.3	-3.6	33.1	-6.2	29.8	-4.1	25.8
일 본	42.3	19.8	12.1	21.6	-6.1	19.4	-2.2	17.2
E C	23.3	13.4	-9.2	11.9	19.7	13.7	9.6	13.5

자료: 상공부

〈표 3〉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추이

	87	88	89	90	91
실 근로시간	54.0	52.6	50.7	49.8	48.8
법정근로시간	48	48	46	44(대기업)	44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년도

〈표 4〉 산업별 근로자수 추이

(단위: 천명)

	88	89	90
제 조 업	3,129 (205)	3,143 (14)	3,138 (-5)
경 공 업	1,112 (27)	1,061 (-51)	963 (-98)
중화학공업	1,589 (170)	1,658 (69)	1,679 (21)

註: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 지연

둘째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지연이다. 고용환경의 변화와 미시적인 인력 수급상의 불균형이 87년 이후부터 급속히 심화되는 속도와 맞추어 자동화·정보화 등으로 대응하여 생산성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소홀했던 결과 제조원가의 상승 압력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 수출상품의 高價化 크게 부진

셋째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로 인한 신상품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수출상품의 高價化가 진전되지 못하

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수출 주종 상품이었던 노동집약제품은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과거 우리나라가 하였던 것처럼 저임금을 바탕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취하면서 우리의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오고 있고, 선진국들은 선진국대로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된 데는 우리 수출의 마켓팅전략상에 문제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 우리 수출업체는 외국의 주요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로부터 대량의 '주문자 상표수출' 소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의 수출에 익숙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은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유통시장에 채고 부담이나 시장개척에 따른 위험, 광고비용 절약 등 새로이 시장에 參入하는 데 따르는 여러가지

위험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처럼 우리 自力에 의한 시장개척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의 소비자에게 우리 상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한 채, 물량위주의 성장책을 추진하여 온 결과 우리 상품은 품질 수준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 위주 또는 高價化를 통한 수출증대책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는 독자적인 시장개척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고급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우리 제품에 대한 인식, 즉 중저가 제품이라는 선입관을 불식시켜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로 연결시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결국 성숙기 단계의 상품시장에서 後發國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 품질수준의 低下

넷째로는 최근의 우리 상품에 대한 품질 수준이다.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는 상품의 품질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노사분규 이후 각 산업 현장마다 근로의식이 해이해지고 일손마저 달리고 있어 제품의 끝마무리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항의가 해외 바이어로부터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최근의 수출동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품질수준의 후퇴는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근로자 의식과 고용환경의 변화에 맞춰 품질관리체계를 보강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각종 경영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 物流費用의 증가

마지막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과 수출관련 서비스 산업의 저생산성 등 수출환경 요인에 의한 경쟁력의 약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본다. 무역규모는 80년 대비 3.4배가 늘어났지만 항만이나 고속도로의 화물처리 능력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채 오히려 자동차는 91년 말 현재 80년 대비 8배, 85년 대비 3.7배나 늘어남으로써 교통체증은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도로·항만 등의 체증으로 物流費用은 91년의 경우 수출원가의 14.9%나 되며 매년 1%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각종 인허가 절차는 여

〈표 5〉 산업별 설비투자 추이

(단위 : 억원)

	88	89	90	91	88~91 평균증가율
경 공 업	21,842	21,150 (-1.5)	24,921 (17.8)	28,998 (16.4)	(9.9)
중화학공업	89,255	107,573 (20.9)	108,573 (22.5)	128,598 (18.4)	(12.9)

註 : 괄호 안은 증가율

자료 : 산업은행, 「설비투자동향과 전망」, 각호

〈표 6〉 주요 상품의 가격 국제비교

(단위 : 달러)

	88			90			91		
	한 국	일 본	동남아	한 국	일 본	동남아	한 국	일 본	동남아
칼라TV	249	269	224	239	259	221	235	257	219
VCR	239	279	225	239	269	225	230	265	215
자동차	5,724	6,385	-	5,899	6,635	-	6,375	7,095	-

註 : 칼라TV는 19인치 리모콘형, VCR은 2Head보급형, 자동차는 1500cc급임.

자료 : 상공부

전히 직접 사람이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운송·보관·유통 등 수출관련 서비스부문의 낙후성으로 발생하는 코스트가 결국 수출관련 부대비용과 물류비용에 전가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 제조업경쟁력 강화시책 차질없이 추진

최근 2~3년 동안 우리 수출은 구조면에서나 추세면에서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일반 국민들이 體感하고 있는 상태는 더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실상보다 더 나쁘게 보이는 이유는,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왔고, 또한 수출이 부진한 부문이 이제까지 우리의 수출 주종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활동기업수도 많은 경공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 수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이를 해결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앞에서 지적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임금구조에서 고임금구조로 급속히 전환되는 과정에서 산업간 구조조정과 산업내 구조조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임금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製造業競爭力 強化施策에서는  
919개 핵심기술의 개발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첨단산업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 및 금융면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였다.


구조에서도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간 구조전환을 촉진하고, 기존 산업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신속히 탈바꿈해 가는 산업내 구조조정도 시급한 당면 과제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製造業競爭力 強化施策에서는 919개 핵심기술의 개발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첨단산업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 및 금융면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산업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급기술인력 공급확대를 위한 이공계 정원의 확충과 함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장입지의 저렴한 공급도 제조업경쟁력 강화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제조업경쟁력 강화시책과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확대 및 수출부대비용 절감으로 수출기업의 採算性을 높여주고,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게을

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올해 들어 무역금융의 대상을 비계열 대기업까지 확대하였고, 무역어음의 할인실적의 대폭 확대 및 할인금리의 인하도 적극 추진중에 있다. 또한 수출부대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수출검사 대상품목 및 자율규제 대상품목을 대폭 축소하는 등 수출에 관련된 규제적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무역업무 자동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한국상품 전반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品質韓國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과 업체를 선정하여 세계수준으로 육성하는 유망수출상품 세계일류화 사업을 확대 강화하여 수출상품의 품질고급화 및 자기상표제품의 수출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경쟁력 제고 대책은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없이는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력, 즉 기업은 기술개발·경쟁력향상 투자 등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겨루어 이길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근로자도 임금상승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도 기업의 自救努力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요인의 개선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제수지의 사상과 대책

# 수입증가 요인과 대응방안

최근 1~2년 사이의 수입증가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크게는 수출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앞질러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경제운용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며, 작게는 수입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성재  
상공부 수입과장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두 가지 발전전략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 인지는 각 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발전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공산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자유무역주의에 바탕을 둔 개방화 전략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며, 실제로도 우리의 정책방향과 기조는 개방화의 큰 흐름을 유지해 왔다. 그 결과 한 국시장은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일부 農産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수입이 개방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시장이 개방된 경제구조하에서는 경제규모의 증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 사이의 수입증가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크게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앞질러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경제운용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며, 작게는 수입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확대균형을 지향해 간다면 수입이 비록

〈표 1〉 연도별 수출입 추이  
(증가율, 단위: 억달러, %)

	88	89	90	91
수 출	607 (28.4)	624 ( 2.8)	650 ( 4.2)	719 (10.5)
수 입	518 (26.3)	615 (18.6)	698 (13.6)	815 (16.7)
수출입차	89	9	-48	-97

자료: 무역협회

높은 증가세를 보일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와 같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는 수입증가를 우려하는 정도를 넘어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과거회귀적인 保護主義 주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의 실천은 60~70년대의 貿易環境에서나 가능한 것이었지, 지금과 같이 국제무역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역할이 높아지고 우리를 둘러싼 국제무역환경과 교역파트너들의 우리를 보는 시각이 크게 변모한 상황에서는 실행불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불가피한 수입의존 구조와 개방화 전략의 채택, 그리고 그로 인한 수입의 증가와 국제수지 赤字負擔’이라는 일견 대립되는 듯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최근의 수입급증 원인과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 투입중간재의 수입의존도

(단위 : %)

	85	87	88	일본(87)
전 체 산 업	12.9	12.8	12.0	2.9
제 조 업	21.7	20.5	19.3	4.8
경 공 업	13.2	13.7	13.3	5.1
중화학공업	28.2	25.5	23.4	4.6

자료 : 한국은행, 「88년 산업연관표 분석」

〈표 3〉 기계류 수입의존도

(단위 : %)

	88	89	90	91
전 체	35.8	31.5	32.3	34.8
일반기계	57.8	55.1	53.0	54.3
정밀기계	59.6	58.2	55.0	59.8
전기기계	34.2	30.3	31.2	33.7
금속기계	14.5	11.4	12.9	15.6

註 : 수입의존도 = 수입/내수

자료 : 기계공업진흥회

## 수입증가의 구조적 원인

수입은 기본적으로 소비·투자 등의 내수부문과 수출이라는 해외부문에 의해 유발된 輸入需要의 증감에 좌우되는 것이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의 성장이 해외부문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이른바 ‘3低好況期’를 거친 후 89년부터는 매년 두자리 수의 신장률을 보여왔던 수출이 한자리 수의 증가세로 둔화된 반면, 소비와 투자는 경제성장률을 초과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등 내수 주도에 의한 성장구조가 이루어졌다.

### 89년 이후 수입수요, 내수의 확대에 의해 주도

89년 이후의 수입수요는 해외부문이 아닌 국내의 消費·投資 즉 내수의 확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전까지는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던 국내생산능력이 이 기간중 오히려 한자리 수로 둔화되면서 결국은 국내의 공급능력이 수요의 증가를 뒤따라가지 못한 결과가 되고 수입은 더욱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 中間財의 불가피한 해외의존

국내의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부족으로 많은 중간재를 해외수입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수입을 증가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素材産業의 성장으로 수입 대체가 진전되고 총투입에 대한 수입 중간재의 투입비중이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20% 내외인데 이것은 일본의 4.8%와 비교해 보면 월등하게 높다.

### 자본재 산업의 미성숙

자본재 역시 위에서 살펴본 중간재와 비슷한 사정이다. 기계류의 국산화시책 추진으로 기계산업의 수입의존도는 낮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설비투자용 資本財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일반기계와 정밀기계 등의 수입의존도는 91년 현재 각각 54.3%, 59.8%로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투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자본재 수입 역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수입품의 가격경쟁력 향상과

### 수입자유화의 진전

국내의 도매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반면 수입물가는 연차적인

관세인하, 국제공산품 가격의 안정 등에 힘입어 90년부터 하락하고 있어 수입제품의 국산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공산품의 수입은 이미 완전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 들어서는 농수산물 수입자유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세율도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자유화의 진전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수입환경의 변화로 지난해에는 수입이 用途別·部門別로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살펴보겠다.

### 용도별 수입내역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입실적을 용

〈표 4〉 수입자유화율 및 평균관세율

(단위 : %)

	88	90	92	94
〈수입자유화율〉				
전 체	94.8	96.3	97.7	98.5
공 산 품	99.5	99.7	99.9	99.9
농수산물	71.9	80.4	87.2	92.1
〈평균관세율〉				
전 체	18.1	11.4	10.1	7.9
공 산 품	16.9	9.7	8.4	6.2
농수산물	25.2	19.9	18.5	16.6

자료 : 상공부 · 재무부

〈표 5〉 용도별 수입

(단위 : 억달러, %)

	90			91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698	13.6	100.0	815	16.7	100.0
원자재	376	14.3	53.9	433	15.1	53.2
자본재	255	13.9	36.5	302	18.4	37.0
소비재	67	9.0	9.6	80	19.4	9.8
수출용	226	0.2	32.3	247	9.4	30.3
내수용	473	21.4	67.7	569	20.2	69.7

자료 : 무역협회

**89년 이후의 수입수요는 해외부문이 아닌 내수의 확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이전까지는 두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던 국내생산능력이 한자리 수로 둔화되면서 수입은 더욱 크게 증가되었다.

도별로 보면 총수입의 53.2%를 차지하는 원자재가 석유류와 건설자재의 수입 증가에 힘입어 15.1% 증가했고, 기계·전자전기 등의 자본재는 설비투자의 호조에 따라 18.4% 증가세를 나타냈다. 소비재의 수입

은 19.4%나 증가하여 總輸入에 대한 비중이 90년 9.6%에서 91년에는 9.8%로 신장되었다.

또한 내수주도의 성장구조를 반영하여 수출용 수입은 9.4% 증가에, 그친 반면, 내수용 수입은 20.2%나 증가하는 등 前年에 이어 지속적인 급증세를 나타냈다.

### 부문별 수입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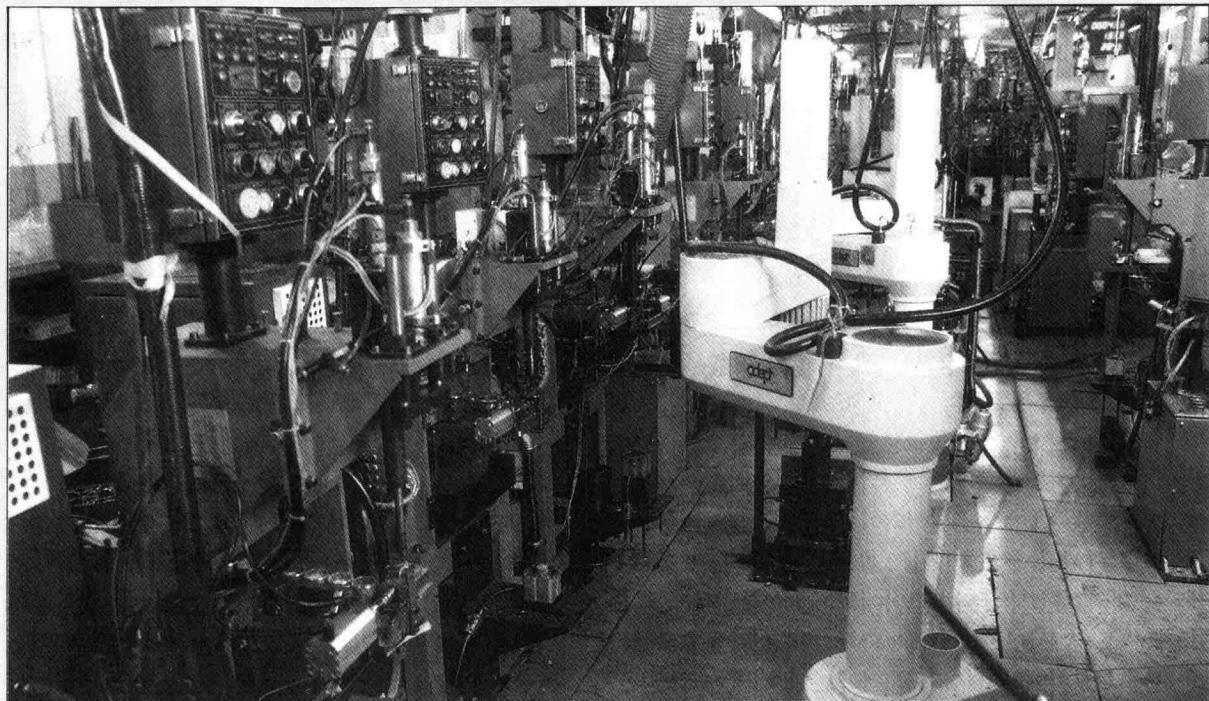
#### 에너지 품목

에너지소비는 경제의 성장과 함께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오던 중 급기야 89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게 되었고, 특히 석유소비는 89년 이후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득과 소비수준 향상으로 편리함과 깨끗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환경규제가 강화된 데 기인한다.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에너지 소비증가가 그대로 수입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한해의 에너지 수입은 127억달러로서 90년에 비해 16.1%나 신장하였는데, 이는 석유 소비증가와 함께 원유정제 능력이 확충(90년 84만B/D→91년 113만5천B/D)된 결과이다. 원유수입이 증가한 데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油類製品의 수입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 건설관련 품목

서민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건설투자 호조로 건설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건설과 관련된 기자재의 수입이 급증



하였다.

국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여 수요가 발생한 철근·시멘트·形鋼 등의 수입급증은 물론이고, 국내공급이 불가능한 목재류·석재류와 과소비에 편승한 고급벽지·바닥재 등의 수입도 크게 늘어나는 등 건설에 관련된 품목의 수입이 에너지 수입과 함께 전반적인 수입증가를 주도했다.

건설경기 과열이 균형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드러내자 정부는 불가피하게 건설경기 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품목의 수입증가율이 점차 둔화되었으며, 건설중장비의 경우에는 수입증가 추세가 반전되어 연간으로는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내게 되었다.

#### 기계류 및 전자전기류

기계류는 계속된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91년간 총 190억달러에 전년 대비 19.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은 원동기,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금속공작기계, 선거特需에 대비한 제지인쇄기계 등의 일반기계류 수입이 전체 기계류 수입을 주도해 나갔다. 항공운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규항로 개설, 노후기 교체 등을 위한 항공기와 부품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위와 같은 기계류에 대한 수요증가 외에도 시설재 수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외화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이(90년 58억3천만달러→91년 62억3천만달러) 기계류 수입을 촉진시킨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電子電氣類는 지난 한해 132억달러 수입에 16.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용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건설경기에 영향받은 발전기 등 전기기기의 수입이 이 부분의 수입을 주도해 나갔다.

#### 농림수산물

소득향상으로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식생활 문화도 더욱 고급화·다양화되었으며 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조제과실·과실쥬스 등 調製農産食品으로서 2년간 연속 45%의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국내공급에 애로가 있는 농수산물의 수입을 확대시킨 결과 쇠고기·참깨·분유 등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바나나 등 77개의 농수산 품목을 수입 자유화시켰고, 이들 품목의 수입도 자연히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 화공품·섬유류·기타 생활용품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석유화학공장 新增設이 대부분 지난해 완료되고 국내의 화공품 공급능력이 확충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공품의 지난해 수입실적은 6.8%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섬유류 중에서는 직물이 수출용 원자재로서 많이 들어왔고 섬유제품은 19.0%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공업제품인 생활용품류도 완구·가구·운동구·공예품 등을 중심으로 17.2%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 92년 1/4분기중 수입 동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수입증가세가 두드러져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국제수지 적자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에서는 건설경기진정, 총수요의 안정적 관리 등 수입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사회일각에서도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마인드 역시 예전 같지 않아 위축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수입선행 지표인 I/L(수입승인) 실적도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들이 반영된 결과 올해 1/4분기중 수입증가율은 6% 이내에 머물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수입수요의 안정으로 수입이 진정기미를 보

**국제수지적자 해결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를 앞질러 나가면서 확대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경쟁력과 해외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한 여건이므로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고 있으나, 석유소비의 지속적 증가·건설경기 과열의 잠재성·소비성향의 下方硬直性 등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내재되어 있어 앞으로의 수입이 계속 1/4분기와 같이 안정될 것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대응방안과 정책과제

국제수지적자 해결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은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를 앞질러 나가면서 확대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경쟁력과 해외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못한 여건이므로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인력부족·고임금·높은 불량률·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해외여건도 우리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현실이므로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수입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줄여 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입을 직접적·사전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수입수요를 안정시키는 원인적 관리방법과, 수입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절차적 관리방법이 유효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된다.

## 원인적 관리방법

적정한 성장률을 넘는 과도한 투자와 소비가 과도한 수입수요를 유발하므로 이들 수요증가 요인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키는 수요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이미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바, 우선 안정적 성장기조를 채택하여 경제성장목표를 91년의 8.6%에서 금년에는 7.0%로 하향 조정했고, 과열 양상을 보여왔던 건설경기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주택건설 물량을 지난해 60만호에서 50만호로 감축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왜곡요인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소비성 경상경비의 10% 절약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 10% 절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계류 수입을 유발시켰던 시설재 외화대출 규모도 91년의 55억 달러에서 금년에는 30억달러로 축소할 바 있다. 수입수요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 대책도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수입수요 안정대책 중 걱정이 되는 부문은 석유수입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석유소비자는 수요증가와 저유가에 힘입어 물량기준으로 매년 20% 수준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원유가 3억9,900만배럴(29.5% 증)에 78억2천만달러(21.3% 증) 어치가 수입되었고 금년에는 4억9,600만배럴(24.1% 증)에 91억7천만달러(17.3%) 어치가 수입될 전망이다.

다행히도 걸프전이 끝난 이후 국제 원유가격이 안정적 하향세에 있어 물량증가에서 오는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고는 있으나, 석유소비 급증은 그대로 수입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절약대책이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절차적 관리방법

다음은 절차적 관리방안으로서 GATT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천·허가·검사·형식승인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수입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수입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과 위생·환경·공중도덕·안전보장 등을 위해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보다 신중하고,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국제무역규범에서도 용인이 되는 절차적 수입 관리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GATT-/BOP조항 졸업으로 수량규제가 어려운 지금으로서는 수입에 대한 가장 유효한 관리수단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식품위생법, 공산품품질관리법 등 45개 개별 법

**GATT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천·허가·검사·형식승인 등의 방법으로 무분별한 수입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식품위생법, 공산품품질관리법 등 45개 개별 법률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률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곡물과 사료의 수입에 대해서는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수입량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물량을 추천하는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일본 등은 규격과 등급을 정하여 그 기준에 합당한 것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도 보다 상세한 규격을 제정하고 농약검사항목 등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민보건 향상과 수입의 효율적 관리란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지난해 7월에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제도를 더욱 보강·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이 제도는 선진각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 도입시기가 일천하여 제도나 운영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세분화, 원산지 결정 기준의 명료화 등을 통한 제도 보완

이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입이 실행된 이후에 그 수입으로 인하여 同種 국내산업에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 대처하는 사후적 구제방법인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 역시 지난 87년 상공부 무역위원회의 설립과 함께 처음 도입된 이래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지난 5년간 수입급증·덤핑수입·불공정수출입 등 각종 유형의 조사를 194건이나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피해조사기간이 다소 길어 즉각적인 대응과 구제조치가 어렵다는 점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동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해 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제도보완과 함께 對業界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조정관세·반덤핑관세·긴급관세·보복관세 등 탄력관세 제도의 적극적 활용 문제이다. 최근 표고버섯·PC 주기판 등 20개 수입급증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점은 탄력관세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활용의 주요한 예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수입정책 목적의 탄력관세제도 운용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국제수지가 어려울 때에 그것도 부존자원은 거의 없는 우리가 대외관계에서 균형살림을 꾸려 나가자면 위에 든 갖가지 제도적 대응방안의 활용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에 근검절약과 건전한 소비행태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



국제수지의 실상과 대책

# 對日貿易逆調 개선 가능한가

65년 韓·日 國交正常化 이후 우리의 對日 적자총액은 무려 663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의 對日貿易收支(통관기준) 추이를 보면 86~88년 동안에는 이른바 '3低現象' 중의 하나인 엔貨가치의 급격한 절상 효과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89년부터 다시 적자폭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91년에는 87억6천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현오석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장

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反轉되면서 赤字規模가 급격히 증대하자, 과거부터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잠재해 왔던 對日逆調 問題가 최근에 새롭게 다시 부각되고 있다.

對日逆調 문제는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合理性의 원칙이 지배하는 국가간의 雙務貿易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眼目에서 우리가 처한 제반여건을 잘 고려하여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對日赤字의 현황

65년 韓·日 國交正常化 이후 우리의 對日 적자총액은 무려 663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의 對日貿易收支(통관기준) 추이를 보면, 86~88년 동안에는 이른바 '3低現象' 중의 하나인 엔貨가치의 급격한 절상 효과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89년부터 다시 적자폭이 벌어지기 시작하여 91년에는 87억6천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91년에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782억달러에 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다른 나라들도 일본과의 쌍무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 일부 자원 보유국 이외에는 미국·EC 등의 선진국에서 개도국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단계에 있는 홍콩·싱가포르·대만 등도 여태까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해 왔다.

어찌보면 우리보다 적자규모가 더 큰 나라도 많기 때문에 심각성이 덜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자폭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그 원인도 구조적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對日赤字 문제에 대해서 日本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綜合的인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對日 무역수지가 굳이 균형이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對日赤字가 확대되는 것을 계속 방지해 둔다면 우리의 경제정책 운용상의 선택의 폭이 크게 제한되어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종속화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 중의 하나인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對日逆調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미국·프랑스를 위시한 다른 對日赤字國家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일본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보다 소비를 증대하여 교역상대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정치·외교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對日赤字의 원인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雙務貿易에서 무역수지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당사자들 간의 무역구조와 산업의 경쟁력 차이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韓·日間 부존자원의 차이에서 오는 補完性 거의 없어

첫째, 무역구조상 한·일 양국은 둘다 資源未保有國으로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품을 수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賦存資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補完性은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한 나라의 경쟁력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劣勢에 놓여 있을 경우, 그 나라는 일방적으로 적자를 감수해야만 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수준의 차이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은 일본에 비해서 대략 15년 정도가 뒤져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한·일간의

1인당 GNP 수준의 격차(한국 91년 1인당 GNP 6,498달러, 일본 77년 6,052달러)와 비슷한 기간이다.

또한 무역구조가 비슷하고 경쟁력이 뒤져 있더라도 다른 국가로의 輸入先 대체가 가능하다면 특정국가로부터의 대규모 적자는 피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와 일본간에는 지리적·문화적으로 近接性이 높은 데다가 우리가 주로 수입해야 하는 기계·부품·소재 등에 일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여타지역으로의 수입선 대체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日本市場의 각종 무역장벽으로

##### 우리 상품의 진출 어려워

둘째, 일본시장내에 각종 무역장벽이 존재하여 우리 상품의 일본시장진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도 對日逆調의 원인이 되고 있다.

먼저 관세장벽을 살펴보면, 일본의 평균적인 관세율은 2.6% 수준으로 미국·EC 등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의류·신발 등 일본내에서 斜陽化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15% 내외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섬유류·철강·1次 產品 등이 일본시장에 침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비관세 측면에서도 일본은 수입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한 제도와 절차를 지니고 있고, 유통시장도 생산업체에 의해 系列化되어 있으며 文化·慣行上으로도 특이한 요소가 많아 이 역시 우리에게 對日市場 진출의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표) 주요국의 對日赤字 추이(통관기준)

(단위: 억달러)

	86	87	88	89	90	91
한 국	54.4	52.2	39.3	39.9	59.4	87.6
미 국	550.3	563.3	517.9	490.9	411.1	434.4
대 만	37.0	48.6	60.5	69.7	76.6	96.9
싱가포르	31.5	41.6	62.3	67.8	76.5	90.0

자료: 일본경제기획청

## 우리의 수입유발적인 경제구조도 적자요인

셋째, 우리의 산업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공업화 전략이 우리의 산업구조를 중간재 산업의 발달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조립·가공형 구조로 진행시켜 輸入誘發的인 경제구조가 어느 정도 체질화되어 있는 데서 발생하는 적자요인도 있다.

가령, 동남아에 기계를 한 단위 수출하려면 국내공급기반이 취약한 기어나 베어링 등의 수입이 뒤따라야 하고, 그것은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강점이 많은 일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제3국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일본에 대한 역조는 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몇가지 근본적인 요인 외에도 최근에는 높은 임금상승, 사회간접자본 부족, 근로기강의 해이 등으로 우리의 대일수출 경쟁력은 중국·동남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內需가 과열되어 수입수요가 크게 증대함으로써 대일역조가 빠른 속도로 커지게 되었다.

## 對日逆調 개선의 방향 및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일역조의 원인은 구조적인 요소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포함한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기술도입증대, 설비투자의 확대 등

**對日逆調의 원인은 구조적인 요소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포함한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으로 對日 자본재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대일역조 개선대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작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도 결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대일역조 개선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향을 통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對日輸出 촉진과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개별적·단기적인 대책도 일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對日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對日 수출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일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및 일본 현지 유통망의 진출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對日 수입절감을 위해서는 대일역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계류 수입대체를 위하여 '제

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여 대일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계류 수입의 대체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당장 일본과는 경쟁이 어렵더라도 중국·동남아 등에 국산 기계를 수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대일수입의 면밀한 구조분석 등을 통해 不要不急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국제수지 개선차원에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내수 안정을 위한 총수요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금년들어 여타지역과 함께 대일 수입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안정화 시책과 더불어 對日逆調 개선을 위한 제반 시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향후 2~3년 동안에는 對日逆調의 絕對規模가 크게 줄지는 않더라도 일본과의 무역 중에서 적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逆調率이 91년 현재 26.0%에서, 96년경에는 12% 내외로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라경제



국제수지의 심상과 대책

# 외채문제 걱정없나

외채문제는 총외채보다는 순외채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며, 순외채의 경우에도 절대규모보다는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추어 본 상대적인 비중이 보다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순외채는 91년말 현재 125억달러로서 GNP의 4.5%이며, 이는 85년말의 39.6%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우석  
재무부 외환정책과장

지난해 경상수지가 8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外債가 다시 400억달러 수준에 이르게 되자 외채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난 3·24 총선과정에서는 외채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까지 등장하여 실제이상으로 과장되거나 증폭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국민들이 “과연 우리 경제가 최근 늘어나는 외채를 견디낼 능력이 있는 것인가”, “외채문제가 정말로 지난 85년의 경우와는 질적으로 달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불안과 걱정이 또다시 ‘外債亡國論’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채는 외국에 대한 빚이라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의 결과라는 생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그 실상을 보다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 최근의 외채동향

우리나라의 총외채는 91년말 현재 393억달러로서 외채문제가 가장 심각하였던 지난 85년말의 468억달러에 비하면 75억달러가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외환보유고 등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지고 있는 대외자산이 91년말 현재 268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므로,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는 125억달러로서 이것이 91년말 현재 우리가 외국에 지고 있는 순수한 빚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외채규모는 지난 85년의 355억달러보다는 230억달러가 대폭 감소한 수준이며, 87년말에 비하여도 99억달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소 증가하였다.

외채가 증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수지 적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게 되면 그 부족재원은 海外借入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대외자산을 처분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국제수지에서 적자가 나면 純外債는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현재의 외채수준에 대한 평가

일반적으로 외채를 평가할 때에는 ① 경제규모에 비추어 외채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② 원리금 상환능력은 있는가 ③ 도입한 외자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④ 국제금융시장에서 추가차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등의 네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경제규모에 비추어 본 외채수준

외채문제의 심각성 여부는 절대규모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경제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인 부담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 우선, 우리의 총외채는 91년말 현재 393억달러이나 GNP에 대한 비중은 14.0%로서, 지난 85년의 52.1%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총외채는 開放經濟하에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자원을 많이 활용하게 됨으로써 국제수지의 흑자 또는 적자에 관계없

외채문제의 심각성 여부는 절대규모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되며 경제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인 부담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의 총외채는 91년말 현재 393억달러이나 GNP에 대한 비중은 14.0%이다.

이 경제규모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미국의 경우 총외채가 2조달러나 되어 GNP의 40%나 되고, 일본의 경우도 1조5천억달러에 이르러 GNP의 50%를 넘고 있음을 보더라도 총외채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외채문제는 총외채보다는

〈표 1〉 최근의 외채 동향

	85말	87말	90말	91말 p
총 외 채	468	356	317	393
대외자산	112	132	268	268
순 외 채	355	224	49	125

자료 : 한국은행

〈표 2〉 최근 외채의 對 GNP 비율 추이

	85말	87말	90말	91말* p
총외채 / GNP	52.1	27.6	13.0	14.0
순외채 / GNP	39.6	17.4	2.0	4.5

註 : \* 91 GNP잠정치(2,808억달러)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표 3〉 주요 선진국의 총외채 현황

	미국(89말)	일본(90말)	서독(90말)	한국(91말)
총 외 채	20,763	15,298	7,397	393
대GNP비율	40	54	49	14

자료 : 재무부

純外債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며, 순외채의 경우에도 절대규모보다는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추어 본 상대적인 비중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순외채는 91년말 현재 125억달러로서 GNP의 4.5%이며, 이는 85년말의 39.6%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 원리금 상환능력

원리금 상환능력은 일반적으로 대외거래에서 벌어들인 경상외환수입(수출+무역외수입) 중에서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중, 즉 원리금상환부담률(DSR : Debt Service Ratio)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 지표는 최근 단기채무비중이 높아져 종래 중장기채무 위주의 외채 구조하에서보다는 설명력이

(단위 : 억달러)

(단위 : %)

(단위 : 억달러, %)



다소 낮아졌으나, 아직까지는 국제적으로 자본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91년중 원리금상환부담률은 5.8%로 추정되는데, 이는 90년의 9.4%, 85년의 21.7%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 도입외자의 용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입한 외자를 생산적인 부문에 잘 활용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범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민간부문에서 5억달러, 금융기관에서 70억달러 남짓한 외자를 도입하였다.

이들 도입외자의 용도를 보면 민간부문의 5억달러는 중장기 무역신

용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이며, 이는 외화획득용 시설재·중공업기

〈표 4〉 원리금 상환 부담률 추이

(단위 : %)

	85년	87년	90년	91년 e
원리금상환부담률	21.7	30.8	9.4	5.8

자료 : 한국은행

〈표 5〉 세계은행의 외채평가기준

(단위 : %)

	중채무국 <sup>1)</sup>	경채무국 <sup>2)</sup>	외채문제 <sup>3)</sup> 없는 국가	우리나라 (91추정)
총외채 / GNP	50 이상	30~ 50	30 미만	14.0
총외채 / 경상수입	275 이상	165~275	165 미만	46.2
원리금상환/경상수입	30 이상	18~ 30	18 미만	5.8
이자 / 경상수입	20 이상	12~ 20	12 미만	2.9

註 : 네가지 기준 중 세가지에 해당 여부에 따라 분류

1)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폴란드·베네주엘라 등

2) 요르단·터어키·우루과이·스리랑카·필리핀 등

3) 이스라엘·싱가포르·말레이시아·포르투갈 등

자료 : World Bank, 「World dept tables」, 1991

자재 등 주요 물자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서 設備投資에 대부분 소요되었다.

금융기관의 경우도 시설재수입을 위한 외화대출에 55억달러, 기타 차입금 상환, 수입결제자금 등에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채증가는 주로 산업활동과 관련되는 생산적 부문에 쓰여진 것이어서 앞으로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문제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차입여건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과 對外信認度 향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면, 외환은행은 지난 2월 홍콩시장에서 지난해의 차입금리(Libor+0.5%)보다 더 좋은 조건(Libor+0.4%)으로 1억달러를 차입한 바 있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우리 경제의 능력과 對外신용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 현재의 외채수준,

#### 크게 문제시될 만한 부분 없어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외채수준은 크게 문제시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은행의 외채평가 기준에 의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외채문제가 없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외채는 國際收支가 적자를 보이는 한 계속 늘어

**외채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급선무이며,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조업경쟁력 강화 및  
국제수지 개선대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이 곧 외채관리의  
기본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의 외채사정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국제수지 赤字狀況이 계속될 경우에는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수지 및 외채추이에 대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 앞으로의 외채관리 정책방향

결국 외채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수지의 구조적 개선이 급선무이며,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조업경쟁력 강화 및 국제수지 개선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곧 외채관리의 기본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경제의 규모증대와 개방화 진전에 따라 국제수지와는 관계없이 對外資産과 總外債가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 외채규모에 대해서는 순외채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외채에 대해서는 그 규모 자체보다는 도입 외자의 효율적인 활용·유리한 차입 조건·건전한 구조 등의 관점에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92년도 외자조달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시 개방에 따라 유입되는 비외채성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그동안 금융기관에만 허용해 왔던 外國債券(Foreign Bond) 발행을 민간에게도 허용하는 등 외자조달 수단을 다양화하여 차입주체들이 가장 유리한 차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채문제는 경제활동의 종합적인 결과로서, 단순한 정부의 외채관리정책만을 가지고는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가계는 건전한 소비와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통하여 저축을 늘려나가고, 기업은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등 모든 經濟主體들이 합심노력하여 국제수지를 흑자상태로 전환시킬 때에만 채권국으로의 꿈을 실현시킬 수 될 것이다. 나라경제

# 日本엔과 韓國經濟



오오츠카 마사노부  
(大塚正修)  
日本 노무리연구소  
아시아調查部長



관지웅(關志雄)  
日本 노무리연구소  
아시아調查部 거시경제담당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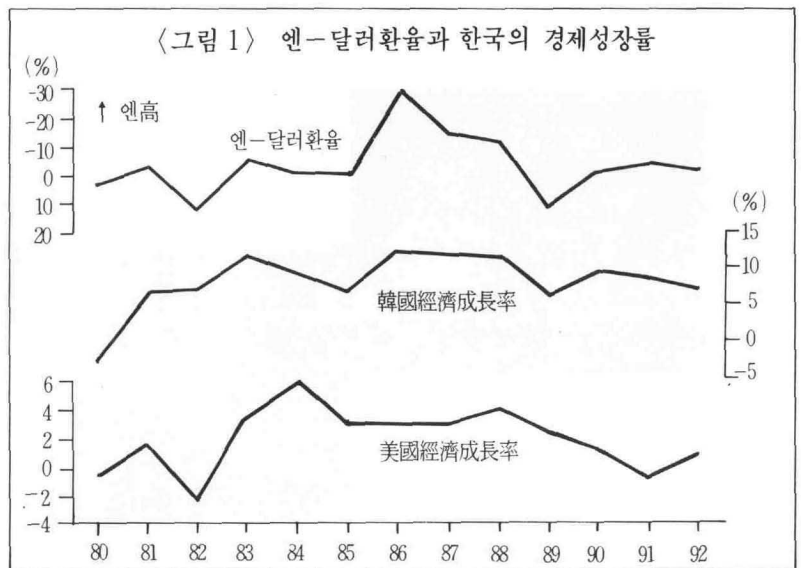
중 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높은  
對美 수출의존도 때문에 미국  
경제와 깊은 연관을 맺어 왔다. 그  
러나 80年代에 들어와서 이러한 경  
향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85년  
의 플라자協定 이후 '엔'과 '원'의  
연속적인 切上을 배경으로 여기에  
수출시장 多邊化에도 힘입어 이제는  
환율,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동이  
美國의 성장률 대신 한국의 景氣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  
와 같은 와중에 대미무역마찰의 계  
기가 됐던 대미무역흑자는 해소되었  
지만, 對日赤字가 확대되고 있어

韓·日 경제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엔'의 환율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의 巨視經濟成果와 韓·日경제  
관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엔-달러환율과 韓國의 景氣변동

韓國經濟는 엔-달러환율의 변동  
에 크게 영향받도록 되어 있다. 한  
국의 성장률은 엔高가 되면 상승하  
고, 거꾸로 엔低(円安)가 되면 낮아  
지는 경향을 과거 10년간 반복하고  
있다(〈그림 1〉 참조).

80년대 초반의 경기침체는 高달



러, 즉 엔低에 의해 야기되었던 것이다. 환율시장의 여건이 급變한 86~88년에는 엔의 급격한 상승이 한국경제에 靑(好景氣)을 가져왔다. 그리고 89년의 경기감속은 엔低와 동시에 진행되었고, 90년에서 91년까지의 경기회복은 엔의 反騰(회복)과 함께 同行하고 있다.

엔-달러환율 변동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면 交易條件(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비율)을 통한 역할이 크다. 수출의 상품별 구성을 보면, 한국은 日本과 競合의 인 측면이 강하여 엔-달러환율의 변동은 韓國의 수출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시장에 있어서 일본은 어느 정도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즉 price leader) 데 반하여, 한국은 결정된 가격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될 印裝(price follower)에 있는 경향이 강하다. 엔高가 日本의 수출가격(달러표시)을 높이기 됨으로써 한국의 수출가격 인상도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일본의 수출가격의 상승은 한국의 수입가격도 인상시키지만 수출가격에의 영향은 대부분 品目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수입가격에의 영향은 對日 수입부분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엔高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交易조건을 개선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엔-달러환율에 덧붙여 석유가격도 한국의 交易조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80년에 기록했던 負의 성장은 석유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交易조건의 악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같은 加工型 개방경제의 경우 交易조건의 악화는 공급측면에

서 성장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에 있어서도 수입가격은 投入中間財 가격이 되고 수출가격은 產出價格이 되고 있어 交易조건은 기업의 수익과 생산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交易조건의 개선은 기업의 윤의 증가와 수출과 생산량의 증대로 이어지는 반면, 交易조건의 악화는 이윤을 억제하고 생산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작용으로 엔高는 한국의 성장을 끌어올리고 엔低는 交易조건을 악화시켜 성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엔-달러환율변동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過程으로서 交易條件外에 수출경쟁력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엔高에 의해 일본의 수출가격이 상승할 때 한국기업이 자신의 수출가격의 상승률을 일본보다 적게 한다면, 세계시장에 있어서 한국제품은 일본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되어 한국의 수출이 증대될 것이다. 반대로 엔低 때에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어 수출은 감소되기 마련이다.

위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추계해 본 바에 의하면 1%의 엔高는 한국의 성장률을 0.14% 올리는 효과가 있다. 91년 엔은 달러에 대하여 약 7% 상승하였고, 이것이 한국의 성장률을 1% 정도는 올렸다고 보여진다. 한편 금년에는 엔-달러환율이 작년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플러스효과가 없어졌으므로 엔-달러 환율변동 요인만으로도 한국의 금년도 성장률은 작년과 비교하여 1%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엔 페깅과 경제안정

한국은 지금까지 對달러 환율에 중점을 두고 外환정책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무역상대국의 지역별 구성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세계적인 환율조정에 의한 경기변동을 경험한 바도 있어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완만하나마 對달러 페깅(pegging) 위주의 外환정책을 수정하여 다른 통화 특히, 日本엔에 중점을 두는 환율조정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국의 통화당국은 이와 같은 환율조정을 통하여 엔-달러환율의 변동이 가져오는 生産에의 振幅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 원의 對달러 切上은 원표시의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반면, 달러표시의 가격을 상승시키기도 한다. 前者는 이윤을 압박시켜 生産을 감소시키는 요인(공급측면 요인)이 되는 한편, 後者는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수요 요인). 반대로 엔低의 경우, 원의 切下는 성장률 저하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

적정한 통화 바스켓에 페깅을 하게 되면 生産의 안정화가 자동적으로 달성 가능하다. 그 경우 자국통화를 페깅하는 대상화폐는 경쟁상대국 통화의 비중을 크게 하고, 주요 供給國 통화의 비중은 작게 하든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게 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수출구조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對엔 페깅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推計에 의하면 정책목표가 광공업생산의 안정일 경우, 한국의 최

적통화 바스켓에 있어서 엔의 비중은 75%까지 되고 그밖에 달러는 33%, 석유가격은 -8%가 된다.

### 韓·日經濟의 상호의존

한국과 日本의 무역관계는 競合性과 補完性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양국의 수출은 품목별 구조가 비슷하여 세계시장에서 競合關係에 있다. 이것은 한국의 景氣가 엔-달러 환율에 영향받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수입과 日本의 수출이 補完性이 높은 반면, 일본의 수입과 한국의 수출에는 보완성이 낮아 바로 이 非對稱性이 韓·日 무역관계에 있어서 한국측의 赤字로 나타나고 있다.

日本의 對韓수출은 한국의 전체수출과 엔-달러 환율변동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엔-달러 환율과 한국 景氣와의 관계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엔고는 한국의 생산과 수출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所得效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국의 對日수입을 유발한다. 엔고의 가격효과는 對韓수출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으나, 對韓수출품의 내용 중 한국국내 代替가 어려운 資本財와 中間財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효과는 아주 작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효과와 가격효과를 종합해 볼 때, 엔고는 對韓수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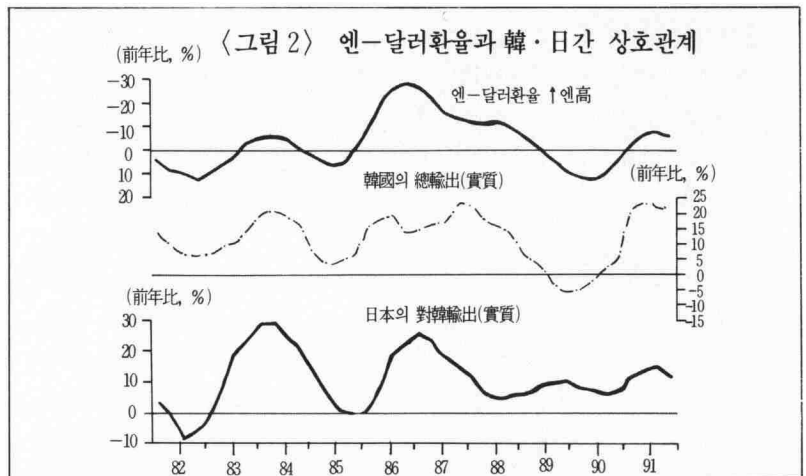
한국과 대조적으로 歐·美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 엔-달러 환율이 변동하여도 생산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반면 對日수입의 가격탄력성이 비교적 높아

엔고가 되면 가격효과가 對日수입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본의 對歐·對美 수출은 둔화된다.

이와 같은 對韓國과 對韓國 이외의 지역에 수출에 있어서 非對稱性 때문에 日本의 對韓依存度는 엔고가 되면 높아지는 반면, 엔고가 되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日本경제에 있어서 對韓수출은 환율변동의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자동안정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韓·日간의 競合性과 補完性이 한국의 price follower로서, 또 자본재·중간재의 一方的 수입국으로서의 위치를 고정화시키고 있다. 이 관계가 日本企業의 다국적기업 행동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70년대 이후, 많은 日本企業이 한국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日本기업은 ASEAN에 진출한 기업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製品內分業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칼라TV 같은 분야에서는 日本수준을 능가하는 최신공장을 移轉하고도 있기 때문이다.

작년 韓·日間 무역불균형은 한국

의 88억달러 赤字(한국의 세관 統計)를 기록, 사상최고의 수준에 달하였다. 여기서 한국의 對日赤字가 金額베이스로는 中長期的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무역량의 증가를 고려한 兩國間의 수출입 비율로 보면 오히려 개선되는 경향도 있다고 본다. 한국의 對日수출과 對日수입의 비율은 엔고때 低下하고 거꾸로 엔저 때 上昇하는 循環을 보이고 있지만, 60년대의 20% 전후에서 70년대에는 50~60%,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한때 70% 수준까지 이르렀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新規投資로서 생산부문에 投入되어 다음 단계에는 對日수출증가를 가져오는 경로를 통하여 對日依存을 점차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로를 加速化시키기 위해서는 日本은 한국에 대하여 적극적 기술 이전과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은 知的所有權의 보호 등 투자환경의 정비와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部品 등 中間財 부분의 육성에 가일층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나라경제



# 실효성 거두려면 제도상 미비점 보완해야



**이해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부장

중소기업은 근로환경·근로조건 등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활용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 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의 關鍵은 우리 경제에 있어 기업체수·고용량·부가가치 등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동화·합리화·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해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원활히 대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자금·인력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나,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으로 생산활동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술개발을 위한 여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중소제조업 기술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91년도 6월말 현재 생산관련자는 36만5천명이 부족(부족률: 25.6%)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생산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초급기능인력(기능사보·고졸자로 동일직무 경력 4년 미만자·중졸 이하

자)은 27만1천명(부족률: 26.2%)으로 89년 6월말 현재 13만4천명(부족률: 15.9%)에 비해 배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체 인력난 심각

이와 같이 매년 심화되는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동대책 중에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91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부족 문제를 짧은 기간 안에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보여 중소기업계에서는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근로환경·근로조건 등이 대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쁠 뿐만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활용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병역특례제도의 활용절차는 특례업체의 지정, 기술·기능자격소지자로서 특례보충역 편입 희망자의 채용, 특례보충역 편입(자격미소지자의 경우 직업훈련 실시후 자격취

득이 필요) 등으로서 겉으로 보기에  
는 간단하다. 그러나 그 절차를 거  
치는 과정에서 기업과 해당인력에  
요구되는 조건 등이 까다로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병역특례제도와 관련하여 특례업  
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애로  
점을 아래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히 마  
련되기를 기대한다.

### 특례보충역자의 의무복무기간 너무 길어

첫째, 특례보충역자의 의무복무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너무 길  
다는 점이다.

현재 군복무기간이 현역병의 경우  
27개월 정도이며 방위병의 경우는  
18개월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너무  
장기간이라 대상자들이 특례보충역  
편입을 기피하고 있다.

둘째, 특례보충역 편입 희망자가  
기술·기능자격의 취득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특례제도는 '병역의무의 특  
례규제에 관한 법률'상 기능요원에  
대한 특례제도로써 자격을 갖춘 기  
능요원이 아니면 특례보충역 편입이  
불가능하다. 특례업체들이 배정받  
은 특례대상 인력은 대부분이 방위  
병 징집대상자로 이 중에는 기능요  
원이 아닌 자가 많다. 따라서 이들

이 특례보충역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는 특례업체에 취업하여 1년 이내  
(직업훈련 개시일로부터)에 기술자  
격을 취득하여야 하나 대상자들이  
기능자격을 취득치 못할 경우 받을  
불이익(현역징집 및 복무기간 불인  
정) 때문에 특례업체 취업을 꺼리고  
있다.

###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어려움 많아

셋째,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직  
업훈련을 실시하는 데 따르는 어려  
움이다.

직업훈련은 직업훈련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내훈련(종업원 150인  
이상 업체)·임의훈련(종업원 150  
인 미만 업체)·위탁훈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훈련(사업  
내·임의)인 경우는 자격을 갖춘 직  
업훈련교사를 확보하고 일정의 직업  
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갖  
추기가 어렵고, 위탁훈련을 실시하  
려 해도 마땅한 위탁교육기관이 없  
어 직업훈련 실시가 어렵다. 이에  
따라 특례업체들은 기능자격증 소지  
자 채용을 원하고 있으나 대상자들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기술·기능자격 취득기회 미흡

넷째, 자격증미소지 특례보충역  
편입 희망자들에 대한 기술·기능자

격 취득 기회제공이 미흡하다는 점  
이다.

특례보충역 편입을 희망하는자들  
이 직업훈련을 거쳐 자격취득에 필  
요한 檢定에 응하고자 하여도 국가  
가 시행하고 있는 검정시행계획상  
계획이 없거나 시행회수가 제한되어  
특례업체들이 자격증 미소지자의 채  
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력  
별 기능자격의 제한으로 고학력자는  
자격취득이 쉬운 등급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어 대상자가 있다 해도  
채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섯째, 특례보충역 편입자에 대  
한 국가기술자격법 규정에 의한 기  
술·기능자격 종목에 부합되는 직무  
의 제한으로 활동이 곤란하다는 점  
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품생산에 있  
어서 1인이 다종의 직무를 수행하거  
나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기능이 국  
가기술자격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기  
능종목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  
고, 생산되는 제품이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일정기능자의 일  
정직무 수행이 곤란하여 특례업체들  
은 직무에 맞는 기능인력 확보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 役種 구분에 의한 인원 배정으로 활용에 제한받아

여섯째, 특례보충역 편입대상자  
의 役種(현역·방위) 구분에 의한

특례보충역자의 의무복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 현역병의 경우나 방위병의 경우에 비해 너무 장기간이라 대상자들이 특례보충역 편입을 기피하고 있다.

인원배정과 활용제한으로 필요인력의 활용이 어렵다.

현역징집대상자의 경우는 일정업종에 일정 기능자격자를 활용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방위병 징집대상자의 경우는 직업훈련의 제한(채용후 1월 이내 실시)으로 기존근무자 중 병역의무자가 있어도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정인원의 役種 제한으로 필요한 인력의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어, 특례업체의 인력감소 현상을 빚고 있다.

관련정보 부족으로 대상인력 확보 어려워

일급제, 특례보충역 편입 희망자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대상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현재 특례업체들은 배정받은 인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알선을 요청하거나 구인공고·사원모집공고 등으로 대상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덟째, 사후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특례업체의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처리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병역특례제도와 관련된 기관은 병무관계의 병무청, 직업훈련관련의 노동부, 특례업체 추천 및 홍보·지도의 상공부, 그리고 협력기관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상공회

의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 어느 곳에서도 특례업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특례업체 또는 특례보충역 편입 희망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활용대상업체 제한으로 수혜폭 좁아

아홉째, 병역특례제도 활용대상업체를 제한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후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法人만을 병역특례 선정 대상업체로 인정하고 있어 개인업체들은 활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에서도 일부 공업분야만 인정하고 타제조업은 제외시키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정책 수혜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도의 조기정착 위해 보완방안 마련



서만식  
노동부 훈련기획과장

군 보충역자원 산업체 활용방안은 앞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인바,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군 보충역자원 산업체 활용대책은 산업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하나이다. 생산현장에서는 기업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군 보충역 자원은 취업을 원해도 병역의무로 인하여 1년 이상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공부·노동부·병무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91년 9월 11일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도시행에 필요한 관계부처의 제규정을 정비하여 91년 11월 18일부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금년말까지 특례업체 3,771개소에서 현역 및 방위병 임명대상자 3만7,420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여가 지난 지금 특례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군 보충역자원의 산업체 활용제도는 산업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 등 최근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가 국민일반의 병역의무와 관련된 극히 제한적인 사업으로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다른 일반적인 사업과 동일시하거나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특혜조치에 대한 전면확대 문제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도시행 초기연도인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각자의 입장에서 약간의 불편한 점들을 감수하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빠른 시간내에 활성화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 당사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도전반에 관한 안내문을 신문에 공고하고, 관계부처별로 실무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

를 실시하는 한편, 특례업체를 소집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군 보충역자원 개인별로도 제도안내서한 발송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특례업체 채용실적 등이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이것은 제도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부 애로사항에 대한 경험부족 등에 따라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노사단체·특례업체·현역 및 방위병 입영대상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특례업체 의무복무기간은 특례업체의 규모, 현역과 방위병의 근무 형태상 차이점, 특히 방위병 근무기간인 1년 6개월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 5년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자들이 기피하고 있어 誘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특례업체는 대부분이 영세중·소규모 업체로 직업훈련실시 경험에 전혀 없어 직업훈련이 필요없는 국가기술자격소지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현역 및 방위병 입영대상자는 중·소규모업체를 기피하고 대기업체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기능습득훈련을 직업훈련 이외의 다

른 방법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융통성 부여가 필요하고, 일정기간 직업훈련과정 이수시 그 수준을 인정하거나 기술자격검정 없이 바로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특례업체에서 필요한 인력 중에는 국가기술자격이 필요치 않는 단순노무인력이 대부분이므로 국가기술자격소지 의무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업종 등을 고려,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조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특례업체의 생산공정과 특례업체에 종사할 분야와 연계된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훈련분야와의 관계설정이 곤란하므로 개별사업체의 생산공정별로 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술자격과 연계된 학력기준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섯째, 방위소집 기일연장 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 政府, 개선방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위와 같은 문제점을 모두 수용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기에는 제도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병역의무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 특혜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모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특례업체 실정을 감안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되, 인식부족에 따른 문제는 제도도입 취지나 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관점하에 정부에서는 지난 3월 9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력수급의 원활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을 추진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업체 의무복무기간을 중소기업체인 경우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둘째, 특례보충역 편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학력제한을 완화하여 학력에 관계없이 기능사보 이상 자격취득시 편입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셋째, 국가기술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도 특례업체 의무복무기간중에 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특례보충역으로 편입가능토록 조치한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종목당 평균 3회 정도

이나, 수시검정을 연 4~5회 추가하여 연간 7~8회로 확대한다. 검정장소도 수검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수검인원이 종목당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요

구시 시행가능토록 조치한다.

다섯째, 현역입영 대상자의 특례보충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특례보충역 편입원 출원기간, 의무적 소지

대상 국가기술자격종목 및 취득시기 등을 방위병입영 대상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군 보충역자원 산업체 활용방안은 앞으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인바,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과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중에 근거법령인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례업체는 물론이거니와 현역 및 방위병 입영대상자들은 이 제도가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특별히 부여된 특혜조치임을 감안, 적극 활용·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다면 인력수급의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표 1〉 특례업체 선정 및 채용상한인원 배정현황

(단위 : 개소, 명)

	계	산 업 체			연구기관
		소 계	기 간	범 위	
특 례 업 체	3,771	3,152	3,043	109	619
상 한 인 원	37,420	35,000	33,350	1,650	2,420
현역입영대상	7,420	5,000	4,340	660	2,420
방위소집대상	30,000	30,000	29,010	990	

〈표 2〉 직업훈련개요

	내 용
훈련대상	특례업체에 채용된 방위병 입영대상자 중 무기능자
훈련인원	특례업체별 채용상한인원 범위내
훈련주체	특례업체의 장
훈련방법	사업내직업훈련 (특례업체 규모로 보아 대부분 임의직업훈련, 현장훈련 위주)
훈련기간	3월 이상 1년 이내(기본 : 6월 이상)
훈련시기	고용근로자 신분확보 이후 1월 이내 실시
훈련실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사업내 직업훈련계획을 승인받은 후 실시

〈표 3〉 국가기술자격종목

(단위 : 종)

현역입영대상자	방위병 입영대상자		
	계	기술계	기능계
90	682	269	413

〈표 4〉 학력제한 규정

자격등급	기술계		기능계		
	기사 1급	기사 2급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
학력기준	대학(원) 졸업 이하 者		전문대학졸업 이하 者		고졸 이하 者

# 우리 경제의 현황과 중소기업의 역할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本誌에서는 지난 4월 10일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연설한 '우리 경제의 현황과 중소기업의 역할'을 紙上中繼한다.  
(편집자 주)

오늘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박상규 회장님, 그리고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시는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우리 경제의 현황과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지난 4년간의 경제실적

무릇 경제현상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만 보려는 경향 때문에 과거의 실적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평가할 때는 단면보다는 흐름과 추세로, 부분보다는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만의 시각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4년간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커다란 전환을 이룩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우선, 지난 4년간은 우리 경제가 先發開途國의 일원에서 명실상부한 중진국으로서 선진국 진입의 초기단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지표로 말씀드리면, 국민총생산 규모가 87년 1,300

억달러에서 작년에는 호주와 맞먹는 2,800억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GNP도 87년에는 3천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선진국 진입의 초기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6천달러대로 倍加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수준이 2배로 향상되었음을 뜻합니다.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경제의 개방화·국제화를 추진하였고, 또한 북방외교를 통하여 구소련·중국·동구와 새로운 교류협력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함께 통일기반의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연평균 9%가 넘는 높은 성장으로 지난해 실업률이 2.3%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완전고용상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인력부족이 기업경영의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부딪치게 되는 노사문제도 비록 과도기적 진통은 겪었지만 노사간 성숙된 자각과 勞使自律에 바탕을 둔 제도발전을 통해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맞아 억눌렸던 육구의 분출을 높은 임금상승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도, 비록 그것이 현시점에서는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높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높은 임금상승과 근로자수의 증가로 被傭者 보수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 분배율도

80년대 전반의 50%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선진국 수준에 가까운 60%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셋째, 국민생활과 복지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주택의 경우 81~87년간 주택건설이 연평균 22만호에 불과하였으나 88년부터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연간 53만호로 크게 확대됨으로써 주택보급률이 87년 69%에서 금년에는 76%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택건설 확대에 수급불균형에 따른 아파트 가격상승이 지난해 봄부터 멈추게 되었고, 그 이후는 떨어지고 있으며, 향후 2~3년간은 하락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89년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함으로써 87년 61% 수준이었던 의료보장수혜율이 100%에 도달하게 되어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의 수혜를 받게 되었으며, 의료보험과 함께 국민연금·최저임금제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갖추었으며 앞으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선진 사회복지제도를 모두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에 도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토지공개념제도 도입 등 각종 부동산투기 억제시책,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 왔으며, 장애인·노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과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 각종 지원시책을 확충하고 제도적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42조 원을 농어촌에 집중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난 4년간은 급속한 여건변화 속에서 개발연대를 마무리하고 선진화연대의 초석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과거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경제적으로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자율로, 국제적으로는 개방화라는 커다란 여건변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민주화·자율화·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력의 틀', '민주화의 틀', '국민복지의 틀'이라는 경제사회 선진화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른 것도 사실입니다. 소득이 5천달러대를 넘어서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경험했지만 소비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완전고용상태로 임금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국민복지의 확충은 한편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화·자율화 과정에서 사회전반적으로 경제하려는 의지가 감퇴된 것도 사실입니다.

90년 이후 물가와 국제수지가 불안해진 것도 결국은 이와 같이 소득이 높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물가와 국제수지불안이 높은 내수증가의 여파라는 인식하에서 성장속도를 낮추어 내수진정을 통해 수입수요와 물가에 대한 압력을 줄이면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활력 회복에 온 힘을 쏟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은 수출증대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이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物價와 國際收支상의 어려움이 남아 있으나 흐름과 추세로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물가와 국제수지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 기울여 온 산업경쟁력 강화노력의 효과도 수출증대를 통해 점차 可視化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안정화와 활력회복을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게 되면 물가는 금년에 안정궤도에 진입하여 내년도에는 안정기조가 정착될 것이고, 국제수지는 금년에 개선방향에 진입하여 향후 2~3년내에는 균형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物價-賃金-金利-地價 安定의 선순환구조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역할

90년대는 선진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한 전환기이기 때문에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과 조류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운용은 우리 경제가 성숙된 경제가 아닌

‘成長經濟’이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매크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틀 안에서 ‘마이크로’정책도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정책은 정부의 개입과 간여의 확대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간의 이해와 협조의 바탕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웃 일본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조립산업 위주에서 부품소재산업 중심으로, 우회생산의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발전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중소기업정책의 중점

우리 산업도 이제 대기업·중소기업간 분업관계가 수직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중소기업 중 受給企業의 비율이 80년 30% 수준에서 최근에는 60%를 상회하여 일본의 7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고 있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가 확대되고 품질검사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탁월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협상에 있어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도 과거의 單品發注 위주에서 일괄발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이 이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이 초미의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공존공영의 보완적 협력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이 영역보호 내지 대기업·중소기업간 정부지원을 둘러싼 배분문제에 치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양자간 기술·인력·자본의 협력관계가 심화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쟁전략이 품질우위 전략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기술분업에 적극 참여해 나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기

업정책은 구조개선을 위한 기술력향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력향상

먼저 향후 중소기업정책은 과거와 같은 영역보호가 아니라 경쟁촉진과 기술력 향상에 최우선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전국적 지도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경영지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연연구기관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기술지도를 전국적으로 분포된 공공시험연구기관에서 주로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인력·자금의 협력 계열화 관계의 심화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기술지도·자본참여·계약 베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 지도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확대(현행 10%)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기계류 국산화계획에 있어서도 개발되는 제품의 수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공동개발 전문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자금 및 기술지도를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도 이제는 기술개발의 시차단축과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강화로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부터 要素技術別로 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에 있어서도 외국기업과의 분야별 제휴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개발이 성공하

려면 중소기업 스스로의 연구기반 확충 등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그 한 예로서 선진국의 기술자를 보다 더 많이 채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아직도 많은 미국의 퇴직기술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최근의 중소기업 부도율 증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정부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생산자동화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限時法인 구조조정법을 연장하고 구조조정기금의 조성규모를 92년 1조원 목표 달성 이후에도 매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지난해 11월 중소기업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종전의 달러당 600원에서 65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무역금융에 한해서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제3차 담보제한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를 금년에 2조원 추가 확대하고, 이밖에도 상업어음 再割期限 연장, 의무대출비율 상향조정, 그리고 국산기계 구입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확대를 통하여 자금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속성장을 통한 구조조정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면 우리 경제는 몇년 안으로 지금까지의 자금부족 상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업이 팽창적 투자패턴을 합리화투자자로 전환해 나감으로써 자금수요와 借入依存度를 낮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나, 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저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투자패턴이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80년대 들어 자금수급에 여유가 발생하고 금융비용도 크게 낮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계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조립산업 위주에서 부품소재산업 중심으로, 우회생산의 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발전에 있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쟁력 강화 위해 최대한 노력

감속성장은 금년 한해에 그치는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고, 앞으로 몇년 동안 추진해 나가야 할 장기적 과제입니다. 이제는 기업도 외형성장 위주에서 효율중심·인간중시의 시각으로 전환되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이 길만이 국제경쟁을 뚫고 경제의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조정기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부채가 많은 기업, 경쟁력약화로 시장상황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래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기반이 되는 설비투자가 최근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극복해 나가야 치열한 경쟁하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쟁력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과 분야에 대해서는 玉石을 가려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지만, 중소기업도 경쟁을 통해서 활력을 회복해 나가도록 스스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리

## 기술선진국論



이종원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얼** 마전 중국의 과학기술위원회와 기술협력을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밑에 중국과학원과 각 省, 都市 및 縣에까지 산하조직을 둔 막강한 기관이다. 옛날 만리장성을 쌓던 때와 같이 전국의 과학기술자를 동원하여 기술의 만리장성을 쌓고 있는 느낌이었다.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끝난 후 선진국들은 기술의 블록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술의 기득권을 가진 선진국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간 기술동맹을 형성하면서 그들을 추적하는 기술후발국에 대해서는 知的保護, 시장 및 기술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美國·日本·中國 및 CIS 등 선진국의 기술 만리장성에 둘러싸여 있어 어려움이 더하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기술장벽을 뛰어넘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옛날 정치적 예측의 수모를 겪었던 것처럼 경제와 기술의 예측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이제 생존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연말 기술개발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한정된 人的·物的資源을 고려하여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집중적인 지원을 하면 2000년대에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14개 프로젝트에 승부를 걸고자 하는 것이다.

G7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범부처적으로 세부사항이 기획·추진되고 있다. 전기가동차는 상공부에서, 광대역통신망은 체신부에서 주관하여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최종 제품생산단계까지 기술개발, 시장전략 및 정부지원시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면밀히 계획되어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범부처적 대형기술개발 프로젝트이다. 외국의 대형 프로젝트에 비하면 규모나 자금면에서 뒤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해낼 능력이 있을까, 선진국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 태도와 내가 관련된 프로젝트는 나 혼자 해야겠다는 기술이기주의의 태도는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술의 속성이 그렇듯이 G7 프로젝트도 바로 우리의 여건에 적용하여 이를 體化하고 극복할 때 세계 제일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복잡한 교통현실에 적합한 전기가동차라면 세계 어느 것보다 우수할 것이며, 우리의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개발된 新醫藥은 우리만의 유일한 제품이 될 것이다.

技術先進國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그것이 4대 열강으로 둘러싸인 우리로서는 생존의 차원에서 가야만 할 숙명의 길이다. 이것은 물론 몇개의 기술개발만으로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위스나 스웨덴처럼 우리만의 전략기술을 보유할 때 선진국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고 동등한 입장에서 기술협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몇세기에 걸쳐 만리장성을 쌓아 올린 중국인들의 인내와 성실성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나라경제

## 眞實과 사랑의 리듬



노장우  
상공부 통상협력국장

부드럽고 은은하고 아름다운 봄 기운이 활짝 날개를 펴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찾아들고 있다. 그래서 4월은 아늑하고 다정한 계절인가 보다.

얼마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유관기관 및 업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에 관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종합보고하는 會議가 있었다. 아침 일찍 중앙박물관에 도착하여 박물관 동측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시킨 후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이용하여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날따라 과천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C선배 따님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바쁜 마음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으므로 나는 곧장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를 찾아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꽂아 보았다. 웬일인지 열쇠가 2~3mm 밖에 들어가지 않고 거부한다. 열쇠구멍이 고장인가 하고 생각되어 이번에는 우측 문으로 가서 다시 열쇠를 꽂아보니 이상하게도 열쇠는 들어가지 않는다. 순간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내 열쇠를 꽂은 것이 아닌가 하여 뒤로 돌아가 자동차 번호를 확인해 보니 차는 분명히 내 차였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열쇠 구멍을 살펴 보았더니 보이는 것은 없고 열쇠는 들어가질 않아 낭패감을 느끼면서 마침 옆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상의를 해 보았다. 그 중 마음씨 착해 보이는 운전기사 한 분이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짐작한 듯 쇠꼬챙이를 가지고 와서 열쇠구멍을 조사하고 난 뒤 이쑤시개가 박혀 있다고 했다. 그것도 양쪽 문 모두에.

기가 막힌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 보아도 공식적으로 주차가 보장된 구역이었다. 완벽한 주차였고 나에게

아무런 흠도 잘못도 없었다. 남들이 그냥 길 중간 중간에 적당히 세워 놓는 것을 보고 나는 일부러 가장자리를 찾아가 질서있게 암전히 모범을 보인 사람인데... 욕을 해주고 싶어도 대상을 찾을 길이 없었다. 막연하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분노는 결국 失笑가 되어 버렸다.

그뿐이라! 언제 굶혔는지도 모르게 내 차에는 흠이나 있었고, 누군가가 주차시에 박았을 것으로 보이는 차 앞 본니트는 이빨 빠진 장군마냥 움푹 들어가 있었지만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불쾌하기 짝이 없었고 한심한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도 세계적이지만 交通秩序意識 수준도 가히 해외토픽감이다. 방향제시등인 깜박이는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작동시킬 뿐, 멋모르고 뒤따라가는 사람을 위해 손가락 한번 까딱해 주지 않는다. 어디 그뿐인가. 앞차가 정지 신호인 빨간 불도 무시하고 질주하면 생각도 뜻도 좆대도 없는 멀쩡한 신사풍의 기사들은 질주하는 무법자의 뒤를 그냥 줄줄이 따라 붙으면서 눈감고 다닌다.

여기서 일일이 다 예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불쾌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 마디로 바퀴만 고무일 뿐 탱크와 다름없는 無敵의 機器가 되어 날이면 날마다 공격과 피습이 계속되는 전쟁상황을 방불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통현장인 것이다.

이야기가 교통질서를 혼란으로 이끄는 불량한 운전자들을 예로 들어 전개되었지만, 이런 얘기들은 곧 오늘날 우리들의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 하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일 것

이다. 또한 출퇴근시 전차나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줄을 잘 서 있다가도 차가 도착하는 순간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끼리 잡시를 못 잡고 서두르다 부딪치는 모습들이 어느 곳에서나 항상 목격될 수 있다는 현실. 이런 등등의 모든 현상들은 개인과 집단간의 存在樣式이 혼재되어 집단 속에서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일 뿐, 주변이 보이질 않고 있는 데다가 맹목적 경쟁의식이 여기에 보태져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살기 아니면 죽기라는 식의 막다른 행동양식이 아무 반성도 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부터 먹고 나부터 살고 남이야 죽든 살든 알 바가 없는 것이어서, 내가 나갈 때에는 남을 해집고 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나가는 길을 남이 가리는 것은 눈 뜨고는(살아 있는 한) 볼 수 없다는 식이다. 그래서 남에게 양보하는 여유는 美德인 줄은 잘 알지만 여유가 밥을 먹여 주느냐는 사고방식이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집단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서로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발전의 에너지가 쓸데없는 소모전에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수준인 걸 어찌겠느냐고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세기를 마감하는 90년대에 와 있다. 物質的으로는 다소 풍요로워졌다지만 잔업수당을 위해 밤늦도록 일하면서 한푼이라도 더 저축하고 무엇인가 크게 성취해 보겠다고 어금니를 깨물었던 60年代·70年代가 소위 인간성과 순수성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보다 더 큰 보람을 이룩한 훨씬 더 健康한 社會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든다.

따지고 보면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름 아닌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한 핏줄 한 동포라는 점에서 볼 때는 나 자신도 동일한 연대책임자의 한 사람이라는 自覺과 함께 自愧를 금치 못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라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시책을 구사하며 지금까지 부단히 연구·보완하면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지금까지 동원된 산업정책이나 지원 시책의 가짓수가 부족하거나 어쩌면 그 내용이 정밀하지 못한 점 때문에 목표처럼 안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근본을 생각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고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를 이끄는 핵심적인 精神과 魂이 빠지고 弱화되고 退化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생명력을 가진 진실과 사랑으로 이 약화된 정신과 혼을 되살려만 놓는다면, 우리 기업의 생명력은 새롭게 회생되고 새로운 경쟁력은 끊임없이 분출될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울동적인 심장을 받고 태어났다. 이 울동적인 심장으로부터 우리나는 眞實과 사랑의 리듬이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에 전파되고 우리 사회를 크게 공명시켜 나갈 때, 그 자질구레한 감박이 없는 無方向 社會現象 등은 일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도 그리고 무역수지의 흑자전환도 완전무결하게 달성되고 번영의 내일도 확실히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 나라경제

# 의약품의 兩面性



이강추  
보건사회부 약정국장

藥은 올바르게 사용되면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부작용을 초래하고 毒으로 변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건강을 ‘보약’으로 다스린다는 관념이 있어서인지 건강문제를 지나치게 약에 의존하고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정확하게 효능·효과나 부작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몸에 좋다고 무조건 약을 복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예를 들어, 우황청심원은 뇌졸중·고혈압·인사불성 등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영양제인 듯 복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의약분업 실시, 대중광고 제한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의약품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인인 의사·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약을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 중 특히 마약류는 잘 말해 준다.

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까지 마약에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평가되어온 우리나라도 시장개방·도시화·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마약류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이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약류 문제는 초기에 이를 퇴치하지 않으면 급속히 번져 웬만한 행정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하지 못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美國의 경우 마약류 관리예산이 연간 약 1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우리나라만은 마약류에 오염되지 않은 ‘麻藥 없는 社會’를 만들자는 국민적 합의가 확고히 이루어졌으면 하

는 마음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保社部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교육, 중독자 재활 등을 담당할 國民運動機構를 발족시킬 계획으로 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마약은 아니지만 ‘리미라’ ‘루바인 주사’ 등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과량 복용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도 약사·학부모·교사 모두가 마약류 문제와 똑같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의약품은 근래에 들어 수입개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품목 중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수입량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 공산품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製藥産業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지원과 품질향상에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고,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 G. M. P)’이라는 엄격한 품질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 약품도 外製에 비해 손색이 없다.

따라서 外製藥品이 무조건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할 뿐 아니라 藥의 사용에도 신중을 기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본문]

## 국가발전과 '정보화'



정홍식  
체신부 정보통신국장

인류문명은 18세기에 産業革命이라는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였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공업화의 물결은 기존의 생활양식이나 산업활동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공업화의 중요성을 남보다 먼저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구미 각국은 先進國으로 진입하여 민주복지국가를 실현했고, 공업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국가는 後進國으로 전락하게 된 역사적 교훈을 남겨 주었다.

20세기말에 접어든 지금, 이와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당시의 '공업화'보다 더 큰 변혁을 가져올 '情報化'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 벨, 존 나이스비트, 앨빈 토플러 등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 한 나라의 국운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요소로 '情報化'를 들고 있으며, 이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은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효율'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선진 각국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미 60년대부터 정보화를 촉진하고 情報技術關聯産業(information technology based industry)을 육성하는 여러 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관련산업은 통신부문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부문과 산업부문에까지 확대되어 情報通信産業이라는 시스템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국가 기반구조로서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의 고도성장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核心要素이므로 세계 각국 정부가 이의 육성지원에 우선순위를 두

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쟁 상대국에 비해서 정보통신기술이나 專門人力水準, 일반국민의 정보이용능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라서 정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선 수요창출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國家基幹電算網事業을 추진하여 1단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96년까지 추진할 2단계사업에 착수하였는데, 2단계사업에는 국민복지·우체국 종합서비스·해상화물 관리업무 등 7개 기관의 7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관련법령과 제도를 개편하여 정보통신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活力과 創意力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는 각종 법령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고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300만대의 情報通信端末機器를 보급하고 민간부문에 700만대 규모 등 2000년대초까지 1家口 1컴퓨터時代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우체국과 전화국을 활용하여 정보화 기반 시설인 地域情報센터를 구축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서비스를 개발하고 지방중소업체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등 地域情報化를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기술분야인 情報通信技術開發에 주력하여 중·대형 및 멀티미디어 컴퓨터와 ATM교환기·위성통신·ISDN 등 정보통신 시스템분야는 물론이고 종래의 전화·PC·FAX·TV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춘 다



기능 정보통신단말기 등과 정보통신 핵심부품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育成支援體制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정보통신산업 관련부처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관련 정책결정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협조방안 등을 강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의 공동추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산업관련 政府機能을 통합하여 이 분야의 육성을 효율적이고 추진력있게 수행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인 검토과제라고 하겠다.

아울러 모든 정부부처에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각종 人的·物的資源을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격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 중의 하나로 국가사회 전반의 '情報化' 촉진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경제부문의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 산업의 '情報化'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情報化'는 당면한 經濟難題를 해결해 주는 치료제이면서 앞으로 국가경제의 건강을 약속해 주는 예방약이 될 것이다. 정경

# 1/4분기중 物價와 國際收支는 改善된 모습

한승희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 사무관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내수위주의 고도성장의 여파와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인해 물가불안과 國際收支赤字에 직면하게 되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민주화 과정에서 고도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분배욕구의 분출과 과다한 賃金上昇,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5천달러대를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消費增加 現象, 여기에다 과일건설투자가 가세되어 물가 및 국제수지 문제가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금년도 경제운용의 중점과제는 내수진정을 통한 經濟安定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의 회복에 두고 여러가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물가와 부동산가격은 안정국면에 진입

금년 1/4분기중 消費者物價는 전년말대비 2.6% 상승하여 91년 1/4분기중 4.9%의 약 절반수준

이며 최근 3년간 물가 중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중 상승률이 1·2월에 비해 높으나, 이는 각급학교 納入金引上和 버스요금 인상분의 이월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이 두 가지 요인을 제외할 경우에는 0.3%의 상승에 불과하다.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고추장철에 대비한 수요증가로 고추가격이 소폭 올랐으나 파·시금치

등 채소류가 산지출하의 증가로 큰 폭으로 내려 農産物 전체로는 약세를 지속하였다. 畜産物의 경우 돼지고기는 산지가격의 하락으로 내렸으나, 뉴캐슬病的 만연에 따른 출산율저하 등으로 달걀, 닭고기가 오르고 쇠고기가 수요증가로 올라 축산물 전체로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水産物은 연근해 어획추진으로 고등어 등이 소폭 상승하였으

〈표 1〉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비교

(단위 : %)

	90.3월	91.3월	92.3월
비전년말	3.2	4.9	2.6
농축수산물	3.2	6.7	0.7
공 산 품	0.9	1.8	1.4
개인서비스	8.1	10.8	6.6

〈표 2〉 월별 소비자물가

(단위 : %)

	92.1월	2월	3월
비 전 월	0.8	0.5	1.3

〈표 3〉 주택가격 추이

(기간중 상승률, 단위 : %)

	90	91연간	1/4	2/4	3/4	4/4	92.1/4
주택가격	21.0	-0.5	3.5	1.6	-1.2	-4.2	-1.0

나 명태가 원양어선물량의 반입 증대로 내려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예년의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던 개인서비스 요금은 신학기를 맞아 유치원비와 각종 학원비가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都賣物價도 1/4분기중 비전년 말 0.8%(91년 1/4분기:1.3%)의 소폭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도매물가에서도 달 같이 크게 오르고 시금치 등 채소류는 產地出荷 증가로 하락하였으나 명태·돼지고기는 지금까지의 하락에 따른 반등으로 상승하였다.

부동산가격 동향을 보면 住宅賣買價格은 공급이 늘고 假需要가 진정됨으로써 지난해 5월 이후의 하향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傳賃價格은 금년 들어 지난 2년간에 비하여서는 안정되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오름세를 시현하였다. 이는 이사철의 도래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추세에 있어 주택구입을 연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신도시 등 입주자들의 대기성 傳賃需要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신도시의 대량입주(91년:5,026호→92년:4만4,373호)가 본격화되고 이사철이 끝나는 4월 이후에는 하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土地價格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금년 1/4분기

중 전국 평균지가상승률은 0.4%로서 91년 4/4분기의 1.4%보다 1%포인트 감소되었고 91년도 1/4분기보다는 무려 4.3%포인트 감소하여 全國地價는 전반적으로

하향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75년 분기별 지가변동률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소치로서 지난 3월 총선과 남북관계개선 등으로 인한 각종 개

〈표 4〉 최근 3년간 전세가격 비교

(기간중 상승률, 단위: %)

	90.1/4	91.1/4	92.1/4
전 국	17.5	4.8	4.7
(서울)	(21.9)	(8.8)	(6.6)

〈표 5〉 토지가격 동향

(기간중 상승률, 단위: %)

	89	90	91연간	91.1/4	2/4	3/4	4/4	92.1/4
지가	32.0	20.6	12.8	4.7	3.4	2.7	1.4	0.4

〈표 6〉 수출입 추이

(단위: %, 억달러)

	91.1/4	92.1월	2월	3월	92.1/4
수출증가율	9.5	16.2	6.3	12.4	11.6
수입증가율	23.7	21.1	-5.3	5.4	6.6
수출입차	-43.4	-19.3	-11.7	-7.6	-38.5

〈표 7〉 L/C來到 및 I/L발급 추이

(단위: %)

	91.上	3/4	4/4	92.1/4*
L/C 증가율	4.4	3.8	9.9	10.3
I/L 증가율	26.0	4.7	-11.3	-14.2

註: \* 품목별 수출증가율은 1~2월 실적 기준

〈표 8〉 품목별 수출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비, 단위: %)

	91연간	91.1/4	92.1/4*
수 출	10.5	9.5	11.6
경공업제품	0.6	-0.7	4.7
섬 유 류	5.6	-0.5	13.6
신 발 류	-11.1	2.8	-15.0
중화학공업제품	15.7	15.9	14.8
화 공 품	35.1	34.2	56.1
기 계 류	15.6	11.8	14.2
전기·전자	13.4	18.4	8.7
선 박	47.4	49.4	97.0
자 동 차	19.3	25.4	-8.1

註: \* 품목별 수출증가율은 1~2월 실적 기준

발전망으로 부분적인 지가상승요인이 있었으나, 不動産投機抑制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주택 200만호를 조기에 건설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투기

적 가수요가 억제되어, 대도시의 주거용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의 지가가 안정세로 전환된 데 기인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은 평균 0.03%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특히 중구·용산구·동대문구·강남구·관악구 등의 땅값은 각각 0.06~2.4% 떨어짐으로써 전국의 地價安定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택지조과소유부담금, 토지조과이득세 부과 등 投機的 土地去來에 대한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금년에는 주택을 예년의 경우보다 적은 50만호를 건설하면서, 택지·공장용지 등의 실수요물량을 公營開發에 의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가는 안정기조가 정착되어 점차 하향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수요증가, 남북관계개선의 가시화와 兩大選擧에 따른 地域開發 期待心理 등에 편승한 지가 상승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품목별 수입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비, 단위: %)

	91연간	91.1/4	92.1/4 <sup>1)</sup>
수입	16.7	23.7	6.6
소비재	19.8	23.6	9.7
원자재	15.1	27.4	2.2
(원유 및 석유제품)	(16.0)	(58.9)	(-4.0) <sup>2)</sup>
자본재	18.2	19.4	14.7

註: 1) 품목별 수입증가율은 1~2월 실적 기준

2) 1~3월 기준

〈표 10〉 산업생산 추이

(단위: %)

	91연간	91.1~2월	92.1~2월
산업생산가동률	8.6	10.4	8.1
제조업가동률	80.0	81.6	81.9

〈표 11〉 소비관련지표 추이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91연간	91.1~2월	92.1~2월
도소매판매	8.0	7.2	8.9
전력소비량	10.5	10.9	10.1
석유류 수입물량(내수용)	14.0	31.7*	20.7*
소비재수입	19.8	23.6	9.7

註: \* 1~3월

〈표 12〉 건설 경기 관련지표 추이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91.상	91.하	92.1월	2월	3월
총건축허가	4.3	-23.0	27.4	-18.3	
(주거용)	(5.0)	(-33.7)	(141.3)	(-8.0)	
시멘트출하	35.5	25.8	45.0	36.7	20.0

〈표 13〉 주요 건설노임 추이

(전년말 대비 상승률, 단위: %)

	91.12월	92.1~2월	92.3.15	3.25	4.5
목수賃	25.5	-2.4	2.3	2.9	4.2
미장공賃	22.3	-2.5	-2.4	3.1	4.4

### 輸出增加率의 호조로 수출입차 개선추세

전반적인 수출입 동향을 보면 그동안 製造業競爭力強化對策에 힘입어 1/4분기중 수출증가는 11%대를 유지한 반면, 수입은 총수요 관리시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작년 상반기 23.5%, 하반기 10.8%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는 6.6%로 안정되어, 금년 1/4분기 輸出入差는 지난해 1/4분기 중 -43억4천만달러에 비해 5억달러 정도 개선된 -38억5천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와 함께, L/C來到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I/L發

給은 감소세를 지속하여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계속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금협상과정에서 노사분규로 수출차질이 발생하고 리비아사태 등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무역수지 개선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금년 2/4분기중 輸出增加率は 지난해 同期의 높은 증가율(17.6%)의 영향으로 한자리 수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品目別 輸出入動向을 보면 금년 1~2월중 수출은 선박과 화공품의 수출이 각각 97.0%와 56.1%의 높은 증가를 보인 반면, 신발류 수출은 15.0%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수출도 노사분규의 영향으로 8.1% 감소하였다.

1~2월중 수입은 원유 및 석유제품의 경우 도입단가의 하락으로 작년 1/4분기에 비해 금액으로는 4% 감소(물량으로는 28.6% 증가)하였으나, 전기·전자 등 資本財輸入은 아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내수경기는 아직 진정속도 미약

內需景氣의 전반적 동향을 보면, 내수호조를 반영하여 1~2월중 산업생산은 8%대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製造業稼働率도 80%를 상회하였다.

소비생활 건전화운동의 확산으로 부분적인 내수진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 內需增加勢는 아직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建設景氣動向을 보면 建築許可面積은 금년 1~2월중 3.8% 증가에 불과하나, 시멘트출하·건설업 취업자수·건설노임 등을 종합할 때 건설투자의 진정속도가 아직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멘트출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國內建設受注도 금년 1~2월중 공공부문의 건축물과 주택을 중심으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32.5% 증가하였다.

建設業就業者數도 금년 1~2월중 전년동기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증가수의 26%에 해당하는 약 15만명이 증가하였으며, 건설

〈표 14〉 주요 업종별 취업자수 증가추이

(전년동기 대비 증감, 단위: 천명)

	91. 상	91. 하	92. 1월	2월
제조업	188	-10	-125	-113
서비스업*	404	516	484	536

註: \* 건설업 제외

〈표 15〉 통화증가 추이

(전년동월 대비, 평잔기준, 단위: %)

	91. 3월	92. 1월	2월	3월
총통화증가율	19.4	18.2	17.6	18.8
화폐발행액 증가율	20.9	15.5	13.8	13.0
현금/총통화	8.9	9.5	8.5	8.3

〈표 16〉 시중금리 추이

(단위: %)

	91. 12월말	92. 1월말	2월말	3월말	4월13일
회사채수익률(금리연동)	19.4	17.4	17.1	18.0	17.8
콜금리(1일물)	17.3	13.7	14.7	16.4	14.9

〈표 17〉 종합주가지수 추이

	91년말	92. 1월말	2월말	3월말	4월14일
종합주가지수	610.9	680.5	612.6	606.3	575.6

〈표 18〉 어음부도율 추이

(단위: %)

	88~91	91. 12월	92. 1월	2월	3월	4월13일
어음부도율	0.05	0.08	0.05	0.05	0.08	0.04

〈표 19〉 업종별 상장기업 부도수

(91~92. 1~3월, 단위: 개)

	섬유·의복	전자	기계	기타	계
업종별 상장기업 부도수	8	8	3	2	21

인력의 구득난을 반영하여 木手賃 등 일부 건설노임의 경우 1~2월에는 하락하였으나 3월 하순 들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술선하여 土木工事を 하반기로 順延하는 등 건설경기안정화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겠다. 즉, 중앙정부는 하반기에 공사물량의 60%를 배정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으나, 지방정부도 불요불급한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설비투자 동향을 보면 금년 2월중 國內機械受注는 전동차·선박엔진·트럭·버스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2월대비 6.3% 증가하였으나, 일반산업용 기계는 14.4%의 감소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設備用機械類 內需出荷도 제조용기계·농업용기계 등의 수요둔화로 전년동월대비 3.3%의 낮은 증가를 보였다.

### 제조업 인력난 속에 賃金安定 努力的 지속적 추진

雇傭動向을 보면 2월중 經濟活動人口는 1,831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인 610만명 증가함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도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늘어난 57.9%를 나타내었다. 취업자수는 1,77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인 61만명 증가하였는데, 특히 제조업 취업자수는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서비스업 就業者數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失業者數는 56만3천명으로, 실업률이 전년동월보다 0.1%포인트

감소한 3.1%로서(계절조정치:2.3%)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임금타결 동향을 보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등 公共部門은 모두 총액 5% 이내에서 임금타결을 완료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임금교섭이 대부분 4월부터 시작되어 아직은 실적이 부진하나, 정부는 지난 3월에 이미 선정한 바 있는 重點管理對象企業에 대한 적극적인 임금타결을 유도하고 있다.

### 통화 및 금리는 안정세 시현

통화동향을 보면 금년 3월중 總通貨增加率은 18.8%를 시현하였으며, 금년 1/4분기 전체로는 당초 관리목표(18.5%)보다 낮은 18.2%에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

시중금리는 3월 들어 다소 올랐으나 전반적으로 下向安定勢를 보이고 있다.

證市動向을 보면, 綜合株價指數는 4월 14일 현재 연초의 수준보다 낮은 575.6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금년 1/4분기중 기업의 有價增資 規模는 3,7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중의 1,437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어음不渡率은 금년 1~2월중 평균 0.05% 수준으로서 지난해 말에 비하여 보다 감소하였다가 3월 들어서는 다시 월평균 0.08%로 증가하였으나, 4월 13일에는 0.04%로 크게 감소하였다.

상장기업의 부도는 91년에 13개, 금년 1/4분기중 8개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섬유·의복 등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과 기술수준이 낙후된 중소기업종을 중심으로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 내수진정 및 산업경쟁력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금년 1/4분기중 消費者物價는 2.6%의 상승에 머물러 안정기미가 나타나고 있으며, 輸出入差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4분기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經濟安定化 努力이 필요하다. 특히 4월 본격적인 임금협상시기를 맞이하여 산업평화 속에서 총액임금의 안정적 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물가의 안정세를 지속하기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철저히 관리하며,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여야겠다.

이와 함께 건설투자진정대책의 실효성 점검을 통한 내수진정 노력을 강화하고, 제조업으로의 人力·資金흐름상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및 소비구조 변화

김해수  
통계청 사회통계과장

도시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91년도 월평균 소득은 115만9천원으로 90년의 94만3천원에 비해 22.9% 증가하였다.

가계소득에는 가구주가 벌어들인 소득과 가구 구성원이 벌어들인 가구원 소득이 있고,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등의 기타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15만9천원

91년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을 보면 가구주가 번 근로소득은 83만원,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이 번 근로소득은 15만7천원, 기타 부업이나 재산소득은 17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의 구성을 보면 최근의 인력난과 주부 및 노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계소득에서 가구주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업소득과 재산소

득도 과거에 비해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 개선되는 모습 보여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여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90년에는 평균치가 포함된 계층인 90만원~105만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 근로자 가구의 69.8%였으나, 91년에는 평균치가 포함된 계층인 105만원~120만원 이하인 가구가 64.1%로 줄어들

었다.

그리고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V분위 계층의 소득이 근로자 가구의 총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소득점유율이 38.0%로, 하위 20%에 속하는 I분위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 8.4%의 4.7배로 90년 4.62보다 낮아졌다. 또한 상위 40%인 IV·V분위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의 60.6%로, 하위 40%인 I·II분위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율 22.0%의 2.75배로 90년의 2.84배에 비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87년 이후 단순 기능인력

〈표 1〉 소득원천별 소득 추이(월평균)

(단위: 천원, %)

	91년		구 성 비		
	금액	비전년 증가율	85년	90년	91년
소 득	1,158.6	22.8	100.0	100.0	100.0
근 로 소 득	986.2	21.8	89.4	85.8	85.1
가 구 주 소 득	829.6	20.0	80.3	73.3	71.6
가 구 원 소 득	156.6	32.4	9.1	12.5	13.5
기 타 소 득	172.4	28.7	10.6	14.2	14.9
사 업 및 부업	34.4	39.8	2.4	2.6	3.0
재 산 및 이 전	138.1	26.3	8.2	11.6	11.9

의 부족과 노사분규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았던 생산직 위주의 고율임금인상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노임·파출부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소득수준별 소득구조를 보면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고소득계층에서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기타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저소득계층에서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 월평균 가계지출은 85만9천원

91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85만9천원으로 90년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은 8.3% 수준이다.

가계지출 중에서 소비지출은 77만9,600원으로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는데, 주로 각종 모임의 회비와 교제를 위한 잡비, 자녀의 보충교육 비용증가 등으로 인한 교육비, 식생활패턴 변화와 음식물 가격상승에 따라 외식비용 등에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종 공과금 등 비소비 지출은 전년에 비해 8.7% 증가한 7만9,400원으로 가계지출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득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보장부담금은 전년대비 14.7% 증가했으나, 무주택 근로자 공제신설·의료비 공제 확대 등으로 조세 부

담액이 0.9%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영질계수 낮아지는 추세 속에 기호식품과 외식비용은 증대 소비지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몫을 차지하는 식료품비는 24만

〈표 2〉 소득계층별 구성비

(단위: 천원, %)

	90년		91년	
	구 성 비	누적구성비	구 성 비	누적구성비
450 미만	11.7	11.7	6.3	6.3
450~ 600	15.2	26.9	8.3	14.6
600~ 750	17.3	44.2	12.9	27.5
750~ 900	14.0	58.2	13.7	41.2
900~1,050	11.6	69.8	12.7	53.9
1,050~1,200	8.0	77.8	10.2	64.1
1,200~1,350	6.0	83.8	8.3	72.4
1,350~1,500	3.8	87.6	6.4	78.8
1,500~1,650	3.0	90.6	5.0	83.8
1,650~1,800	2.2	92.8	3.6	87.4
1,800~1,950	1.7	94.5	2.8	90.2
1,950~2,100	1.3	95.8	2.0	92.2
2,100 이상	4.2	100.0	7.8	100.0

〈표 3〉 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득 점유율

(단위: %)

	I	II	III	IV	V	V / I	IV + V / I + II
85년	7.8	12.9	16.8	22.5	40.0	5.13	3.02
90년	8.4	13.2	17.1	22.5	38.8	4.62	2.84
91년	8.5	13.5	17.4	22.6	38.0	4.47	2.75

	I	II	III	IV	V
근로소득 비중(%)	89.3	89.7	87.3	86.9	80.5

〈표 4〉 가계지출 증가율

(단위: %)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명 목	7.5	10.1	15.1	18.2	28.2	14.5	18.8
실 질	4.9	7.1	11.7	10.4	21.3	5.4	8.3

〈표 5〉 가구당 가계지출(월평균)

(단위: 천원, %)

	91년	증가율	구 성 비		
			85년	90년	91년
가 계 지 출	859.0	18.8	100.0	100.0	100.0
소 비 지 출	779.6	19.9	91.9	89.9	90.8
비소비지출	79.4	8.7	8.1	10.1	9.2

7,900원으로 전년비 3만6,700원, 17.4% 증가하였는데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가계소득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져 소비지출 중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엔겔係數가 31.8로 전년대비 0.7포인트 감소하여 엔겔계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주·부식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기호식품과 외식의 비중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품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식비는 육류 소비량 증가로 인해 18%가 늘어났으나 주식인 곡류는 3.3%의 증가에 그쳤으며, 반면에 과일 등의 기호식품은 식생활의 고급화에 따른 소비 증가와 과실의 가격상승에 의해 전년대비 23.3% 증가하여 91년에는 主食費 지출을 상회하였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핵가족화 등의 진전으로 餘暇를 가족과 함께 즐기는 소비행태가 확산되는 데다가, 서비스 분야의 가격상승으로 외식비용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80년 식품비의 4%에 불과하던 것이 91년에는 23%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다.

**의식주 비용은 줄어드는 반면  
교육비 등 지출은 증가**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가구·가사용품,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지출이 늘어난 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따라 집세지출이 줄어들고 가스 및 연탄가격 안정에 따라 광열·수도비가 비교적 낮게 증가하였다.

가구·가사용품 중에서는 홈세트 등 식기·주방용품과 침구의 고급화 등에 많이 지출되었고, 보건·의료비는 안경 등 보건·의료용품 구입비가, 교육·교

양·오락비는 대학 교육비, 보충 교육비와 함께 도서·VTR 구입, 교양강습료 등의 지출이 크게 늘었으며, 교통·통신비는 자가용 승용차 구입 및 수리비에서, 그

〈표 6〉 식료품비 구성비 추이

(단위 : 천원, %)

	91년		구 성 비			
	금 액	증가율	80년	85년	90년	91년
식 료 품	247.9	17.4	100.0	100.0	100.0	100.0
주 식	42.3	3.3	35.9	28.4	19.4	17.1
부 식	104.3	18.0	44.4	47.1	41.9	42.0
기 호 식 품	44.5	23.3	15.6	16.4	17.1	18.0
외 식	56.7	24.2	4.1	8.1	21.6	22.9
엔 겔 係 數			42.6	37.7	32.5	31.8

〈표 7〉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 천원, %)

	90년		91년		比前年 증가율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소 비 지 출	650.0	100.0	779.6	100.0	19.9
식 료 품	211.1	32.5	247.9	31.8	17.4
주 거	29.8	4.6	34.5	4.4	15.7
광 열 · 수 도	29.1	4.5	32.2	4.1	10.5
가 구 가 사 용 품	37.8	5.8	45.5	5.8	20.4
피 복 · 신 발	54.6	8.4	63.0	8.1	15.4
보 건 · 의 료	34.2	5.3	41.7	5.4	22.1
교 육 · 교 양 · 오 락	77.4	11.9	96.3	12.3	24.3
교 통 · 통 신	54.9	8.4	68.7	8.8	25.2
기 타 소 비 지 출	120.9	18.6	149.7	19.2	23.8

〈표 8〉 소득계층별 소비구조 및 소비성향

(단위 : %)

	I분위	II분위	III분위	IV분위	V분위
소 비 지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식 료 품	36.3	34.8	33.6	32.1	27.7
주 거	7.2	4.7	4.6	3.7	3.8
광 열 · 수 도	5.4	4.8	4.6	4.0	3.3
피 복 · 신 발	7.5	7.9	8.0	8.1	8.4
보 건 · 의 료	6.0	6.0	5.5	5.3	4.7
교 육 · 교 양 · 오 락	9.4	11.8	12.5	13.2	13.0
교 통 · 통 신	6.9	7.5	7.4	8.8	10.9
기 타	16.3	17.1	18.5	19.2	21.5
평 균 소 비 성 향	96.8	79.9	74.5	70.6	63.7
후 자 율	3.2	20.1	25.5	29.4	36.3

리고 회비·교제비·부조금 등 雜費의 지출이 주로 많이 증가하였다.

**저소득 계층은 식료품·주거비 지출 높아**

소득계층별 소비구조를 보면 저소득계층에서는 식료품·주거비 등 기본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계층에서는 교육·교양·오락, 교통·통신, 잡비 등의 지출이 높은 편이다.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보건 의료비 등은 소득탄력성이 낮아 소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소비 지출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는데, 식료품의 비중을 나타내는 엔겔 계수가 I분위의 저소득계층에서는 36.3이나 V분위의 고소득계층에서는 27.7로서 8.6포인트가 낮다.

반면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 등 기타 소비지출 등은 소득탄력성이 높아 소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소비 지출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데, 교육·교양·오락비 지출을 보면 소득이 낮은 I분위 저소득 계층에서는 전체 소비지출의 9.4%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이 높은 V분위의 고소득 계층에서는 13.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 계층일수록 생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균소비 성향이 낮고 흑자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가 많으면 1인당 평균소비지출은 체감 가구원 규모에 따른 소비지출

금액의 크기는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인의 경우는 1.48 배로 늘어나고, 6인 이상의 경우

〈표 9〉 가구원수별 주거비 및 교육비 지출

(단위: 천원)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주 거 비	40.5	39.4	34.6	40.8	46.6
(지 수)	(100.0)	( 97.1)	( 85.4)	(100.7)	(114.9)
월 세	27.8	22.4	16.3	12.0	10.0
(지 수)	(100.0)	( 80.4)	( 58.6)	( 43.0)	( 36.0)
주 택 수 리 비	10.8	14.2	14.8	25.2	33.0
(지 수)	(100.0)	(131.5)	(137.6)	(233.3)	(306.1)
교 육 비	17.2	37.6	71.3	99.1	117.9
(지 수)	(100.0)	(218.2)	(413.8)	(575.2)	(684.3)

〈표 10〉 월평균 가처분소득 추이

(단위: 천원, %)

	가처분소득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명 목	실 질	
81	270.4	19.7	-1.6	21.6
82	297.3	9.9	2.6	7.1
83	338.0	13.7	10.0	3.4
84	371.6	9.9	7.4	2.3
85	397.2	6.9	4.3	2.5
86	443.2	11.6	8.6	2.8
87	516.3	16.5	13.1	3.0
88	597.5	15.7	8.0	7.1
89	735.3	23.0	16.4	5.7
90	870.2	18.4	9.0	8.6
91	1,079.2	24.0	13.0	9.7

〈표 11〉 소비성향 추이

(단위: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평 균 소비성향	78.9	79.3	76.8	75.8	76.1	74.8	73.6	74.2	76.4	74.7	72.2
한 계 소비성향	85.2	83.2	58.5	66.1	79.9	63.8	66.0	78.3	85.9	65.5	62.0

〈표 12〉 월평균 가계수지

(단위: 천원, %)

	89	90	91	증가율
가 처 분 소 득	735.3	870.2	1,079.2	24.0
소 비 지 출	561.7	650.0	779.6	19.9
흑 자 액	173.6	220.2	299.6	36.1
흑 자 율	23.6	25.3	27.8	2.5p

는 2.02배로 늘어나 소비지출이 가구원수에 정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1인당 평균 지출이 체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거비는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는데, 이것은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인원수 증가→소득수준 증가→자가소유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월세지출액이 4인의 경우는 2인의 58.6%, 6인의 경우는 36.0%로 각각 감소하는 데 기인한다(도시가계조사에서는 주택구입비는 자산취득으로 보아 소비지출에 포함시키지 않음). 반면, 주택설비 수리비는 가구원수 2인을 기준으로 할 때 4인의 경우는 1.38배, 6인의 경우는 3.06배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교양·오락비는 가구원수에 따른 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가구주 평균연령 증가→자녀의 수 및 연령증가→교육비 부담증가로 나타나 교육에 대한 지출이 가구원수 2인을 기준으로 할 때 4인의 경우는 4.14배, 6인 이상의 경우는 6.84배로 급증하고 있다.

### 가처분 소득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가처분소득은 107만9천원으로 비소비지출 증가율(8.7%)이 낮은 데 힘입어 전년 대비 20만9천원, 24.0%(실질 13.0%) 증가하여 8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증가율은 89, 87년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소비성향은 90년에 비해 낮아져 가처분소득 중에서 소비에 지

〈표 13〉 흑자율 추이

(단위 :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흑자율	21.1	20.7	23.2	24.2	23.9	25.2	26.4	25.8	23.6	25.3	27.8

〈표 14〉 가구소득, GNP 및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경상가격 기준)

	80년(A)	85년(B)	90년(C)	91년(D)	C/A	C/B
〈가구당 월평균 소득〉						
한 국(천원)	234.1	423.8	943.3	1,158.6 (22.8)	4.03	2.23
일 본(¥)	349.686	444.846	521.757	—	1.49	1.17
대 만(NT\$)	233.112	320.495	520.147	—	2.23	1.62
〈GNP〉						
한 국(조원)	36.7	78.1	171.5	206.0 (20.1)	4.67	2.20
일 본(¥)	240.1	321.3	428.7	—	1.79	1.33
대 만(10억NT\$)	1,468.1	2,515.1	4,327.0	—	1.70	1.72
〈소비자물가〉						
한 국(85=100)	70.9	100.0	130.2	142.8	1.84	1.30
일 본(85=100)	87.2	100.0	106.9	—	1.23	1.07
대 만(86=100)	82.0	99.3	110.7	—	1.35	1.11

〈표 15〉 5분위 계층별 소득 점유율

(단위 : %)

	연도	배율(V/I)	I	II	III	IV	V	지니계수
한 국	91	4.46	8.53	13.44	17.36	22.65	38.03	0.2870
대 만	90	5.18	7.45	13.22	17.51	23.22	38.60	0.3117
일 본	91	2.90	10.99	15.26	18.93	22.93	31.89	0.2681 <sup>1)</sup>
홍 콩	86	10.31	4.9	10.0	14.0	20.6	50.5	0.433
서 독	81	10.66	4.4	10.2	15.9	22.6	46.9	0.414
영 국	77~78	6.98	6.1	10.5	16.4	24.4	42.6	0.372
미 국	83	9.09	4.7	11.1	17.1	24.4	42.7	0.364 <sup>2)</sup>
캐나다	81	9.00	4.6	11.0	17.7	25.3	41.4	0.374

註: 1) 88년 자료

2) 78년 자료

출한 금액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2.2%로 전년에 비해 2.5%포인트 낮아지고, 추가로 늘어난 소득 중 추가로 소비에 지출한 금액의 비율인 한계소비성향도 62.0%로 전년대비 3.5%포인트 감소하여 소비품조가 다소 자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1년 이후의 소비성향을 비교해 보면,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계소비성향은 88년, 89년에는 사회 전반에 과급된 과소비 풍조의 영향으로 78.3%, 85.9%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평균소비성향도 일시적으로 높아졌으나, 91년은 소비품조가 다소 자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한계소비성향이 62.0%로 크게 낮아짐에 따라 평균 소비성향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6〉 소비지출 구성비 비교

(구성비, 단위: %)

	한 국		일 본			대 만	
	85	91	77	85	91	88	90
소 비 지 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 료 품	37.7	31.8	29.3	25.7	24.0	33.4	30.9
주	4.7	4.4	4.9	4.7	5.3	23.2	24.6
광 열 · 수 도	7.4	4.1	4.5	5.9	5.1		
가 구 · 가 사 용 품	4.9	5.8	4.6	4.2	4.0	4.7	4.3
피 복 · 신 발	7.8	8.1	8.4	7.0	7.1	6.1	5.9
보 건 · 의 료	5.4	5.4	2.4	2.4	2.5	5.2	4.8
교 통 · 통 신	10.3	12.3	7.8	9.7	10.0	8.4	8.8
교 육 · 교 양 · 오락	6.5	8.8	11.4	12.9	14.5	11.7	13.4
기 타 소 비 지 출	15.2	19.2	26.7	27.5	27.4	7.3	7.3
1 인 당 GNP (US\$)	2,194	6,498	6,052	10,987	23,965*	6,302	7,928

註: \* 90년

〈표 17〉 식품비 지출 비중

(단위: %)

	한 국		일 본		
	85	91	77	85	90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비중	37.7	31.8	29.3	24.1	24.1
식 품 비 의 비 중					
주	28.4	17.1	14.2	11.5	11.5
부	47.1	42.0	44.1	39.5	39.5
기 호 식 품	16.4	18.0	30.2	32.4	32.4
외	8.1	22.9	11.6	16.7	16.7

〈표 18〉 한·일·대만 소비성향 및 흑자율 비교

(단위: %)

	한 국(원)			일 본(¥)			대 만(NT\$)		
	가처분소득	소비성향	흑자율	가처분소득	소비성향	흑자율	가처분소득	소비성향	흑자율
80	225,979	77.6	22.4	305,549	77.9	22.1	233,112	77.1	22.9
81	270,419	78.9	21.1	317,279	79.2	20.8	266,433	74.9	25.1
82	297,293	79.3	20.7	335,526	79.3	20.7	275,250	76.6	23.4
83	338,005	76.8	23.2	344,113	79.1	20.9	295,887	76.5	23.5
84	371,594	75.8	24.2	359,353	78.7	21.3	314,245	77.6	22.4
85	397,238	76.1	23.9	373,693	77.5	22.5	320,495	76.8	23.2
86	443,195	74.8	25.2	379,520	77.4	22.6	341,728	75.6	24.4
87	516,271	73.6	26.4	387,314	76.4	23.6	366,487	75.1	24.9
88	597,532	74.2	25.8	405,938	75.7	24.3	410,483	73.6	26.4
89	735,307	76.4	23.6	421,435	75.1	24.9	464,994	72.4	27.6
90	870,206	74.7	25.3	440,539	75.3	24.7	520,147	71.2	28.8
91	1,079,203	72.2	27.8	463,892	74.5	25.5	-	-	-

## 최근 10년중 가장 높은 가계 흑자율 기록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공제한 흑자액은 29만9,600원으로 전년대비 7만9,400원, 36.1% 증가함에 따라 흑자율도 27.8%로 전년대비 2.5%포인트 높아져 가계수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81년 이후 가장 높은 흑자율을 보였다.

## 일본·대만과 비교해 본 가계소득과 지출

###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경제규모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91년도 우리나라의 근로자 가계소득은 22.8% 증가하여 GNP 증가율(경상가격기준) 20.1%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81년부터 90년까지 10년 동안 GNP가 4.7배로 커진 데 비해 가계소득은 4.0배로 커져, 일본의 GNP 1.8배 가계소득 1.5배, 대만의 GNP 3.0배 가계소득 2.2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율의 임금상승이 이루어졌던 지난 86년 이후는 GNP가 2.20배 증가한 데 비해, 근로자 가계소득은 2.23배 늘어나 경제규모의 성장에 비해 근로자 가계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GNP가 상대적으로 근로자 가계소득으로 많이 배분된 데다가 88, 89년 사회전반에 파급된 과소비 풍조의 영향으로 소비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소비수요가 일본·대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과 높은 소비재 수입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배는 대만보다 양호한 편  
근로자 가구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87년 이후 저임금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상승이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소득 2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점유액이 저소득 20% 계층의 소득점유액의 4.47배로서 일본의 2.8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대만의 5.2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득분배의 형평도를 나타내는 지니係數도 일본보다는 낮으나, 대만을 비롯 미국·서독 등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근로소득의 분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에 비해서 높은 생활수준


우리의 91년도 1인당 GNP와 비슷한 시점인 77년의 일본, 88년의 대만과 비교해 볼 때 소비지출구조가 대체로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경제수준에 비해서 우리의 소비생활이 앞서는 모양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예컨대 식품비 지출을 1인당 GNP가 우리의 91년과 비슷했던 77년의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는 부식비와 기호식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 우리의 경우는 외식비 지출이

높다.

이는 사회행태가 가족단위로 여가를 보내는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자가용승용차 구입과 유지비용의 높은 지출 증가 등과 함께 우리의 경제수준을 넘는 선진국형 消費意識의 한 단면, 즉 과소비적 행태가 아닌가 싶다.

한편 평균 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91년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성향은 일본보다는 낮고 대만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것은 임금안정과 비소비지출의 증가로 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을 공제한 실질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이 미미하여 소비를 늘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국제수지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91년 8.4%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근로자 가계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고 사상 최고의 흑자율을 기록하였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안정이 우선 과제인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물가안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되찾아가계소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 일본경제, 경기후퇴기에 돌입

김기형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

일본경제의 GNP 성장률은 91년 3/4분기에 前期比 年率 2.0%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4/4분기에는 마이너스 0.2%를 기록하여 경기가 작년 여름 무렵부터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1년 하반기에 일본 内需의 실질성장률은 1.3%로 일본정부가 '안정성장 궤도'라고 보는 3.5~4.0%를 훨씬 밑돌고 있다. 平成景氣의 확대를 주도했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악화되면서 일본경제는 본격적인 경기후퇴기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가 악화되자 일본정부는 92년도 3.5% 성장목표는 무리하다고 판단하여 86년 엔貨강세에 따른 불황 이후 최초로 긴급경제대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중앙은행도 金利를 인하하여 경기부양을 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이 89년 봄부터 선회하여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등 資産價格이 폭락한 데 기인한 금융사정의 악

화까지 겹쳐 경기회복은 금년말 경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平成景氣는 내수중심의 성장

일본에서 戰後 최장의 경기확대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平成景氣는 91년 1/4분기에 정점에 달한 이후 경기후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平成景氣의 확대기간중에 일본 경제는 고도성장기의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인 연평균 5~6%의 높은 GN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平成景氣의 특징은 과거 일본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였던 해외부문보다도 일본 국내의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부문이 호조를 보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86년 3% 증가에 그쳤던 민간 설비투자는 87년에 8.6% 증가한 이후 88년부터 90년까지 두 자리 숫자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내수를 확대시킨 또 하나의 견인차 역할은 민간소비가 담당했다. 금융자산의 급증과 소득증가에 따라 내구소비재의 소비가 건실

했다.

平成景氣의 또 다른 특징은 경기가 확대되는 중에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경기확대가 계속되는 동안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경기확대기에는 가계와 기업의 자금사정이 원활했으나 이번 경기후퇴기에는 자산가격의 폭락에 따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 86년 불황기에 금융정책 편중으로 자산가격 급등

소위 버블(bubble)로 불리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은 86년 불황기에 금융정책 편중으로 경기부양을 꾀한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86년 불황기에 추진되었던 재정정책이 경기대책으로서 시의적절하지 못했고, 금융정책 편중의 경기부양책으로 저금리조가 3년 이상 지속된 결과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폭등하여 경기확대 국면에서는 企業과 家計의 자금사정

이 호전되면서 경기과열을 가속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6년 불황기 이후의 금융정책 기조를 보면, 85년 12월말에 5%였던 日本의 공정할인율은 86년 한 해 동안 0.5%포인트씩 4차례나 인하되었고 87년 2월에 0.5%포인트 추가 인하된 후 89년 5월까지 저금리기조는 지속되었다(〈그림〉 참조). 일본의 금융완화 기조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통화량 증가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86년에 통화(M<sub>2</sub>+CD)증가율은 前年對比 8.7%였으나 그 이후 계속 높아지기 시작하여 87년 9.2%, 88년 10.8%, 89년에

는 10.3%에 달했다. 통화팽창에 따라 實物經濟 이외에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들면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폭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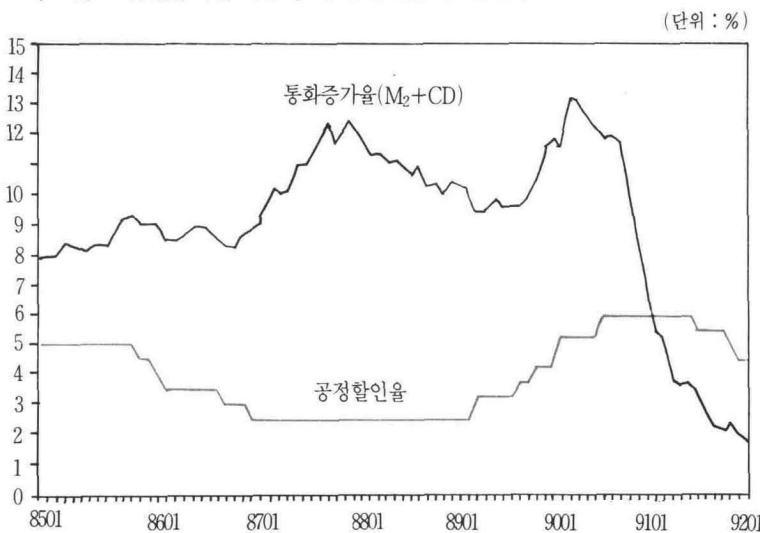
이러한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가계는 막대한 資本利得을 얻어 투자와 소비가 건실하게 됨으로써 平成景氣가 보다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89년 금융긴축 정책에 따라 자산가격 폭락

90년부터 주식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91년 12월에 경제기획청장관이 의회에 보고한 90년도 國民經濟計算確報에 의하면, 90년말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자산은 주가의 대폭적인 하락을 배경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일경평균주가(225종 연말 월중평균)는 주식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89년에 비해 91년에는 41%나 하락하였다. 한편 土地價格도 91년에 전년대비 4.6% 하락하여 17년만에 첫 하락을 나타냈다. 거주지역의 토지가격은 전년 대비 5.6% 하락하였으며 상업용지의 가격은 4.0% 하락하였다. 특히 대도시의 거주지역 地價는 20~30%나 하락하였다. 이러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80년대에 팽창하였던 버블붕괴의 크기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자산가격의 폭락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89년 5월에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저금리기조로부터 금융긴축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89년 한 해 동안 0.75%, 0.5%, 0.5%포인트씩 3차례 인상된 데 이어 90년 3월에 1.

〈그림〉 월별통화증가율\*, 공정할인율의 변동추이



주: \* 통화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임.

자료: 일본경제신문사, 일본경제신문

0%포인트, 8월에 0.75%포인트 씩 인상되었다. 이로써 3년 이상 계속되었던 저금리기조는 종결되고 금융긴축기조로 전환하였다. 89년에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株價가 하락하지 않았으나 90년 들어서면서 기업수익이 악화되자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株式市場은 현재까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90년 하반기에 표면화하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의 불황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 자산가격 폭락에 따라 금융구조 악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폭락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사정은 급속히 악화되었다. 주식가격 폭락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여 자금조달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의 폭락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를 악화시킨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미 민간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은 91년 9월말까지 1조엔을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 3월까지 3조엔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生命保險會社를 제외한 비은행 금

융기관들의 자금압박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91년 가을까지 4천억엔에 달하는

〈표 1〉 일본의 분기별 GNP 성장률과 투자, 소비의 증가율  
(전기비연율, 단위: %)

분기	GNP	설비투자	민간소비	
88년	1	6.3	15.3	5.6
	2	3.0	6.6	7.6
	3	8.4	15.5	4.1
	4	4.9	11.8	3.1
89년	1	4.8	22.8	7.7
	2	-0.3	-2.3	-3.6
	3	9.3	19.0	7.8
	4	5.8	11.0	9.2
90년	1	3.5	10.7	0.8
	2	8.4	9.2	9.1
	3	2.8	12.6	0.3
	4	4.0	8.6	-0.7
91년	1	8.3	5.7	2.3
	2	2.8	-7.3	6.5
	3	2.0	0.6	3.0
	4	-0.2	-5.6	0.4

자료: 일본 경제기획청, 일본경제신문사

손실을 기록, 이 때문에 日本政府는 금융기관에 대한 은행용자의 금지조치를 44년만에 해제했고, 부동산용자의 총량규제도 철폐했지만 금융기관과 부동산업자의 자금압박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금융구조의 악화와 경기감속에 따라 91년 5월부터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M<sub>2</sub>+CD)증가율은 계속 낮은 추세에 머물고 있다. 통화증가율은 91년 8월부터 92년 1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 대에 머물러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 금융구조 악화는 경기부진을 가속화시켜

平成景氣의 경기후퇴는 급격한 유가인상이나 엔화 강세 등의 외부적 충격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자본스톡의 조정에 의한 자율적인 조정의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번 경기후퇴는 '버블붕괴불황'이라 불리우고 있다.

이러한 경기조정은 금융긴축정책과 자산가격 폭락에 따른 바가 크다. 일본은행은 91년 봄부터 금융완화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으나 계속되는 증시침체의 장기화로 기업은 보통사채, 장단기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조달 비용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수익은 저하하고 설비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민간소비도 逆資産 효과에 따라 고액상품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진을 보이고 있다.

불황의 파급경로는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 주택투자에서 내구 소비재, 재고투자, 설비투자로 진행되었다. 불황의 파급과정과 관련한 최근 몇 년간의 산업동향을 살펴보면, 平成景氣의 확대과정에서 내수주도형 경기를 주도했던 주택착공수는 87년 최고수준에 달한 이후 8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주택착공수는 자산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던 9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내구소비재의 소비증가율은 88년에 최고수준에 달한 이후 점차 둔화하기 시작하였다. 91년 2/4분기에는 재고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在庫調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재고관리시스템이 재고관리에 이용되면서 재고조정에 의한 경기순환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91년 『經濟白書』에서는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재고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년 3/4분기 民間設備投資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5.2% 증가하였으나 민간기업 자본스톡의 증가율은 8%로 자본스톡의 증가에 비해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낮다. 설비스톡

의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 자산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경기침체 길어질 듯

6년에 걸친 平成景氣의 확대과정이 종료되고 자산가격 폭락에 따른 문제까지 겹쳐 일본경제는 앞으로 상당한 치유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기업심리·소비자심리가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고, 버블수축에 따라 악화된 금융구조가 개선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되고 있어 설비투자의 조정과 재고조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의 92년도 GNP 성장률은 일본정부의 전망치 3.5%보다 낮은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경기회복이 늦어질 조짐이 나타나자 일본정부와 일본중앙은행은 景氣浮揚策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조만간 0.5~0.75%포인트 범위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정부도 92년도 공공사업 예산의 조기집행, 민간설비투자의 유도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최근 악화

되고 있는 기업심리·소비자심리를 활성화시킬 근본적인 대책으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平成景氣의 확대기간에 저금리정책 편중에 따른 정책효과가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여 나타난 후유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財政政策과 金融政策의 동시적 활용은 경기대책으로서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 자산가격 안정이 안정성장의 열쇠

일본의 자산가격의 과도한 변동이 일본경제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따라 내수과열을 경험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큰 폭의 변화는 결국 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며 이를 치유하기 위한 경제의 機會費用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안정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하겠다. ■

경제학자가 만난 陳 兪 동력자원부장관

# 전환기 에너지정책을 설계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통경제관료로서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에너지공급체계의 확립과 합리적 에너지소비문화의 정착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글·신의순/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보**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오후, 과 천 제2종합청사의 장관집무실에서 취임 11개월째를 맞는 진남 동자부장관을 만났다.

진장관은 서울상대를 졸업한 후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정책국장, 공정거래실장, 차관보를 거쳐 해운항만청장과 재무부 차관을 역임하였으며, 경제기획원 차관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동자행정의 최고사령탑을 맡았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호남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았으나 그의 폭넓은 실무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행정부에 더 머물러 있어 주길 바랐다.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은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일대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개발을 요구하

고 있다. 전환기 동자행정을 책임진 진남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당면과제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았다.

• 동자부에 오신 후 에너지소비 10% 절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 그동안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여름철 전기부족을 타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계 및 관련되는 많은 분들이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해야겠다는 인식을 새롭게 했고 그 결과 에너지절약의 분위기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에너지절약은 단기적·즉흥적 조치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체 에너지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에너지효율을 높여야겠다는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 성과는 기대만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무실·공장 등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는 轉機를 금년에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 작년도 석유도입액이 100억달러에 달했고 국내 에너지소비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석유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석유수입만 100억달러인데 다른 에너지를 포함하면 125억달러입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총수입액의 15% 정도가 되지요. 따라서 에너지절약, 특히 석유류 소비의 절약은 국제수지 방어를 포함해 거시경제운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3~4년 동안 석유소비가 연평균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기



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석유류 수입증가율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산업용 석유의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석유화학 시설의 증대에 따른 나프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한 석유 발전소의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발전용 벙커C유의 소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자가용 보급의 확대에 따른 휘발유 소비와 소득증대에 따른 클린에너지 선호 현상도 석유소비 증가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 지난해에 이어 올 해에도 전력예비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여름의 전력수급 상황이 지난 여름보다 나아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집니다. 지난해의 전력예비율은 약 4~5%로서 70~80만KW에 불과했는데, 만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하나가 서버리면 제한송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올해에는 당초 예상대로라면 2.5%정도 예비율밖에 없는데 지난해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서인천화력발전소, 평택발전소를 여름이 오기 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름철에 실시했던 다수용가에 대한 전기절약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예비율을 8~9%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에어컨이 제일 큰 문제인데 올 여름에는 날씨가 얼마나 더울까 하는 점과 지난해 여름같이 많은 국민들이 협조와 호응을 하여 주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지금과 같이 전력예비율이 낮아진 것은 80년대 후반 이후 발전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당시와 비교할 때 지금은 에너지와 관련된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했습니다. 그때에는 전력예비율이 40~50%에 이르고 한전 이익금이 누적되어 계속 발전소를 짓는 것이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새로운 발전소를 짓지 않은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예비율이 40~50%일 때 계속 발전소를 건설하였다면 작년 여름에 걱정없고 편안히 지낼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선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에너지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던 점은 비



난받을 수 있겠지요.

• 금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UN환경 개발회의를 계기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의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주배출원인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직접·간접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기본적으로 원자력·LNG·풍력·태양력·조력 등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에너지가 주에너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측면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대종은 역시 원자력과 LNG입니다.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LNG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은 눈에 띄게 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알래스카를 비롯하여 사할린, 야쿠츠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에서 LNG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에 착수해서 공급하기까지는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기 때문

“  
**올여름의 전력수급상황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전망입니다.  
 서인천화력발전소와 평택발전소를  
 여름이 오기 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多需用家에 대한  
 전기절약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예비율을 8~9%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

에 그때까지의 공급확보가 큰 과제입니다. 전력의 경우 작년에 원자력 발전 비중이 5할을 차지하였습니다만,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나, 또한 원자력은 기술개발에 따라 우리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에너지 수요관리와 함께 에너지 안정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석유개발 수입 비중은 현재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얼마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 현재 예멘에서 연간 원유도입량의 2% 정도를 개발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개발 수입률을 10%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가 독과점 체제 하에 있는 국내 에너지산업의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함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동감입니다. 작년에 이미 가격 자유화가 이루어진 6개 유종 이외에 휘발유와 등유의 가격을 추가로 자유화하였고 석유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정유업과 석유제품 유통업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관리가 격체계 속에서 굳어진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자율화 정책이 가격과 서비스의 경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거의 제반 규제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산업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규참입을 허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과당경쟁의 우려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의 자율화정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업의 유효경쟁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의 개방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외국자본의 직접참여는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석유산업의 경우 기존 정유사와의 기술 제휴, 노하우 전수, 그리고 자본협력 등에 국한하여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발전설비의 경우 한국중공업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4~5년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장관께서는 주요 경제부처에서 두루 경력을 쌓으시고 경제학박사 학위까지 받으시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경제관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공무원의 바람직한 자세에 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事實을 사실대로 냉철히 보고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셜(A. Marshall)이 말한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갖는 것이 경제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어떤 대응책 강구시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논리성도 중요하지만 역사와 문화, 전통,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陳장관은, 지금 우리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조화시켜야 할 시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경제논리만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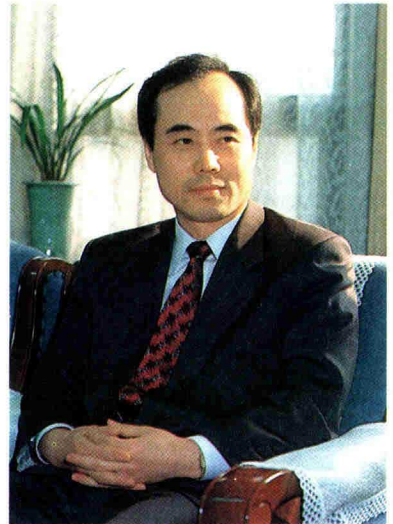
고 정책을 세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고려도 필요해졌기 때문에 公職者들은 중심을 지키고 民意는 폭넓게 수렴하되 일단 결정된 정책은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陳장관은 우리 경제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지금까지 애써 추구했던 정치민주화도 그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公職者들의 책무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지난 3~4년 동안 정치민주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이러한 것들은 경제발전의 토대 위에서 정치민주화를 해나가는 전환기에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에너지절약을 일차적으로는 여름철 피크수요기에 전기소비를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에너지부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과소비와 비능률을 제거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또 다시 뿔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하나의 정신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면 합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계속된 만남에서 진념장관은 시종일관 활기찬 어조로 에너지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진솔하게 밝혔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申義淳 연세대 교수

1972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1년부터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자원경제학」, 「한국의 에너지수요와 생산요소간 대체성 분석」 등이 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체득한 그는 에너지정책의 관리자로서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등 에너지수요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재삼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통경제관료인 陳장관이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김원**

# 사회간접자본 확충정책의 방향과 향후과제

경제정책해설

최근 1~2년 사이에 '사회간접자본'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용어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주요 관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분야별로 문제의 심각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처방이 마련된 적은 많았지만, 최근의 상황은 거의 모든 社會基幹施設이 단순한 부족상태를 지나 한계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과거와 뚜렷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앞으로도 경제규모의 확대, 사람이나 화물 이동의 증가로 교통량이나 전력·用水 소비량의 증가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현재의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사회간접자본 부족현상,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구조나 국토구조가 특수하여 국가 중추 기능이나 인구·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수도권과 유일한 국제수출항인 부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國土軸에 모든 주요기능의 집중이 가속화되어 수송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의 개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人口구조가 고도화되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이나 用水의 소

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부존 자원의 부족이나 지하수 이용 가능성이 적은 지질구조로 인해 전력과 用水의 부족문제도 앞으로 더욱 심각한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13일 사회간접자본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정책적 판단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인적·물적 재원을 동원하여 가장 빠른 시간내에 문제해결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을 출범시켜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바 있다. 同企劃團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앞에 두고 있기도 하다.

## 사회간접자본 문제해결의 제약 여건

사회간접자본 부족문제는 우리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커다란 불편을 겪는다는 정도를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곧바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배철호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서기관

할 수 있는 여건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곳곳에서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상존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제가 점차 진전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문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는 막대한 用地가 소요될 뿐 아니라, 발전소나 수자원의 개발에는 適正立地가 신중히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의 용지매입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을 뿐 아니라, 높은 보상단가를 요구함에 따라 투자비를 늘려도 실제 사업량은 늘어나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착수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문제가 심각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고려의 차원에서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가 아직도 非一非再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보상적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나 정치적 압력이 漸增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시 거꾸로 재정팽창 논란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제약여건 외에 물가안정 논리에 의해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고 있는 석유류가격이나 각종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용료체제도 유류의 과다소비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과 불필요한 교통량 유발의 근

본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구가 多元化되어 있는 문제도 보이지 않는 큰 제약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

國家基幹設施의 확충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므로 재원의 한계가 곧 시설확충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규모를 확대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어 지난해 追更을 포함해서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의 비중을 종래의 8% 수준에서 10%로 제고시켰다. 예를 들어 수송부문의 중앙정부투자의 경우 89~90년간 2조8천억원이었음에 비해 91~92년 2년간은 5조7천억원으로 배증되었다.

###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대폭확충

이러한 정부재원만으로 투자소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확대와 함께 예산의 재원확보 방안을 대폭 보완하였다. 우선 5년간 동결되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실화하였는데, 연간 1,2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90년 고속도로 투자규모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항만물동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부산시내 항만관련 도로투자를 위하여 컨테이너稅를 신설하여 연간 400~500억원을 확보하였다. 그외 용지보상채권 발행,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부투자기관의 法人稅 감면, 공공기금의 고속도로투자재원 활용, 列車長大化事業의 리스지원, 중동·평촌 신도시 개발이익의 인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활용 등의 다양한 재원조달수단을 강

〈표〉 사회간접자본부문 정부예산투자규모

(단위 : 억원)

	89~90			91~92			B/A (배수)	
	89	90	계(A)	91본예산	91추경	92예산		계(B)
도	8,725	10,375	19,100	13,866	7,613	19,898	41,377	2.2
국	6,163	6,841	13,004	6,845	3,900	8,661	19,406	1.5
고속도로	2,562	3,534	6,096	7,021	3,713	11,237	21,971	3.6
철	2,061	2,255	4,316	2,849	1,226	4,833	8,908	2.1
항	2,482	2,203	4,685	2,301	801	3,351	6,453	1.4
계	13,268	14,833	28,101	19,016	9,640	28,082	56,739	2.0

구함으로써 예산규모의 확대와 함께 종래 추세로 계속할 때보다 96년까지 약 7조원 수준의 투자규모를 확대시켰다.

### 효율을 극대화하는 투자방식의 정립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애로가 가중된 것은 그동안 투자규모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데도 원인이 있지만, 충분치 못한 자원 자체를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만큼 部門間·部門內 사업간 효율성에 근거한 우선순위 설정노력이 미흡했던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사업 결정

그동안 애로가 가중된 부분에 해결노력을 집중하기보다는 균형배분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사업을 장기간, 여러곳에 걸쳐 느슨하게 추진함으로써 適期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만 누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지난해 追更편성 때부터는 가능한 한 경제적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자사업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종합적 대처방식(system approach)을 도입코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시설능력이 이미 한계수준을 넘어 사업 자체의 투자 효율성은 높으나 전반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투자우선순위가 낮았던 철도·항만·용수 등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당초 전액 도로투자에 투입되도록 계획된 91년 추경안에 조정하여 지하철에 1,726억원, 항만에 800억원, 用水에 236억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물류어로 타개가 가장 절실한 京釜軸과 京仁軸 문제의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해당권역 별로 도로·철도·공항·항만의 관련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수도권 國道혼잡·부산시내 교통문제 등 대책도 수립

종전에는 항만건설과 배후수송로 연계, 시내와 지역간 교통시설의 연계를 계획단계부터 충분히 고려치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어 방치되어 왔던 수도권 國道혼잡, 부산시내 교통문제 등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도 함께 수립하였다. 首都圈의 경우 도시내 國道에 대한 지방양여금 집중 지원을 제도화하여 양여금 중 1,300억원을 애로구간에 집중 투입토록 하였다. 부산은 컨테이너稅 도입을 계기로 부산시내 항만배후도로 확충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시내에 산재

한 컨테이너장치장을 시외로 통합이전도록 계획을 확정·추진중에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可用財源의 제약 속에서도 수도권·부산권 그리고 兩圈域 연결구간 수송여건이 94년을 전후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였다.

### 용지보상비의 안정

최근 수년간 계속된 용지보상비 급등추세는 사회간접자본투자 애로를 가중시킨 주요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치 않고서는 투자재원을 아무리 늘려도 事業物量은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용지는 미리 정해 놓고, 오르지 않는 가격으로 원활히 구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제도는 사업 시행에 관한 기본구상이 발표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후 상당기일이 경과하여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비로소 보상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보상가격은 실제 보상하는 시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한 가격으로 보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해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사업계획확정 단계의 가격으로 補償評價基準을 앞당기고, 그 이후의 개발이익을 예상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13일 사회간접자본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정책적 판단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人的·物的財源을 동원하여 가장 빠른 시간내에 문제해결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과다하게 상승하는 가격은 보상에서 배제토록 하였다. 즉 종래의 시가보상 기준을 사업확정시점의 공시지가에 주변 시·군의 평균지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빠른 기일내에 보상이 종료될 수 있도록 채권보상제도도 도입하여 현금예산의 제약을 극복토록 하였다.

#### 교통량 축소대책의 추진

지금까지 교통부문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어 시설을 공급하는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시설확충만으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10년 이내 자동차 1천만대 이상의 시대가 到來할 것이 분명하므로 대도시권 출퇴근이나 장거리 수송에 있어서 대량교통수단 위주의 시책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문제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91년 追更부터 대량수송수단인 철도·연안해운의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경부선의 경우 기존 선로능력을 높일 수 있는 컨테이너 열차와 여객열차의 장대화를 지원하여 92년말부터 철도수송 능력을 화물 24%, 여객 32%를 증대시키도록 하였다.

#### ■ 대량수송수단 확충에 역점

그리고 광양항을 연계하는 전라선 개량사업을 집중지원하여 완공시기를 96년에서 95년으로 1년 단축하고, 경기도 부곡과 양산 컨테이너기지 건설로 철도 컨테이너 수송능력을 연간 35만TEU에서 95년까지 106만TEU까지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경인복복선 전철사업을 본격지원하여 서울—구로간은 94년에서 93년으로, 구로—부평간은 97년에서 94년으로 완공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외 연안해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철강·시멘트의 경우 主要要處인 수도권에 부두시설의 여유가 없어 대부분 公路로 수송함으로써 도로적체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고려하여 아산항을 95년도까지 개발, 연안해운 활성화의 장애요소인 선석 부족현상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화물유통체제 혁신을 위한

##### 제도개혁 추진

이러한 조치 외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로서 가장 큰 요인의 하나인 화물유통체제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혁도 교통량 감소와 物流費 절감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화물유통체제는 무역규모가 1,500억달러가 넘어선 오

늘날에도 과거 70년대 초반의 전근대적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모든 수출입 관련 절차의 처리와 운송수단 수배를 일일이 사람이나 서류로 처리를 해야 하는 비능률을 그대로 안고 있다. 또한 그런 모든 과정이 복잡하여 불필요한 교통량을 유발시키고 人力·時間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貨主는 자기 화물의 소재조차 파악치 못하여 수송계획이나 생산계획을 적기에 수립·시행할 수 없어 교통량의 유발 외에도 항만이나 각종 보관창고시설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항만과 도로적체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송 및 정보거점이 되는 내륙 컨테이너기지과 복합화물터미널을 부곡과 양산에 건설하여 수출입 및 국내화물의 集荷·혼적·보관·처리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후된 輸送構造를 개선하고 통관 등 무역관련 절차 및 서류간소화를 추진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전산망도 구축할 수 있도록 91년부터 세부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체제 개선과 무역자동화 전산망이 구축되면 화물 유통에도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여 유통시간의 대폭 단축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물류이동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國家基幹施設の 확충에는 대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므로  
 재원의 한계가 곧 시설확충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규모를 확대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두어  
 지난해 追更을 포함해서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의 비중을 종래의 8% 수준에서  
 10%로 제고시켰다



**사회간접자본 수요를 최소화할  
 국토구조의 개편**

지금의 국토구조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주요기능이 수도권과 수도권-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축에의 집중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현상을 사회간접자본 측면에서 본다면 建設單價가 가장 비싼 수도권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소요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집중억제시책이 필요하며, 한계에 이른 경부축의 기능을 새로운 軸으로 다원화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에 대하여 안산 신도시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全額을 수도권지역 사회간접자본에 투입토록 하였고, 인천북항 대신 아산항을 조기 개발토록 하고, 인천 송도 앞바다 신도시개발은 교통·용수문제 등에 관한 철저한 검토 후 시행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경부축 집중완화를 위해서는 인천항 기능보완과 연안해운기지로 육성키 위한 아산항을 94년까지 총 13개 船席을 건설하고 부산항을 보완할 광양항을 95년까지 4선석, 2001년까지 10선석을 건설하여 제2의 수출 관문으로 서해안시대 구축의 핵심전략사업이 되도록 방침을 확정·추진중이다. 아산과 광양항

만 개발에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안산-당진 구간 및 남원-순천간 국도확장, 함양-진주간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 개량 등의 배후수송망 확충도 연계추진토록 하였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범국민적 핵심과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선진국 진입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社會間接資本投資企劃團이 1년전 발족된 후 관계부처와 합심하여 사회간접자본문제를 범국가적 주요과제로 부각시키고, 많은 현안과제를 해결하였으나 國家百年大計 측면에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급한 당면과제를 해결함에 주력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방안을 개개 事案別 차원이 아닌 제도적 차원의 장치를 마련하여 항구적 해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현재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간접자본 예산소요액(96년까지 약 40조원 추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투자효율을 제고하는 문제로서 현재 수도권집중이라는 파행적

國土構造를 두고는 투자재원의 거의 전부를 수도권에 투입해야 될 것이므로 수도권에 대한 강력한 집중억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는 물리적 규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므로 국토구조의 개편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쏟아지는 욕구를 수용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追加稅源이 확보되어도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수요억제정책과 이 욕구를 경제적 논리를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각종 보상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도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각종 관련계획을 수립단계부터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기능의 보강도 필히 고려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은 흔히 비유하는 대로 물이나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나 문제가 발생된 뒤 이를 치유하려면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政府의 시책추진에 대해 각계 각층의 지원과 공감의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의무와 부담을 나누어 진다는 마음으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글]

# 聯結財務諸表制度의 개선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 기업들은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별개의 法人格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意思決定主體의 지배하에 있게 되므로 이들을 경제적으로는 單一企業으로 간주하여 이들 기업전체의 財務狀態와 경영성과를 밝힐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財務諸表를 종합하는 절차를 聯結會計(Consolidated Accounting)라 하고 그 보고서를 聯結財務諸表라 한다.

## 聯結財務諸表의 개념 및 기능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첫째, 聯結財務諸表는 지배·종속회사 전체의 재무상태·경영성과 등의 파악을 가능케 한다. 지배·종속회사가 투자관계 자금대차·지급보증·경영자의 교류·판매·원료공급 및 생산활동 등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경우 情報利用者(투자자·채권자·기업경영자·정책당국)에게 지배·종속회사 전체에 대한 會計情報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개별재무제표의 왜곡 또는 粉飾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에는 상호출자·상호거래·상호지급보증 등의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본·자산의 규모 또는 영업실적 등은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마련이어서 個別財務諸表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작성과정에서 이러한 內部去來 등은 相計되어 없어지므로 회계정보 조작이 어렵게 되어 기업회계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연결재무제표제도는 企業課稅의 실질적 합리화에 기여한다. 연결재무제표제도는 원래 美國에서 거대기업이 누진과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을 소규모로 분산시키는 현상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개발된 제도로서 聯結納稅申告制度(consolidated income tax return)를 채택하게 될 경우 기업과세의 실질적인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세제상 채택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제도가 정착될 경우 지배·종속회사 상호간에 소득의 移轉·分散을 통한 租稅回避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豫防的 機能은 여전히 갖게 된다.

넷째, 경제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이우철  
재무부 증권업무과장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정부의 독과점 규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등의 경우에 있어 지배·종속회사 전체의 재무·경영정보를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연결재무제표제도상의 지배·종속회사의 범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證券管理委員會는 연결재무제표기준 제3조에서 相互聯結義務가 있는 지배·종속회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支配會社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① 종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② 종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0% 초과 50% 이하를 직·간접으

로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회사의 경우

③ 종속회사의 최대주주이면서 貸與·담보제공 및 支給保證額의 合計額이 자기회사 자본금의 30% 이상이거나 종속회사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④ 종속회사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함)로서 인사·재무 등 경영정책을 지배하는 경우

###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연결재무제표 기준상의 聯結範圍와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기준상의 연결대상범위는 회사가 회사를

소유·지배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개인 대주주가 여러 기업을 傍系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결실체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경제적 실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결과 同一企業集團內에서도 여러 개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는가 하면, 기업집단내의 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실효성 있는 파악을 하는 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둘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또한 개별재무제표의 監查時 聯結會社의 재무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통하여 나타나는 재

(표 1) 주요 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과 작성실태

(단위: 개사)

기업집단	소속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회사	연결대상 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태
현대	현대자동차 등 42	현대종합상사 등 11	현대종합목재 등 29	현대종합상사 등 5
대우	(주)대우 등 24	대우전자 등 6	경남기업 등 15	대우전자 등 6
삼성	삼성물산 등 48	삼성물산 등 10	삼성전기 등 30	삼성물산 등 4
럭키금성	금성사 등 62	금성사 등 9	럭키금속 등 35	럭키 등 8
쌍용	(주)쌍용 등 22	(주)쌍용 등 6	(주)쌍용건설 등 22	(주)쌍용 등 6
한진	대한항공 등 22	대한항공 등 5	한진해운 등 8	대한항공 등 4
롯데	롯데호텔 등 32	롯데개발 등 7	롯데전자 등 10	롯데제지 등 6
선경	(주)선경 등 26	유공 등 4	흥국상사 등 9	유공 등 4

註: \* 해외현지법인은 제외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선방안의 요체는 연결재무제표의 作成·公示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公認會計士에 의한 外部監査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시행상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1단계 개선안을 추진하고 상당한 준비가 갖추어진 이후에 2단계 개선안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표 2〉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태

(단위 : 개사, %)

	87	88	89	90
작성대상회사 <sup>1)</sup> (A)	271(111)	275(121)	262(145)	334(219) <sup>2)</sup>
작성한 회사(B)	139( 73)	163( 85)	176(103)	246(169)
외부감사실시여부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작성비율(B/A)	52.3(65.7)	59.3(70.2)	67.2(71.0)	73.6(77.2) <sup>3)</sup>

註 : 1) 증권관리위원회 제정 연결재무제표 기준상의 작성대상회사

2) 괄호 안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임.

3) 작성비율이 매년 증가한 이유는 미작성시 증권위가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에 기인함.

〈표 3〉 외국과의 연결재무제표제도 비교

	미 국	일 본	한 국
이용실태	주재무제표로서 광범위하게 이용 세법에서도 연결재무제표 이용	상장법인의 사업 보고서,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증권거래법 제5조, 제24조)	이용이 거의 안됨(작성 및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지 않는 등의 이유에 기인)
연결재무제표의 지위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고, 개별재무제표는 참고자료임	개별재무제표 본위이고, 연결재무제표는 참고자료임	개별재무제표 본위이고, 연결재무제표는 참고자료임
연결재무제표의 종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연결범위	의결권있는 주식 과반수의 직·간접소유	의결권있는 주식 과반수의 실질적 소유	발행주식 과반수의 직·간접 소유 실질적인 지배 • 30%이상 최대주주 • 여신, 담보제공, 지급보증 • 경영정책 지배
감사제도	감사의무화	감사의무화	의무화 안됨

註 : 국제회계기준상의 연결범위

- 의결권 있는 주식 과반수의 직·간접 소유
- 자본(equity capital)의 과반수 소유
- 계약 또는 법령에 의거 재무와 영업정책의 지배

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監査意見 決定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特記事項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현행제도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外部監査人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라 할지라도 財務諸表 利用者들이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기 위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企業會計基準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에 한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임의로 작성·공시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監査人들은 監査意見を 표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검토·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실정에 알맞은 연결재무제표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기업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키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들에 의하여 계속 지적되어 왔다.

## 외국의 연결재무제표제도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를 미국·일본 등의 연결재무제표제도와 관련하여 이용실태·연결재무제표 지위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 연결재무제표제도의 개선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큰 이견이 없다.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선방안의 요체는 연결재무제표의 作成·公示를 의무화하고 반드시 公認會計士에 의한 外部監査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재무제표의 의무화를 일시에 모든 기업에 대하여 시행할 경우 기업에 부담을 주게 될 뿐 아니라 현단계에서는 외부감사를 담당해야 할 會計業界에서도 충분한 수용태세가 완비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 할지라도 급격한 제도변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시행상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은 1단계 개선안을 추진하고 상당한 준비가 갖추어진 이후에 2단계 개선

안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 ■ 1단계 개선방안

1단계 개선방안은 지난 4월 證券去來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上場會社를 작성주체로 하여 시행키로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從屬會社가 있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토록 의무화했다. 즉 현행 증권거래법령에 의하여 상장회사들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를 證券管理委員會 및 證券去來所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는데 사업보고서의 일부인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투자자나 채권자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사의 개별적 재무정보 이외에도 聯結對象會社까지 포함한 재무정보도 손쉽게 파악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제출기한과 관련해서는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가 모두 작성된 후에 작성될 수밖에 없는 점과 제도개선 시행의 원활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회계연도 종료후 90일 이내)후 30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92년 7월 1일에 새 會計年度가 시작되는 회사의 경우 93년 10월말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제도시행과 더불어 현행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상당한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고, 미비되어 있는 연결재무제표 監査基準도 새로이 제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작업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 진행중에 있다.

둘째, 상장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의해 證券管理委員會 등에 제출하는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경우 일반에게 공시되는 연결재무제표상의 회계정보는 현재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회사가 작성해야 할 연결재무제표의 종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상의 연결재무제표는 聯結貸借對照表와 聯結損益計算書 2종류뿐이다. 그러나 회계정보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聯結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결손금처분계산서) 및 聯結財務狀態變動表를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기준을 개정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종류에 연결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결손금처분계산서) 및 연결재무상태변동표까지 포함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연

연결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면 지배·종속회사 전체의 재무상태 및 經營成果가 종합적으로 밝혀지게 되므로 內部去來 등을 통해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진 자본규모나 賣出額, 營業利益 등은 實質價値대로 축소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재무상태 변동표를 포함시키게 될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자금의 흐름 및 변동내역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일반 투자자나 채권자에게는 회사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진단하는 데 유효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聯結財務狀態變動表의 경우 그 작성방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재무제표상의 財務狀態變動表에 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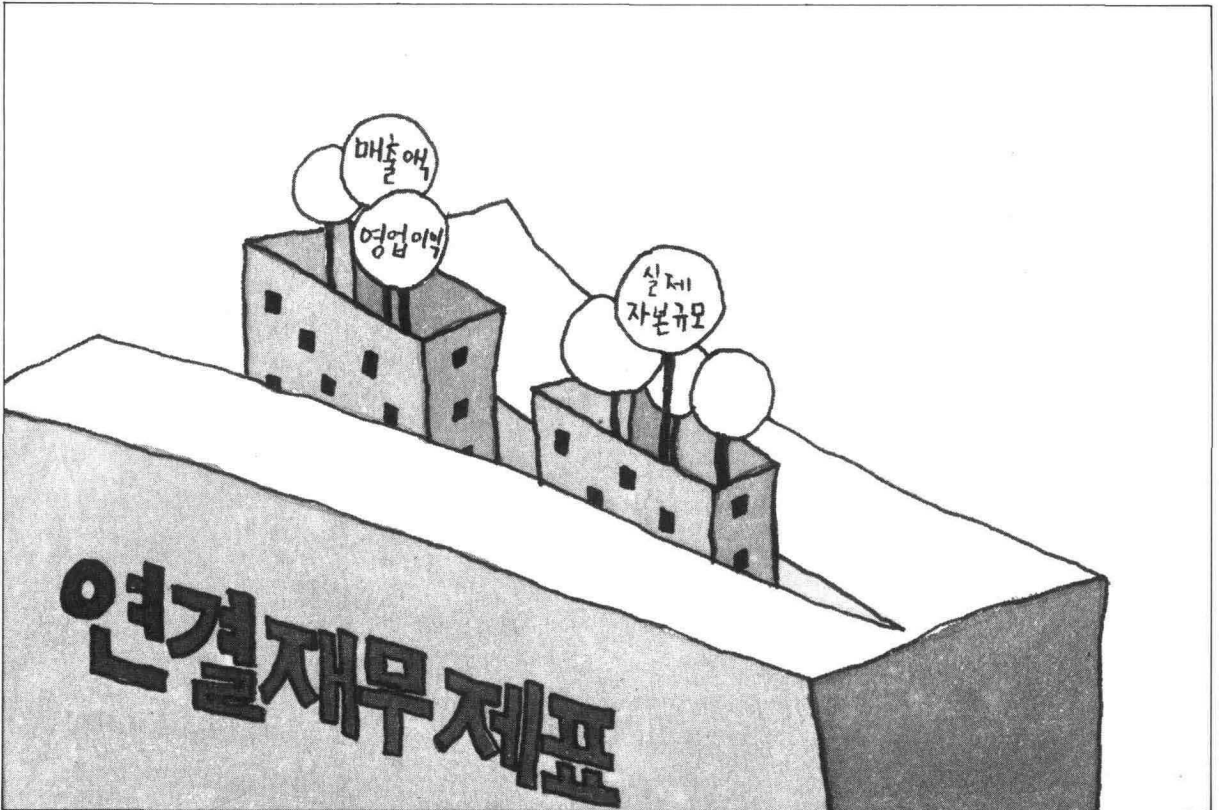
여 그 내용을 대폭 간소화하여 財務情報로서의 가치가 있고 중요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 제2단계 추진방안

연결재무제표제도 개선추진의 제2단계에서는 우선 그 시행대상을 제1단계에서의 상장회사로부터 전체 외부감사법 대상 기업으로 확대하며

기업집단 전체에 대하여 企業集團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현실에 알맞지 않다는 점은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會計情報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企業集團 聯結



財務諸表를 작성토록 하고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도 받도록 의무화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란 특정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방계적으로 지배받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당해기업집단에 대하여 특정인집단이 人事·經營權掌握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이들 기업집단 소속기업 전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종합하도록 한 聯結財務諸表를 말한다.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가 제도화될 경우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제1단계에서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등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 즉 타회사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소유·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만 본래적 의미의 聯結財務諸表를 작성토록 하고 현행 기준상의 실질지배력 개념에 의한 연결대상은 모두 개별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왜냐하면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 概念定立의 근거가 바로 이러한 실질지배력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제도가 시행될 경우 제도의 중복 시행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제도는 전혀 생소한 새로운 제도가 구상 시행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상의 연결범위 중 實質支配力에 의한 연결범위를 별도로 발췌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2단계에서의 제도개선은 현행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의 改正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利害關係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의 개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대상회사의 범위,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자,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방법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공청회 등의 輿論收斂過程을 거친 후 결정할 계획이다.

### 聯結財務諸表制度 개선이 企業經營에 미치는 영향

연결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면 지배·종속회사 전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종합적으로 밝혀지게 되므로 內部去來 등을 통해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진 자본규모나 賣出額, 營業利益 등은 實質價値대로 축소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 우리 기업의 경

쟁력이 약화되고 국익에 반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에 의하여 과대포장되고 과보호받으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확한 企業價値를 올바르게 공표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經營姿勢를 갖춰야 한다. 더욱이 자본시장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투자자와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과 같은 선의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기업가치의 공시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인 것이다.

일부기업에서는 기업의 수용태세가 미비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제도의 의무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이미 18년이 흘렀으며, 현재도 상장기업의 76% 정도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왔으나 作成·公示 및 外部監査가 의무화되는만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더욱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 一般鑛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방향

경제정책해설

최근 국내 광업계는 인건비·원가 상승 등 경영여건의 악화로 생산과 개발이 극도로 위축되어 타산업에 비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사람들은 더럽고 힘들며 위험한 일을 기피하게 되어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업은 노동력 이탈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금속광업부분은 深部化 및 국제시장가격의 하락 내지 침체상태가 지속됨으로써 휴·폐광이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비금속광업이 중화학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수입자유화에 편승한 저렴한 중국산 광산물의 수입증대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수출시장마저 공략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침체되어 있는 광업부분에 새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더불어 시설의 현대화 및 국내생산 광물의 수요창출을 위한 투자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처럼 침체일로에 있는 一般鑛에 대한 부응책의 일환으로 일반광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위해 일반광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일반광 부문의 현황

우리나라의 광물수요는 80년대 이후 연평균 12.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자급률은 겨우 28.3%에 그치고 있다. 또한 광업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표 1>과 같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일반광의 경우 GNP 점유율은 지난 5년간 0.3%대에서 유지되어 왔으나, 매년 金屬鑛 700명, 非金屬鑛 200명 정도의 노동력 상실과 장기간 지속되는 低價格의 영향으로 부가가

1) 일반광이란 광업 전체에서 석탄광을 제외한 鑛을 말하는 개념임.



임규창  
동력자원부 광산과장

<표 1> 광업의 GNP 비중 변화

(단위 : %)

	83	84	85	86	87	88	89	90
광업전체	1.6	1.3	0.96	1.0	0.89	1.76	0.66	0.54
석탄광	0.9	0.9	0.26	0.66	0.58	0.39	0.31	0.23
일반광	0.7	0.4	0.70	0.34	0.31	0.37	0.35	0.31

치 생산액은 담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GNP 점유율이 0.3%선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일반광의 해외의존율은 73년에만 해도 16%에 불과했고, 생산의 41%를 수출하였으나 77년에는 수입의존율이 54%, 수출비율은 54.5%로 늘어 중화학공업 원료의 국내 공급력 부족으로 외국 광산물을 수입하고 국내 생산분은 수출하는 2중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내수 기반의 확충에 따라 수출비중은 줄어들어 90년에는 24%로 축소되었고 해외의존율은 7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반광의 賦存 및 생산현황을 보면, 국내 법정광물은 66종에 이르나 생산광종은 30종이며 부존량이 비교적 양호한 것은 겨우 15개 광종에 불과하다. 특히 금속광의 경우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국내 공급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 국내생산 광물 중 90% 이상이 비금속광물이며 이러한 비금속광은 비교적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종류도 다양하나品位가 낮고, 총생산액 중 92%는 석회석·고령토·규사 등 10개 鑛種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금속광은 부존자원이 빈약하며 총생산액 중 93%는 금·은·연(아연)·철 및 중석 등 6개 광종이 점하고 있다.

一般鑛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금속광의 경우 금이 1억 9,300만달러인데 이는 광물을 수입하여 제련후 재수출하기 때문이며, 비금속광의 수출은 4,500만달러 정도로서 주로 납석·석회석·고령토 및 활석 등이다. 수입측면에서는 금속광이 총수입액의 83.2%를 점유하며 주로 금·동·아연 및 철광석 등이 이에 해당되고, 비금속광물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이거나 또는 일부 규사·고령토 등 高品位 原料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반광의 개발현황은 금속광의 경우 금·은·동광이 대부분으로 61개 광산이 稼行中이며 비금속광의 경우는 592개 광산이 가행중이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광산수는 금속 및 비금속 합쳐서 겨우 1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금속광은 대부분이 고령토·석회석 및 규석·규사 광산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들 비금속광 생산광산은 생산규모가 크더라도 비교적 단순처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원료의 부가가치가 낮고, 생산규모가 적은 광산의 경우는 영세처리 방법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비금속광업계는 원료생산에 있어 전반적으로 附加價値가 낮아, 경쟁력의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일반광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문제점

앞서 지적하였듯이 금속광은 국내 부존량이 빈약하고 기술상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가 어려우나 앞으로

〈표 2〉 일반광 생산현황 (90년 기준)

(단위 : 억원, 천t, %)

	금 속	비 금 속	계	비금속광물 점유율
생 산 액	428	4,450	4,928	90.3
생 산 량	727	55,098	55,825	98.7
비 고	철 : 298	석 회 석 : 48,806		
	연·아연 : 74	고 령 토 : 1,446		
		규석·규사 : 2,858		

〈표 3〉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수출입 현황 (90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금 속 광	비 금 속 광	계	비금속 점유율
수 출	193	45	238	80.7
수 입	1,464	296	1,760	83.2

정부에서는 앞으로 비교적 매장량이 풍부한 국내 비금속광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제기술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업체에 활용토록 유도함으로써 일반광 개발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輸入代替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비금속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외국산 고품위광 등을 수입, 국내에서 가공처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고순도화함으로써 관련제품의 수입대체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금속광물의 경우 국내 부존량이 풍부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경우 內需의 확대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술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금속광물은 산업발달에 따라 중화학공업 부원료 및 화학공업 원료, 일반공업원료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첨단과학의 발달에 따라 비금속광물의 새로운 특성을 개발한 신소재·신물질의 비금속광 원료가 전자재료, 반도체 등 첨단부문에 확대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 비금속광물과 관련된 주요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현황을 보면, 비금속광물의 경우는 대부분 精製 또는 반제품화된 상태의 광물소재로서 광물학적 특이성 또는 국내의 정제 및 가공처리기술의 미비로 인해 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비금속광물 관련 광물소재의 수입액은 연간 약 9억달러 이상으로서 규석·규사 및 고령토 등이 수입액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비금속광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다음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국내 비금속광상은 부존상 產地에 따라 광물조성이 상이하여 원료의 균질성이 결여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賦存 鑛體는 저품위이다.

둘째, 原鑛 부존상황의 국가별 차이로 선진외국의 동일기술 적용이 곤란하며, R & D투자의 부족 등으

로 인해 국내 정제기술 개발 및 기술 축적이 부진하다.

셋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나 국내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필요한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광물가공품은 소량 다품종이나 국내시장이 협소하므로 경제성이 낮다.

다섯째, 광물가공업은 광산과 별

〈표 4〉 일반광 개발 현황 (90년 기준)

(단위: 개소, 명)

	비금속	금속	계
광 산 수	592	61	653
종 업 원 수	6,756	2,774	9,530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 광산수	11	3	14

〈표 5〉 비금속광물과 관련된 주요 부가가치 제품의 수입현황

(단위: 억원)

광종	개발제품 및 용도	수입액	수입요인
석회석	탄산 칼슘 (중탄, 경탄)	62	-제지용 경탄(규비형 粒度 0.15 $\mu$ m제품)은 국내 생산 안되고 있음
	칼슘화합물	1,000	-소량 다품종(35종)이며 국내시장 협소로 경제성 없음
고령토	제지용	160	-국내에는 6각 板狀의 Kaolinite부존이 없어 수입 불가피
	요업 및 充填製用	142	-국내원석 확보는 가능하나 다양한 용도에 부응하는 物性조절 기술부족
활 석	식품 및 제지용	85	-살균처리 및 백색도 향상기술 낙후 -국내 고품위 원광이 부족하므로 수입산과 혼합 사용
흑 연 (인상)	흑연 가스켓트 및 도료용	100	-미국·일본·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생산기술 보유

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정부의 금융지원 수혜대상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부가가치 향상방안 마련

우리나라에 부존되어 있는 일반광 중 금속광물은 품위뿐 아니라 매장량이 매우 빈약하여 개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금속광물자원의 경우는 매장량은 풍부하나 품위가 낮은 관계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활용단계에 이르고 있지 못한 실정이지만, 기술개발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산업원료 및 소재 원료의 국내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비교적 매장량이 풍부한 국내 비금속광

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제기술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업체에 활용토록 유도함으로써 일반광 개발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輸入代替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비금속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방안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부가가치 창출이 유망한 鑛種을 선정하여 우선지원하며 둘째로, 광물가공업계 및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함으로써 단기간내에 산업화를 적극 유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有望鑛種의 선정기준은 국내 부존량이 풍부하여 자급률이 높고, 산업체에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그밖에 加工製品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광종을 중심으로 하여 납석·활석·흑연·석회석·고령토·규조토·규석·규사 및 중정석 등 9개 광종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9개 광종 중 업체에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 향후 3~4년 이내에 산업화 가능성이 있는 고령토 등 5개 광종을 우선 연구대상 광종으로 선정하여 올해부터 한국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産·學·研 공동개발체제로 기술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앞으로 4년 동안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인바, 사업 최종단계에는 파이롯트 플랜트 건설 및 試製品 생산후 업계에 기술이전을 추진코자 하며, 그밖에 우선 추진대상 5개 광종을 제외한 4개 광종에 대해서는 95년 이후 연차적으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非金屬鑛物 자원은 다른 자원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대량으로 부존되어 있으나, 활용기술의 낙후로 인해 低品位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온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산업의 발전과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각종 수요원료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산 저품위 원광의 低價 수출 및 高價의 정제품역 수입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적인 비금속광물의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수립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관  
소재]

〈표 6〉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광종별 세부 추진계획

광종명	내 용	제 품 용 도
고령토	微粉體 제조기술	페인트, 전선피복
활 석	저품위 원광 정제기술(회수율: 40%→70%)	제지용, 요업원료용
납 석	습식 정제기술( $Al_2O_3$ 17%→25%)	유리섬유, 고무충전제
흑 연	정제기술	가스켓트, 내화물
석회석	경탄 칼슘 제조기술	제지용

# 아동 건전육성시책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는 아동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발전의 미래주역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제도 가운데 지배자의 施惠的 차원에서 아동을 구호한 기록들이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는 6·25로 인한 전쟁고아의 수용구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일부인 公的扶助에 불과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아동복지법’(1961.12)이 제정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아동복지시책은 국가재정사정 등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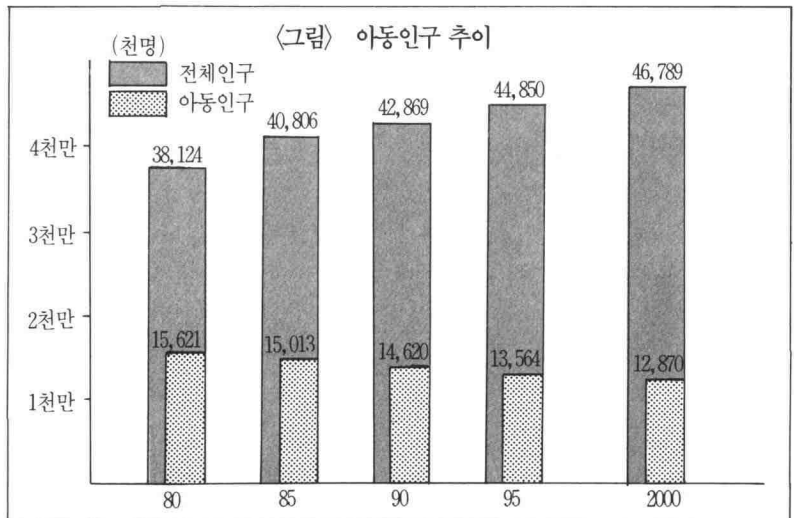
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불우아동에 대한 사후조치적이고 구호적인 차원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시책을 모든 아동의 건전한 출생과 성장·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아동의 생활환경

아동인구는 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인구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힘입어 매년 감소되는 추세이다.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80년도에 1,562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였으나, 9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34.1%로 낮아지



변희연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장



고 2000년도에는 27.5%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를 한 두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의식이 정착되면서 아동인구는 감소되는 추세이나 아동의 생활환경과 의식은 크게 달라져 가고 있다. 핵가족화로 가정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식품·보건·공해문제 등 아동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학대·遺棄, 아동을 이용한 公演行爲 등과 같은 사례는 아동건전육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 아동애호정신의 함양

우리 사회는 조부모·부모·손자녀가 한지붕 아래서 생활하는 가족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아동은 가문의 代를 이어나갈 귀중한 존재로 보호되고 양육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오늘날 높은 교육열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간섭으로 인해 의타적이며 연약한 인간으로 키우게 된다는 부정적인 면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범국민적으로 아동애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제도를 마

련·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 날’의 제정 시행과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의 제정이다.

‘어린이 날’은 1923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70회째를 맞고 있는데, 75년에는 이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어린이를 위한 축제일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온국민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1957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88년 5월 5일 어린이 날을 기하여 시의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선포하였다. 이 憲章은 전문과 본문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의 출생·건강·가정·교육·정신적 훈련·오락·노동 등 어린이가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고, 부모와 사회, 그리고 어린이 스스로의 이념적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요보호아동 발생의 예방

부모로부터 이탈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산업화에 따른 각종 재해로 부모를 잃었거나 질병 등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미혼모에 의한 사생아가 대부분이고 가출하거나 迷兒가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책 기본방향을 아동이 가능한 한 가정내에서 양육 되도록 지원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로부터 이탈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전국의 공단이나 취약지역에 아동상담소 50개소를 설치하고 아동상담요원 380명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7,586명의 지역아동위원을 위촉하여 지역사회 아동문제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85년부터 ‘어린이찾아주기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棄·迷兒 신고체제를 갖추었다. 기·미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시·군·구 및 경찰관서와 연계된 전용전화인 182번에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어린이재단이 ‘어린이찾아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棄·迷兒의 사진·이력·특징 등이 기록된 카드가 비치되어 있어 연고자가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다. 참고로 91년까지 동센터를 통해 연고자에게 인계된 아동은 1,211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보육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중인 96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등  
 저소득층 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 불우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불우아동은 시·군·구 및 아동상담소를 통하여 국내입양시키거나 가정위탁보호를 의뢰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어려울 경우 복지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가능한 국내입양이나 가정위탁보호 등을 통하여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민의 의식이 많이 변화되어 입양 희망가정이 크게 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종전에는 남자아이의 입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여자아이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우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양부모 입장에서 입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性別·연령·혈액형 등 까다로운 선정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요보호아동은 우리 책임하에 보호육성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로, 96년부터는 國外入養이 일절 불허된다.

입양과 가정위탁보호 이외의 아동은 복지시설에 수용하고 있는데, 3세 미만은 영아시설에, 3세 이상 18세 미만은 육아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시설은 전

국에 279개소가 있으며 2만2,327명이 이곳에서 생계보호·의료보호·교육보호를 받고 있다.

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실업계)까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교통비·교복비·학용품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12세 이상 아동에게는 1인1技의 기술습득을 목표로 자동차·전기·전자·배관 등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보호아동은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들이 취업하여 사회에 적응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설퇴소아동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시설과 사회의 중간적 집 형태인 자립생활관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자립생활관은 보호시설을 나온 아동이 취업후 숙식을 해결하면서 자립터전을 마련하

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보육시설의 확충

기혼여성의 취업이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정의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90년도부터 보육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밀집 지역에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일반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보육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1월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종사자 양성·보육프로그램 마련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사업장 근로여성을 위하여 500인

〈표〉 보육시설 현황(91년 12월말 현재)

(단위: 개소, 천명)

구 분	시 설 수	보육아동수
국·공립보육시설	503	37,017
민간보육시설	1,217	36,099
직장보육시설	19	712
가정보육시설*	1,931	15,613
계	3,670	89,441

註: \* 10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는 소규모 시설임.

이상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공업단지 지역에 공단보육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현재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기존 아파트 지역이나 주택단지 등 민간보육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보육시설인 가정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공동주택단지를 500세대 이상 조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보육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중인 96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등 저소득층 아동 전체를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보육경비 지원도 지원범위와 수준을 높여나감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사업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한다.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도 계속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96년도까지는 3만2천여개의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가정의 보육대상아동 전체를 보육해 나갈 계획이다.

### 불우아동과의 결연사업

정부는 76년부터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91년말부터 이웃사랑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면서 시설보호아동은 물론, 소년가장까지 모두가 사회각계 인사와 결연을 맺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결연된 아동은 후원자가 매월 5천원, 1만원 단위로 보내주는 후원금과 방문·초청 등으로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 사회와 가정이 함께 관심 기울여야

아동은 출생에서부터 성장·발달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특히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아동의식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아동문제들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음에 비추어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지행정을 펴나가기 위하여 91년도에 보건사회부에 사회복지정책실을, 시·군·구에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여 아동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아동복지시책도 복지전달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동안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6년까지 아동상담소를 인구 30만이상 시지역까지 확대설치하고 전문상담요원에 의한 상담·지도를 실시하며 단계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90년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는 보육사업은 96년까지 전체 보육대상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경비지원 범위 및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현대화하고 목욕탕·독서실·강당 등 부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도 호봉제 확대, 수당신설 등을 통해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보호아동에 대해 영양급식·학용품비 및 교복비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과 같은 복지시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가정과 사회가 함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동들을 보살피어 나갈 때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들은 국가발전의 역군으로 바르고 씩씩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 산학협동훈련의 활성화

최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섬유·조선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반도체 신소재를 위주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점차 이행하고 있고, 동일 직종의 산업에서도 생산공정의 자동화·첨단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종사하는 기능인력도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능인력양성 공급을 담당해온 직업훈련도 시대에 부응하는 정예화된 다기능 인력양성 체제를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래의 집체훈련에 현장훈련을 가미한 産學協同訓練制度를 도입·실시하게 되었다.

산학협동훈련은 독일의 二元化制度(dual system)를 모델로 하여 지난 83년부터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산하 훈련원에서 부분적으로 설치·

운영하다가 91년 1월 직업훈련기본법 개정시 우리나라 직업훈련체제내에 전면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원을 중심으로 산학협동 실시 과정의 문제점과 이의 극복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직업훈련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職業訓練基本法에 의거, 그 실시주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과 사업주가 필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 개인 또는 법인 등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認定職業訓練으로 구분

〈표1〉 직업훈련실적 및 계획(91.12.31현재)

(단위: 개소, 개, 명)

	91 실적			92계획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인원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인원
계	342	298	97,666	348	287	104,655
공공	80	149	26,441	79	138	29,655
공단	36	67	18,767	35	57	18,615
			(2,335)			(4,350)
정부	37	48	4,433	37	4	6,000
자치	7	34	3,241	7	3	5,040
사업내	156	97	51,172	165	97	50,000
			(941)			
인정	106	52	20,053	104	52	25,000

註: 괄호 안은 산학협동훈련과정 인원임.



최득소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 필자가 이 글을 쓸 당시에는 노동부 공공훈련과장이었음.

되고 있다.

## 산학협동훈련의 필요성

### 현장적응력의 제고

직업훈련기본법에서는 산학협동 훈련을 '집체훈련·현장훈련 및 敎育法에 의한 학교敎育이 상호연계된 직업훈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산학협동훈련의 근본취지는 직업 훈련기관과 학교敎育기관의 장기간 集體式 敎育이 산업현장의 수요와 괴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敎育기간중 일정기간 동안 산업체의 생산설비와 장비를 이용한 실습을 수행함으로써 훈련생의 현장적응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과거 2년 또는 3년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고도 産業體의 생산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적응훈련을 다시 거쳐야 했는데, 이는 직업훈련기관의 敎育이 산업체의 생산현장을 앞서갈 수 없다는 한계외에도 그동안 산업계의 변화, 즉 생산방식의 개선·신기술장비의 도입 등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敎育을 실시하려는 노력이 적었다는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집체식 敎育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는 생산현

장과 연결된 산학협동훈련을 통해서 경제여건 및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優秀技能人力의 양성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 양성비용 절감

기능위주의 敎育을 실시하는 직업 훈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생산방식 및 생산장비에 맞는 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나, 날로 변화하는 신기술장비를 適期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財政的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노후시설 및 장비의 교체, 부족장비의 확보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는데 산학협동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 즉, 어떤 職種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설비나 필수장비에 대한 훈련은 집체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훈련원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설비나 新裝備 등에 대한 실습은 현장훈련기간을 통해 산업체에서 숙달하도록 함으로써 직업 훈련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능인력 배출능력 확대

또한 산업체 입장에서도 산학협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공직업훈련기관과 연계됨으로써 우수한 노동력

을 조기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人力需給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공단훈련원에서는 훈련생 수요시 인력부족이 심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알선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동을 실시하게 되면, 연간 실제 배출인원이 확대되는 효과를 얻게 되어 최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학협동훈련 제도가 現場訓練 對 集體訓練 기간의 비율을 1:1로 채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 산학협동훈련제도의 내용

### 실시방법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설치한 專用施設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집체훈련(institutional training), 산업체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이라고 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2년제인 경우 종전에는 2년동안 訓練院에서 이론 및 실기훈련을 모두 배우고 수료하였으나, 산학협동을 하면서는 훈련원에서 1년동안 이론과 기초 및 전공실기를 배우고 산업체에 배정되어 나머지 1년동안 전공 및 응용실기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산학협동훈련의 근본취지는 직업훈련기관과 학교교육기관의 장기간 集體式 教育이 산업현장의 수요와 괴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중 일정기간 동안 산업체의 생산설비와 장비를 이용한 실습을 수행함으로써 훈련생의 현장적응력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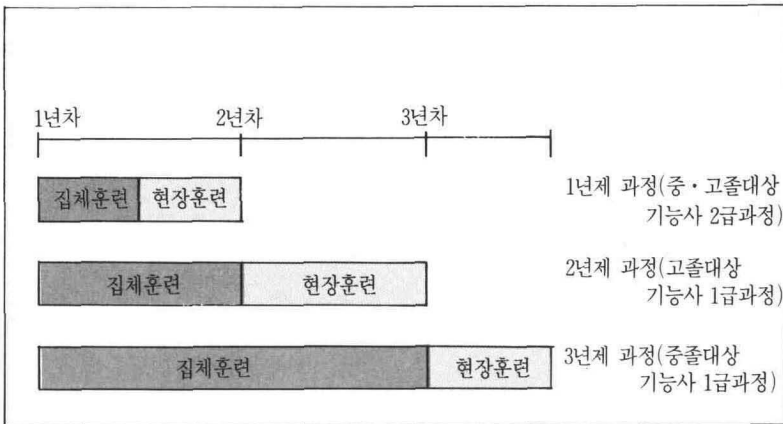
즉, 기계가공 기능사 1급의 경우는 선반·연삭·밀링·기어절삭의 각 機能要素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종래에는 각 기능에 관한 이론

과 실기 및 숙련과정을 모두 집체훈련기관에서 실시한 후 생산현장으로 진출하였으나, 산학협동을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훈련과정을 재

구성하게 되었다.

즉, 집체훈련기관에서는 각 요소에 관한 이론과 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초기능만을 익힌 후, 이 기능을 熟練化하고 응용하는 과정은 현장훈련을 통하여 산업체의 생산장비를 직접 활용하도록 수업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1〉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학 협동훈련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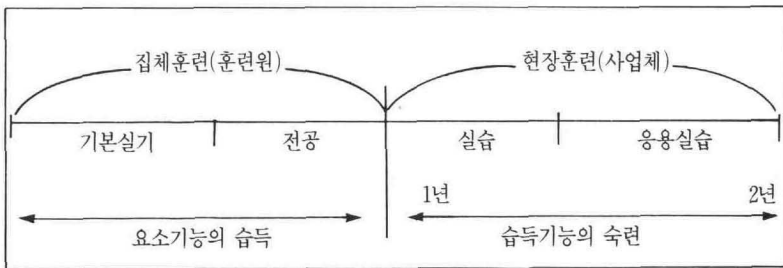


현장훈련사업체 선정

훈련생은 현장훈련시 선택에 따라 訓練約定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보수·신분면에서 다른 고용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장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체는 훈련생을 基礎職務부터 전문직 무까지의 순환배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설비와, 현장훈련교사를 갖추어야 하는데 동 훈련계획을 地方勞動官署에서 승인받게 되면 직업훈련 실시의무 사업체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림 2〉 2년제 과정의 경우



〈표2〉 사업체 규모별 현장훈련 배정현황(92.3)

(단위 : 개, %, 명)

	계	6~10	11~20	21~50	51~100	101~149	150~200	201~300	301~500	501 이상
업 체 수	391	10	27	98	78	34	39	34	23	48
(비 율)	(100)	(2.6)	(6.9)	(25.1)	(20.0)	(8.7)	(10.0)	(8.7)	(5.8)	(12.2)
배정인원	1,705	16	70	334	335	193	214	167	111	265
(비 율)	(100)	(0.9)	(4.1)	(19.6)	(19.7)	(11.3)	(12.6)	(9.8)	(6.5)	(15.5)

### 자격검정체계 정비

산학협동훈련 실시에 따라 資格檢定도 이에 알맞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應試時期 조정이고 다른 하나는 실기시험에 있어서 현장훈련 평가 성적을 일부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집체훈련을 끝마치는 시점에서 筆記試驗과 實技試驗을 모두 치르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공에 관한 이론교육이 끝나는 집체훈련 수료시 이론시험에 먼저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사업체에서 현장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검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의 성적을 평가하여 그 일부를 실기시험 점수에 반영함으로써 현장훈련의 內實化를 기하도록 하였다.

### 현행 산학협동훈련제도의 문제점

#### 현장훈련 여건 미흡

산학협동훈련제도의 성공여부는

훈련생이 배정된 사업체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이 실시되는가에 달려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장훈련실시 사업체의 실태를 보면 이에 대해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의 주요원인은 첫째, 대부분의 사업체가 현장훈련에 대한 經驗未熟과 직업훈련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적기 때문에 현장훈련생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둘째, 산업체 전반의 인력난 때문에 생산현장에서 훈련생으로서 교육시키기보다는 근로자로서 직접 實務作業에 투입함으로써 훈련과는 무관한 雜務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고 셋째, 훈련생의 직업지도 및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과 경험을 갖춘 현장훈련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의 산학협동훈련제도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 자격취득률 저조

산학협동훈련을 실시한 이후 자격

검정 합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산학협동 실시 이후 처음 실시된 지난 2월의 자격검정에서 기능사 1급과정의 경우는 70.8%, 2급 과정은 74.5%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 원인은 금년부터 技能士 1급 및 2급의 출제기준이 새로 개편되었다는 점과, 산학협동으로 이론교육을 실시하는 집체훈련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체 지원 미흡

근로자가 150인 이상인 직업훈련 실시 의무사업체가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所要費用을 직업훈련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직업훈련실시 의무가 없는 영세중소기업체의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므로 굳이 행정적으로 절차도 복잡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장훈련을 통해 훈련생을 공급받으려 해도 직업훈련의 경험이 부족한 中小企業에서는 까다로운 현행 행정절차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방관서의 간섭이 많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표3〉 기능개발센터 전담요원 확보계획(전국 24개 훈련원)

	계	92	93	94	95	96
증원	68	—	33	15	10	10
정원	120	52	85	100	110	120

註 : 센터당 인원을 현재 1~3명에서 3~8명으로 증원

산학협동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업체에 현장훈련이 조기정착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느 정도의 행정 및 기술지도가 필요하나, 이것이 규제·간섭위주로 되어서는 안되며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受惠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산학협동 활성화 대책

### 현장훈련의 효율적 관리

훈련생이 사업체에서 효과적인 현장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자체가 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공관련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체훈련기관 수료후 훈련생의 現場訓練 事業體 선정시, 반드시 기능개발센터로 하여금 훈련

실시 가능성여부를 사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여 훈련여건이 미비된 사업체로의 배정을 예방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훈련생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직업훈련방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현장훈련평가서를 보완하여 각 기능위주의 항목별 채점요소를 세분화하여 기능사로서 필요한 기능을 고루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이 성적을 실기시험 중 50% 반영하되, 나머지 50%의 실기검정에서 일정점수 이하는 완전 탈락시키는 科落制度 형태의 검정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자격수준의 하락을 방지하도록 보완하였다.

### 현장훈련 지원체제의 강화

산학협동의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업체에 현장훈련이 조기정착되



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느 정도의 행정 및 기술지도가 필요하나, 이것이 규제·간섭위주로 되어서는 안되며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受惠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업체의 산학협동 훈련 지원업무를 전담수행하기 위해 공단산하 훈련원의 기능개발센터 조직 및 인원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별도의 예산을 확보·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개발센터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는 事業主의 훈련계획서 작성요령 지도, 훈련생 관리방법, 현장훈련평가성적 작성요령 지도, 필요한 교재·교육보조자료 대여 및 활용안내, 훈련기법 및 강의지도안 작성요령 지도, 훈련실시능력 확대유도, 훈련진행상황 점검, 기타 현장훈련 실시에 관련된 제반사항 지도 및 職業訓練促進에 관한 홍보 등을 들 수 있는데, 앞으로 산학협동훈련제도의 정착여부는 이들의 임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집체훈련기간 및 내용의 합리적 조정

당초 91년부터 산학협동을 실시할 때는 공단훈련원의 全課程에 대해 집체훈련 對 현장훈련의 비율을 1:1로 적용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중졸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사 1급 과정은 이론시간을 다소 연장하여 그 기간비율을 2:1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사 2급 1년과정은 종전과 같이 집체훈련 1년으로 운영하되 기존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협동과정의 집체훈련기간중의 教育內容도 교양 및 응용실기의 비율을 줄이고 전공실기와 전공이론을 강화하여 資格檢定合格率이 향상되도록 수업과정도 밀도있게 재구성할 것이다.

### 중소기업체 지원강화

사업내 직업훈련 지도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 불필요하게 복잡한 절차나 행정서류는 간소화하고, 특히 가장 인력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원활한 직업훈련이 실시되어 인력공급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직업훈련실시에 대한 기술 및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財政支援方案까지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에 본격적으로 산학협동훈련이 도입된 이후 92년 3월 처음으로 專門課程 1,613명이 사업체에 배정되어 현장훈련에 들어갔으나, 사업체의 현장훈련 여건 미흡·자격검정 합격률 저조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훈련생의 현장적응력 제고·기능인력 배출능력 확대·훈련소요비용 절감 등의 필요성으로 도입된 현행의 產學協同訓練制度가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산학협동에 대한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同制度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물론 제도적인 개선·지원을 통해서 사업주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업주 스스로가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산업사회의 변화에 필요한 근로자의 職業能力開發에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의식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표준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게 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시설, 기본적 여건은 갖춰

우리나라는 60년대 후반 몇몇 항공보안시설을 借款事業으로 설치하면서 기초단계의 항공운항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70년대 후반부터는 정밀항공보안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3개 국제공항(김포·김해·제주)에 컴퓨터화된 레이더 시설과 계기착륙시설(ILS)<sup>1)</sup> 등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포공항은 가시거리 350m까지도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국내선 공항도 활주로 및 지형여건에 적합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7개소에 설치된 전방향표지 시설(VOR/TAC)<sup>2)</sup> 등 항공로 시설과 일부 공항시설을 이용, 총 20개의 항공로를 구성하여 항공기가 질서있게 운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그림 1〉 참조).

### 현재의 시설, 안전운항 보장에는 미흡

그러나 현재 각국이 이용하고 있

는 이 시설들은 대부분 40·50년대 이전에 개발되어 실용화된 시설로서 급속한 항공기 운항의 증가로 空域이 복잡해지면서 현재 시설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항공기와 통신은 주로 음성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일시에 교환하기 곤란하고 정보가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로 지상에 설치되고 낮은 주파수대를 사용함으로써 주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신뢰도 및 정밀도가 낮다.

셋째, 레이더의 직진성 및 通達距離 한계로 산악지대 및 大洋上의 항공기는 탐지가 곤란하다.

넷째, 전세계적인 통신망 구성이 곤란하고 일부 시설의 국가간 호환성이 결여되어 있다.

### 현시설의 미비점 위성항행시스템 개발로 보완

이러한 현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는 83년 위성항행시스템(FANS: Future Air Navigation System)개발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한 결과 인공위성의 이용만이 유일한 해결책

이라고 결론짓고, 現施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스템을 구상하여 기술적 검토를 거쳐 실용화 시험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그림 2〉 참조).

위성항행 시스템은 통신(Communication)·항행(Navigation) 및 감시(Surveillance) 분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진다.

### 통신분야는 데이터통신이 음성통신을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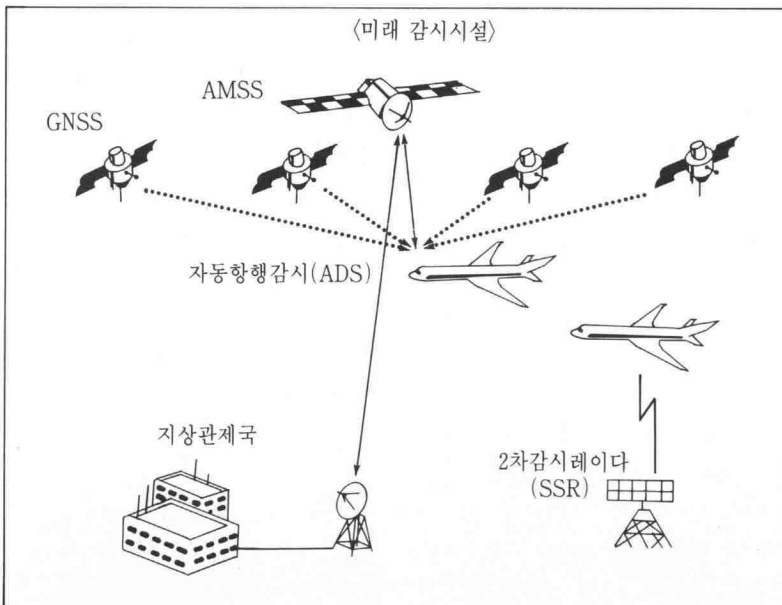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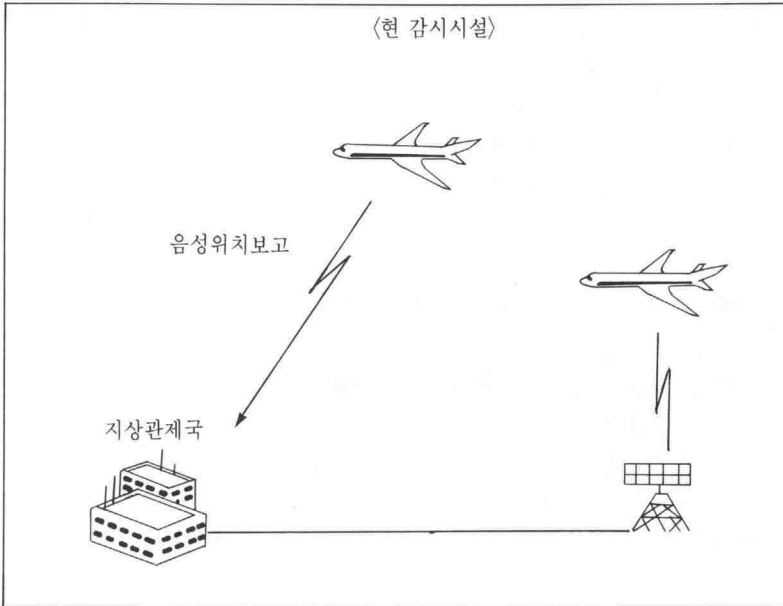
현재 항공기의 관제 및 운항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은 초단파 및 단파대의 無線通信과 전신타자(TTY)를 주종으로 한 有線通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행 방식은 신뢰성이 낮고 통신속도가 느려 일시에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인공위성·컴퓨터 및 신형레이더(모드-S)를 이용한 데이터통신이 주류를 이루고 음성통신은 보조적으로 쓰이게 된다.

- 1) ILS(Instrument Landing System): 항공기의 최종착륙경로를 알려주는 시설
- 2) VOR/TAC(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Tactical Air Navigation Aid): 항공기의 운항경로를 알려주는 시설

94년초 항공로 관제업무의 소관부처가 국방부에서  
 교통부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수도권 新空港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은 물론, 항공로 관제소에도  
 위성항행시스템의 통신·항행 및 감시시설을  
 설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체계를  
 위성항행시스템으로 일체화할 것이다.

〈그림 2〉 감시(Surveillance)시스템



航行분야는 보다 정밀화

항공기가 지정항공로를 따라 비행하여 공항에 착륙하게 하기 위한 항행시설은 지상시설과 항공기 탑재장비를 이용한 무선항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人工衛星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고도·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탑재된 컴퓨터가 산출해 내는 보다 정밀한 위성항법장치(GNSS)와 신계기 착륙시설(MLS) 등으로 대체된다.

감시분야는 자동항행감시시설 개발

항공기의 감시는 거의 레이더 시설에 의존하여 왔으나 탐지거리의 한계성과 전파의 직진성 때문에 大洋과 山岳地域 등에서는 레이더에 표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가 관제기관에 통보하는 내용만을 믿을 수밖에 없어 정확한 운항관리가 어려웠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항공기도 탐지가 가능한 자동항행감시시설(ADS)을 개발하여 시험운용중에 있으며, 기존 레이더를 개량한 신형레이더(모드-S)를 이용하여 관제사가 특정 항공기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음은 물론, 항공기 충돌방지장치(ACAS)가 운용됨으로써 안전운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각국의 동향

세계 선진각국은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처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정하는 기술 기준에 있어 自國에 유리한 기득권 확보 등을 위하여 항공보안시설 신장비의 개발 및 시험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드-S 레이다 및 신계기착륙시설(MLS) 등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이미 기술기준을 제정한 시설은 미국·유럽 등의 많은 공항에 설치하여 시험운용중에 있으며, 또한 이들 국가는 전담회사(ARINC, AVI-COM, SITA 등)를 설립하여 질 좋은 空對地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유선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여 기존의 TTY 통신망을 대체 운용중이다.

그리고 위성항행시스템의 실현을 위하여 美國은 인공위성 24개 중 13개를, 舊蘇聯은 위성 24개 중 10개(추정)를 궤도에 진입시켜 놓았으며 또한 미국·日本 및 유럽 각국은 이들 인공위성을 이용한 감시시스템인 자동항행감시시설을 개발, 민항공기에 의한 성능 시험을 완료하고 실용화 단계에 있다.

## 우리나라의 대처 방향

우리나라의 항공관제량은 90년 29

만회에서 95년에는 38만회, 2000년에는 약 50만회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권 신공항이 아시아 지역의 中心空港(Hub Airport)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성항행시스템의 도입·운영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위성항행시스템과 관련된 국내 기술능력의 제고

둘째, 國際標準技術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 관련 법규의 정비

셋째, 위성항행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지상설비와 항공기 탑재장비의 설치 및 조종사·관제사·정비사 등 운용요원의 교육

넷째, 설치된 시설의 성능 확인 및 운용자 능력의 적정성 확인

다섯째, 위성항행시스템의 운용 시작 및 기존 구시설의 철거

한편 정부는 위성항행시스템을 도입·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기술능력의 제고와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와의 교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각종 국제회의 참석과 技術要員의 해외연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조속히 위성항행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바, 수도권 新空港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은 물론, 94년초 항공로 관제업

무의 소관부처가 국방부에서 교통부로 바뀌는 것을 계기로 항공로 관제소에도 위성항행시스템의 통신·항행 및 감시시설을 설치하여 항공기 안전운행체계를 위성항행시스템으로 일체화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業界의 참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업계에 기술정보의 제공과 아울러 위성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성항행시스템의 도입·운영시기를 결정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선정 등 효율적인 적용과 관련산업의 발전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학계·연구기관 등 국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위성항행시스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에 위성항행시스템이 설치되어 적용될 경우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이바지함은 물론,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치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통신사업의 활성화

경제정책해설

1885년에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電氣通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전기통신사업은 100여년간 정부가 직접 경영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다가 82년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87년에는 만성적인 전화적체를 완전 해소하고 전국 1가구 1전화 시대를 개막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통신사업의 활성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점 경영 사업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90년에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通信事業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 ‘통신위원회’ 신설의 의의

이에 따라 91년도에는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시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분야별로 적정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데이콤이 國際電話事業에 새로이 참여하여 지난해 12월 3일부터 미국·일본·홍콩 등과 국제전화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국

내 최초로 기본통신 분야에도 경쟁을 도입하였다.

이어 금년에는 이동전화사업자 1개, 무선호출사업자 10개 등이 새로이 허가될 예정으로 다수의 新規事業者가 출현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통신망 상호접속과 공동사용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설된 회사로서는 일시에 전국적인 네트워크 건설이 불가능하므로 타 사업자의 선로 등 通信設備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망 상호접속과 설비제공에 있어서는 이미 통신망과 설비를 보유한 기존 통신사업자와 동 사업자의 통신망과 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신규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며, 또한 전기통신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어 기술발전 추세와 세계적인 자유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通信政策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통신정책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재 또는 조정기구가 필요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92년 3월 16일 통신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한편, 선진각국에서도 통신사업의 경쟁도입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김창곤  
체신부 통신기획과장

通信委員會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美國은 1934년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설치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사업을 규제·감독하며, 캐나다는 1976년 방송통신위원회(CRTC)를 설치하여 전기통신과 방송에 관한 규제와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 ‘통신위원회’의 구성

통신위원회는 체신부장관의 재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委員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법조계·학계·과학기술계 인사 등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대 위원장에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윤승영변호사가 위촉되었다.

### ‘통신위원회’의 기능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간 적정경쟁의 확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權益保護를 위한 각종 재정을 위한 의결기능과 주요 통신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議決(裁定)기능

#### ■ 통신사업자간 설비제공에 관한 재정

92년도에 신규사업자가 다수 出現하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자가 단시일내에 통신설비를 구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개시 초기에는 기존 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업자간에 설비제공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당해 통신사업자간에 통신설비를 제공해 주고 제공받는 데 따르는 금액·제공조건, 기타 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사업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裁定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는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자와 이를 이용해야 하는 신규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 통신사업자간 설비의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재정

특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간의 통신망 상호접속을 원활히 할 수 있으나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통신망에 자기의 새로운 통신망을 접속시키거나

또는 설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協定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협정을 지연시키거나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통신사업자간에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조건, 기타 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사업자의 通信網間(예를 들어 이동전화망과 일반전화망, 데이터통신망과 일반전화망 등)에 상호접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원활한 通信疏通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 신규사업자는 1,4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기존 전화망과의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통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설비보상 및 손해배상에 관한 재정

##### 1) 설비보상에 관한 재정

기간통신사업자는 선박·항공기 기타 교통기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제공하는 無線局의 개설에 필요한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간 적정경쟁의 확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裁定을 위한 議決機能과 중요통신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수한 공급 또는 설비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설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설비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實費補償을 받을 자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설비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통신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였다.

#### 2) 손해배상에 관한 재정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되며, 損害賠償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통신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였다.

#### 심의기능

##### ■ 통신사업자 신규지정·허가

90년 通信事業構造調整과 91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독점체제의 통신사업

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92년도에는 이동전화사업자 1개, 무선호출사업자 10개를 허가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업자 허가시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사업자 허가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객관성·공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 ■ 적정경쟁확보 및 이용자 보호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92년도에는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지배적 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의 公正競爭 여건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電氣通信事業法 제 37조에서는 체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기통신역무제공 조직의 분리
-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内部補助

의 제한

- 電氣通信役務에 관한 정보 공개
- 전기통신사업자간 협정내용의 변경
-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約款 및 定款의 변경
- 새로운 전기통신사업자의 參與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
-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役務提供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의 중지

##### ■ 전기통신설비 공개기준의 공시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電氣通信設備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단말기기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기준을 정하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도록 하였다.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록 한 것은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을 방지하고 신규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공개기준을 공정하게 제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연구개발조사활동의 현황과 과제

경제정책해설

최근 科學技術 研究開發活動이 경제·사회발전을 비롯한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정책담당자·학계·연구계·산업계의 과학기술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범위와 이와 관련된 각종 통계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科學技術指標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활동의 구조와 수준 및 규모를 計量的으로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비롯한 각종 산업·경제·사회정책 나아가 외교·안보정책 수립 등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지표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이해 없이는 과학기술정책 수립이나 중·장기 연구개발활동의 방향설정에는 물론 국제간 과학기술수준 비교,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 움직임 등 新國際 技術秩序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특히 과학기술지표 중 과학기술투자·연구개발투자·연구인력 등은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지표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2차·3차지표 또는 복합지표가 생산·가공되기 때문에 이들 1차지표와 관련된 제반용어에 대한 조사통계상의 정확한 개념정립과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학기술통계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한 개념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과학기술통계에 대한 이해증진과 효율적인 활용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 분야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활동현황과 우리나라 연구개발조사 활동현황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 과학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國際動向

科學技術指標은 과학기술활동을 計量化하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상호 통용되고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활동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각종 과학기술지표가 조사·작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과학기술 연구활동이 활발했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960년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 통계를 수집발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시기까지 미국·일본·캐나다·영국·프랑스 등이 작성한 과학기술 통계는 국가별 통계범위·분류방법·용어의 개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호 국제비교가 어려워 國際的 標準化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박정택  
과학기술처 기술조사과장

**科學技術指標은 한 나라의 과학기술활동의 구조와  
수준 및 규모를 計量的으로 제시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비롯한 각종  
산업·경제·사회정책 나아가 외교·안보정책 수립  
등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여러 차례 전문가회의를 거듭한 결과 OECD에서는 63년에 처음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통계조사에 관한 지침서인 소위 「프라스카티 편람(Frascati Manual)」이라 불리는 「과학기술활동 測定便覽」을 제정하였으며, UNESCO에서도 78년 ‘科學技術統計의 國際標準化에 관한 勸告案’(UNESCO 권고안이라 한다)을 채택하여 세계각국이 과학기술활동통계 작성시 이 권고안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美國, 국립과학재단이  
과학기술통계업무 주관**

美國의 경우 과학기술통계업무는 國立科學財團(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주관하고 있으며 UNESCO 권고안을 기준으로 하여 연방정부·대학 및 기업체의 연구개발활동을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제호: National Patterns of Research & Development Resources)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주요 調査項目은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에 대한 자료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총괄부문·연방정부부문·기업부문·대학부문·인력부문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연구개발통계 이외의 과학기술부문의 박사학

위 배출현황, 특허통계 등의 과학기술관련 통계는 국립과학재단이 학술원 및 특허청 등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있다. 연구개발조사통계에는 자연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人文·社會科學部門의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연구개발활동통계·박사학위통계·특허통계 등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분석·가공하여 2년마다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日本은 과학기술통계자료를 종합  
분석정리한 『과학기술백서』 발간**

日本은 총리부 통계국에서 매년 약 1만3천여개 기관을 標本으로 추출하여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科學技術研究調査 報告書」에 매년 발표한다.

調査表는 UNESCO 권고안 및 OECD 「프라스카티편람」을 기준으로 하되 일본 국내 상황을 종합하여 민간기업체용·연구기관용·대학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활용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은 연구개발관계 종사자수·연구개발관계 종사자의 전공분야별 내용·연구비·형태별 연구비 지출 등 18개 항목이다.

총리부 통계국의 조사와는 별도로 과학기술청에서는 통계국에서 작성된 기초자료와 국내외 각종 과학기

술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하여 과학기술정책적 차원에서 각종 과학기술 지표들을 『科學技術白書』에 수록·발표하고 있다. 물론 조사대상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문·사회과학분야도 포함되며, 발표시에는 전체적인 통계와 함께 自然科學分野와 人文·社會科學分野를 구분하여 작성한 통계도 아울러 발표된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발표되는 研究開發人力과 研究費는 국제기준에서 볼 때 30~40% 정도 연구인력과 연구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왜냐하면 연구에 실제 종사하는 연구원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만을 통계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표준임에도, 일본 대학의 경우 연구인력은 대학의 교수·조교수·강사 등 대학교수요원 전부를 연구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이들에게 주는 인건비 전액도 연구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과학기술통계조사활동  
현황과 향후과제**

우리나라는 63년 ‘연구기관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최초로 과학기술활동을 조사한 이래 매년 과학기술처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국내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현황을 定量的으로 파악·분석하여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연구개발활동의 基礎資料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시험연구기관·고등교육기관·기업체 등 연구개발 주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UNESCO권고안과 OECD 「프라스카티 편람」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하여 작성된 조사표에 의해 조사대상기관들의 自計式設問調査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 매년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 실시

設問紙는 조사대상기관에 따라 연구기관용·대학용·기업체용 등 세 가지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인력·연구개발비·연구조직 등 총 16개의 조사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수집된 기초자료는 담당요원이 검증·확인하고 조사표 작성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또는 기입상의 착오나 누락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컴퓨터에 입력하여 통계처리한다.

1차 통계처리된 자료는 통계청과 협의후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통계'로 확정하고 동 통계자료와 국내 외에서 수집된 각종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가공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로 발간·배포하고 있다.

調査對象機關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특수성과 조사활동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自然科學分野의 시험연구기관, 자연과학분야의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체, 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중인 기업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운영하는 기업체, 그리고 病床數 8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시점 및 기간은 연구인력 등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조사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연구개발비 등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調査對象分野는 UNESCO권고안에 의한 자연과학(이학)·공학·기술·의학 및 농학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이며 人文·社會科學分野는 제외되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표 2>와 같다.

선진제국의 조사활동에 비해 미진한 부분 많아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

기관이나 선진제국의 과학기술통계 조사활동에 비하면 우리의 조사활동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科學技術活動의 조사범위에서도 우리는 자연과학부문만 대상이 되고 인문·사회과학부문이 제외되어 있어 국제간 통계지표의 균형유지와 함께 지표내용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문도 함께 조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계지표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엄격한 정의와 정확한 분류가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非研究活動이나 類似活動이 연구개발활동 통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대학 및 기업체의 연구개발활동의 합리적 측정이 요구된다. 대학의 경우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요원을 모두 전임제 연구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대학교수요원들의 교육기능을 고려할 때 이들을 모두 실질적 의미의 연구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비나 연구인력통계조사에 있어서는 직접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인력과 투자된 금액만을 계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과 산업활동의 구별이 모호함에 따른 정확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국제기관이나 선진제국의 과학기술통계조사활동에 비하면 우리의 조사활동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우선 科學技術活動의 조사범위에서 인문·사회과학부문이 제외되어 있어 국제간 통계지표의 균형유지와 함께 지표내용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부문도 함께 조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주요지표

구분 (단위)	88	89	90
국민총생산 (억원)	1,262,315	1,417,944	1,684,378
○ 과학기술투자 (억원)	25,937	30,199	37,674
(억달러)	38	44	53
GNP대비 (%)	2.05	2.13	2.24
정부 : 민간 (%)	26 : 74	26 : 74	28 : 72
○ 연구개발투자 (억원)	23,474	27,051	32,105
(억달러)	34	40	45
GNP대비 (%)	1.86	1.91	1.91
정부 : 민간 (%)	18 : 82	17 : 83	16 : 84
○ 과학기술관계예산 (억원)	6,828	7,623	11,405
총세출예산대비 (%)	2.92	2.34	2.96
○ 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억원)	17,973	22,124	25,965
전산업 (%)	1.77	1.93	1.88
제조업 (%)	2.00	2.14	2.07
○ 연구원 (명)	56,545	66,220	70,503
인구 만명당 (명)	13.5	15.6	16.4
종업원 천명당 (명)	20.1	24.7	28.1

전문교육훈련과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이해제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과학기술연구개발 통계가 總論的으로만 조사되고 있는데, 이를 특정 목적분야별로 전문화시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일반과학·우주·에너지·보건· 국방·농업·해양개발·정보처리·환경문제 등 전문과학기술부문별 연구개발활동 통계조사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1차적인 통계조사 못지않게 1차지표들을 활용한 새로운 科學技術指標의 개발이 시급하다. 연구원수·연구비·논문발표수 및 인용회수·연구자 1인당 연구논문수 등에 관한 지표는 물론, 海外技術依存度, 研究開發集約度, 技術潛在力指標 나아가 과학기술의 국가경제발전의 기여도 등 複合指標의 개발도 앞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과학기술통계업무를 좀더 전문화시키고 관련예산과 인력의 확충은 물론 통계생산자, 통계자료 제공자 및 통계이용자들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통계지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통계기법 및 지표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인문·사회]

〈표 2〉 과학기술활동 조사대상분야

	범 위
자연과학 (이 학)	천문학, 세균학, 생화학, 생물학, 식물학, 화학, 컴퓨터과학, 곤충학,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학, 기상학, 광물학, 자연지리학, 물리학, 동물학, 기타 동류의 과학
공학 및 기술	화학·토목·전기·기계공학 등 이들 공학의 세부전문 분야와 같은 순수공학, 목재생산·측지학·공업화학 등 응용과학, 건축공학, 식품생산에 속하는 과학기술, 시스템분석·야금학·광산학·섬유공학 등의 전문기술 또는 상호관련분야
의 학	해부학, 치과학, 의학, 간호학, 산과학, 안과, 정형, 약학, 물리요법, 공공보건 및 기타 동류의 과학
농 학	농업경제학, 축산학, 수산학, 임학, 원예학, 수의학 및 기타 동류의 과학

# KS표시 허가 및 사후관리제도

KS표시 허가제도는 공업표준화를 위하여 제정된 한국공업규격(KS 규격)을 보급·활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정상품이 KS규격에 따라 제조되었다는 표시를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유명메이커의 이름이나 상품을 믿고 산다. 그러나 상품의 품질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試驗을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구의 수명이 얼마나 되고, 또 보온병의 보온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는 겉모양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중요한 품질을 個個의 상품에 표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상품의 품질특성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개의 특성에는 많은 설명이 뒤따라야 하므로 이를 다 표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생산자의 이러한 표시는 信賴性이란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각 생산자가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만 주게 되어 결국 品質特性을 표시하는 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도 생산자도 아닌 중립적이고도 권위있는 기관에서 생산자가 만

든 상품이 該當國家 규격에 틀림없이 적합하다는 보장을 할 수 있다면, 이를 위하여 특정한 마크를 표시하게 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품질의 식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기관이 되어 'KS마크'라는 단순한 표시로써 그 상품이 한국공업규격, 즉 KS규격에 적합한 것임을 보증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KS표시 허가제도인 것이다.

## KS표시 허가제도의 배경

이 제도는 1961년 9월, 工業標準化法이 제정됨으로써 실시하게 되었는데 91년말 KS표시 허가를 획득한 업체는 외국업체 16개를 포함, 총 3,299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KS표시 허가업체가 우리 산업발전의 前衛로서 품질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품질관리의 도입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출이 곧 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로 볼 때, 최근 우리 상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약화는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KS



박병태  
공업진흥청 표준계획과장

表示品の 신뢰성을 더하고 우리 상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KS표시 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KS표시품의 聲價維持와 KS공장이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선도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KS표시 허가요건의 강화

공업진흥청에서는 표준화에 기초한 품질관리체제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공장에 한해서만 KS許可가 나갈 수 있도록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허가절차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KS허가는 자기가 만든 제품이 KS규격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원하는 자가 공업진흥청장에게 신청할 경우, 공업진흥청장은 申請者의 공장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파견하여 허가신청한 품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등 그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술적인 생산조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중인 제품이 KS규격에 합당하고 계속 규격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KS표시를 허가하게 된다. 이때의 기술적인 생산조건과 생산중인 제품이 KS규격에 합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공업표준협회 등 11개 순수 專門民間機關(〈표 1〉 참조)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폭을 대폭 완화시켰다.

둘째, 공장심사시 평가하는 제반 품질관리 기록을 종전의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연장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KS표시 허가 判定基準에 있어 종전에는 34개 항목 중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항목이 19개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항목이 26개 이상일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신규허가품목이나 처음으로 허가를 받는 공장에 대해서는 현지 심사보고서만을 검토하여 허가하던 것을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7인 이내의 判定會議에서 현지 심사보고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종 검토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정하고 정확한 현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KS표시품 및 표시허가 공장에 대한 事後管理 강화

KS표시품과 KS표시 허가공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중유통이 잘되고 있는 품목과 직거래 등으로 시중유통이 잘 안되는 품목으로 兩分하여 시중유통이 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부예산으로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市販品調査와, 시중유통이 잘 안되는 품목의 경우는 2년마다 공장의 품질관리체제와 관리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工場檢査로 이원화하여 각 시도가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일부 시판품 조사 대상 공장은 공장의 품질관리체제와 관리실적 등에 대한 검사가 없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할 경우, KS표시 허가제도의 근본목적에 이탈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사후관리를 보완하였다.

첫째, 종전에는 각 시도 주관하에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각 시도의 인력·예산부족과 시도별 사후관리대상 업체가 최대 1,009개, 최소 21개로 일부 지역에 편중(〈표 2〉 참조)되어 있어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 KS業體를 대상으로 공업진흥청에서 종합적인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업체에 비하여 사후관리 능력이 부족한 市道에는 공업진흥청·국립공업기술원 및 지방공업기술원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반드시 공장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KS공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장검사를 통해 품질관리체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규격 수준과 동등

내지 우수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시판품조사와 공장검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후 관리방법을 공장검사 위주로 일원화하였으나 소비재와 소비자의 안전·위생과 관련

이 깊은 품목은 시판품조사를 추가로 받도록 함으로써 品質不良에 의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큰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사후관리 週期도 1년으로 통일하였다. 이러한 품목은 KS허가품목

〈표 1〉 KS 현지심사담당 전문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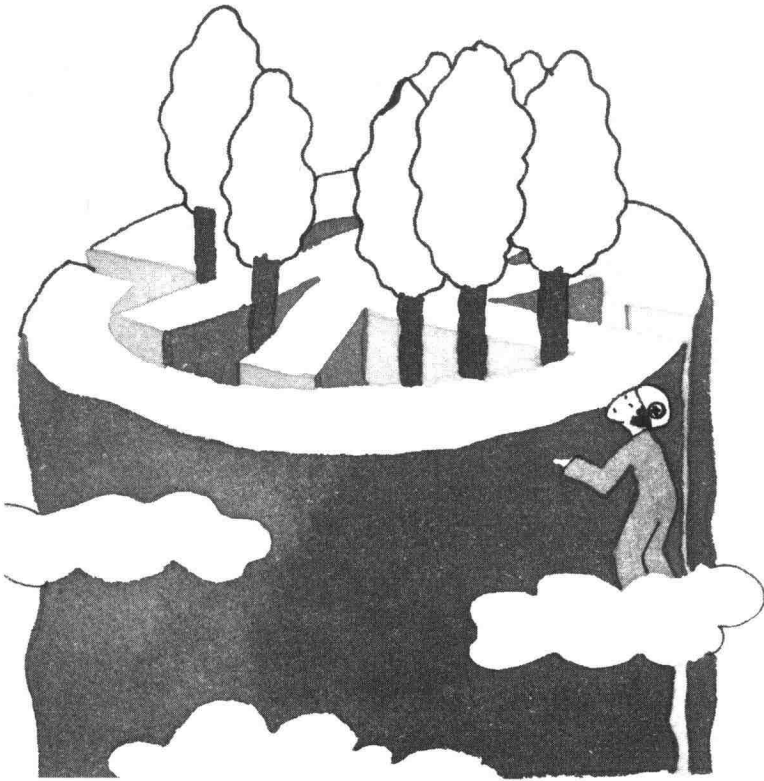
기 관 명	담 당 분 야
한국공업표준협회	전분야
한국원사직물시험검사소	섬유(원사 및 원단류)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화학(유지·종이·펄프 제외)·금속·토건분야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	일용품·기본·기계·광산·의료분야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전기·전자분야
한국의류시험검사소	섬유분야
한국기유화시험검사소	화학분야(유지·종이·펄프류)·전기·전자분야
생산기술연구원	기계·금속·수송기계분야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포장·화학분야(종이류)
한국전기연구소	전기·전자분야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가스연료기기분야

〈표 2〉 시도별 KS 허가공장 분포현황

(단위: 개소)

시 · 도	공 장 수	시 · 도	공 장 수
서울	192	충남	137
부산	259	전북	132
인천	256	전남	130
대구	203	경북	233
광주	57	경남	345
대전	80	제주	21
경기	1,009	외국(미·일 등 6개국)	16
강원	91		
충북	138	계	3,299

정부에서는 KS表示品の 신뢰성을 더하고  
 우리 상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KS표시 허가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KS표시품의 聲價維持와  
 KS공장이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선도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지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960개 중 155개에 달하고 있다.

셋째, 사후관리 불합격공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종전에는 불합격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표시정지·허가취소 등 세 종류로 나누어 처분을 하였었다. 그러나 일정기간 KS마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정지처분과 같이 그 실효성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이를 없애고 불합격의 輕重에 따라 改善命令 또는

허가취소로 단순회합과 아울러 경미한 불합격 공장이라 하더라도 2년 이내에 3회 개선명령을 받은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였다.

넷째, KS허가가 취소된 공장에 대한 KS 재허가 신청 제한기간도 종전의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또 사후관리에 적발된 공장이 행정처분 이전에 허가를 자진반납하

여 재허가 신청 제한기간을 모면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職權에 의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에 중점

이상에서 살펴본 KS표시 허가 및 사후관리제도를 더욱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KS표시 허가 공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KS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시키고 금년 안으로 기존의 제도개선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개편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금년중에는 工業標準化法을 개정하여 허가와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민간검사기관·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방법도 다양화함과 아울러 허가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처리 등 첨단산업분야의 우수한 國家規格의 개발을 전담할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완결할 계획이다. [본지]

#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정책을

신현만

한겨레신문 기자/경제기획원

올해 대기업과 서비스  
업체의 임금인상률  
을 5% 이내에서 억제토록  
하겠다는 정부의 賃金政  
策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및 기업간의 입씨름이 한  
창이다.

정부는 물가안정과 국  
제수지 개선 및 산업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는 임금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강  
력한 임금안정정책의 필  
요성을 거듭거듭 역설하  
고 있다.

반면 勞動界는 올해를  
포함해 벌써 3년째 물가상  
승률이 두자리 수에 육박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5%의 임금인상률은 실질소  
득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도 그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서 임금인상을 억제하겠다고 하니 반갑긴 하지만 자칫하다  
가 노동쟁의를 촉발시키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政府의 임금정책이 성공하려면 일반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노동계의 이해는 필수적  
인 것처럼 보인다. 쇠뿔을 빼려다 소를 죽이는 愚를 범  
하지 않으려면 노동계와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임  
금안정의 필요성에 동의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은 이런 것에 별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우선 임금인상을 5% 이내에서 억제하면 물가와 국제  
수지, 산업경쟁력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올해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당  
장 일반서민들의 생활은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아니  
내후년부터라도 생활이 얼마나 나아질지에 대해 그리  
설득력 있는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저 우리나라의 임금이 최근 몇년간 급속도로 인상  
돼 수출상품의 價格競爭力이 떨어졌고 물가가 올랐다는  
막연한 분석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또 외국에 비

해서는 시간당 임금이 얼  
마나 많고 생산성이 얼마  
나 낮다는 '통계', 그것도  
외국의 물가상승률 등 전  
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  
하지 않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통계만 제시되고 있  
을 뿐이다.


임금을 많이 올린 기업  
에 대해서는 金融·稅制  
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효과가 불분명한 정책수  
단'만이 강조되고 있다.  
설득보다는 규제가 앞서  
고 있는 셈이다.

企業에 대한 정책에서  
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

동계는 정부가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스스로 어  
려운 경쟁상황을 돌파하도록 하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  
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기업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이런 정책이 더 강하고 빠르게 시행될 필요  
성을 느끼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이 정책시행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負債比率이 1천%를 넘는 기업이  
나, 심지어 자기자본 잠식상태에 있는 기업을 주력업체  
로 선정해 대출한도 관리를 제외시켜 주는 것은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현대그룹 정주영 前 명예회장이 수천억원의 회사돈을  
가지급금으로 유용해도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  
하지 못하는 것도 형평을 잃은 정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에게 임금인상을 억제하라고 요구하려면  
당연히 기업들에게도 비용절감 등 經營合理化를 요구  
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정부의 임금안정정책은 분명히 필요하고 내키지 않  
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  
를 포함한 일반국민의 그리 적극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  
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은 많은 아쉬움  
을 남긴다. 

## 疑似自律化

윤홍식

국민일보 기자/동력자원부

“모든 관료들은 규제야말로 권력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터득하고 있다”

작가 복거일이 지난해 펴낸 그의 저서 『현실과 지향』에서 한 말이다.

굳이 경제학을 전공한 유명작가의 말을 인용할 것도 없이 관청에서 간단한 서류 한 장이라도 떼어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권력이 규제에서 나온다는 지적에 공감할 것이다.

권위주의가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사회에서 규제는 많은 경우, 권력의 원천일 뿐 아니라 때때로 권력 그 자체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관료들은 되도록이면 규제를 풀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규제의 폭을 최대한 넓히려고 한다.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말한다면, 모든 관료들은 속성상 ‘反자율화론자’들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처럼 규제지향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관료들의 입에서 요즘 가장 자주 튀어나오는 소리가 ‘자율화’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투자자율화·요금자율화·영업자율화... 연초 각 경제부처가 내놓은 업무보고에서부터 일상적인 업무처리에 이르기까지 ‘자율화’란 단어는 약방의 감초처럼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좀 과장해 말한다면 지난 87년의 민주화투쟁 이후 우리는 ‘자율화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처럼 자율화란 단어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돼버린 요즘, 나라경제의 각 부문에서는 진실로 名과 實이 상부한 자율화가 진행돼 가고 있는가.

여러가지 분분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비춰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무래

도 부정적인 톤이 우세한 것 같다.

자율화가 한 시대의 변화의 방향을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에 걸맞은 개혁적 조치들은 도처에서 규제의 완강한 손아귀에 덜미를 잡혀 실종되거나 본래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다.

‘반짝 자율화’의 뒤에는 늘 ‘조정’이 뒤따르고 그 결과 ‘규제’가 그 두텁고 완고한 모습으로 슬그머니 ‘원위치’하곤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가

아니었던가.

경제학적 상상력으로 무장한 작가 복거일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

“모든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자신의 존속을 영구화하려는 경향이다”

관료집단을 포함한 모든 조직은 자신의 존속을 영구화하려 할 뿐 아니라 부단히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자율화의 당위가 강제될 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른바 ‘疑似자율화’다.

지난 3·24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참패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정책 탓이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6共의 疑似자율화의 책임은 상당부분이 규제의 편한 틀 속에 안주하려는 일부 소신없는 관료들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국민

얼마전 日本의 한 TV방송국에서 현재 동경의 外國語학원의 수강생 숫자를 기준으로 인기외국어 베스트 10을 발표한 적이 있다. 1위가 英語, 다음이 獨語, 4위가 스페인語 등인데 韓國語가 10位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다. 똑같은 조사가 서울에서 행해진다면 물론 1位에는 영어이고 그 다음을 日本語가 차지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韓·日 양국의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나 필요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양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經濟不均衡 이슈도 서로 상대를 보는 軌道

## 韓·日 경제문제를 보는 日本의 視角

강응선 경제기획원 서기관/일본경제기획청 파견

가 이같이 차이가 나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 때문에 解決 또는 接近이 잘 안되는 것이 아닐까. 8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경제의 好調와 88년의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해서는 韓·日간에 서로를 보는 視角이 상당히 접근하였던 것만은 사실인데, 문제는 그 이후 3~4년 사이에 그 視角이 변해버린 것이다. 어쩌면 변한 것은 韓國보다 日本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88 서울올림픽과 관련되어 書店街에서 韓國관계 冊이 날개돋힌 듯 팔리고 人氣外國語 베스트 10 안에 한글이 포함될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이 불과 몇년 전 일인 것이다. 다시 말해 최근 몇년 사이에 韓國이 日本을 보는 視角이나 관심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데 비하여, 日本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나 관심은 상당히 많이 변해버린 것이다.

그와 같은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우선 이처럼 변화된 現實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지금 韓·日間に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정확한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日本의 各界가 韓·日 경제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몇가지 예를 들어 전달해 보고자 한다.

먼저 產業界 쪽의 얘기를 들어 보자.

日本의 業界는 최근 韓·日 경제문제의 주원인을 다음 세가지에서 찾고 있다.

첫째는, 국제경제여건의 急變이다. 즉 東西冷戰이 와해되면서 日本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2차대전 후 美國의 安保우산 밑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는 資本主義式 경제관계를,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美國의 눈치를 보아가며 政·經分離式 경제관계를 유지하였던 日本이 이제는 全世界 어느 곳이든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美國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軍事·安保의 보호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면서부터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따라서 日本의 對外經濟관계에서 韓國이 차지하는 비중과 관심도 냉전시대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日本의 지역적 선택권이 넓어진 것이다. 60~70년대 日本의 海外投資의 주요 대상지역으로 韓國이 꼽힐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같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였던 점과, 그나마 얘기(言語)가 통하고 기술의 消化能力을 보유하고 있었던 몇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80년대 들어와 泰國를 비롯한 동남아 諸國이 經

濟開發에 눈을 뜨게 되고 産業知識과 기술의 소화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日本으로서는 굳이 한국·대만·홍콩이 아니더라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80년대 초반에 태국에 진출하였던 상당수의 日本기업이 실패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 태국 국민(근로자)의 수준을 과소평가하여 냉방 시설 등 작업환경에 대한 적절한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후 80년대 후반에 진출한 기업들은 처음부터 近代式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었더니 日本근로자 平均生産性的의 60%線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日本이 4大 NIES 國家에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곳곳에서, 東南亞의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日本의 자본과 기술을 받기 위하여 日本語學習은 물론, 기술습득 수준을 급격히 향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91년에 카메라 제조회사인 캐논은 기존의 현지공장이 있던 말레이시아에 캐논綜合研究所까지 設立하였는데 이는 現地人の 組立기술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등 R&D능력까지 인정하였다는 단적인 예로서, 이러한 것들이 日本으로 하여금 굳이 韓國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다른 나라에서 현지생산과 연구개발까지 가능하다고 믿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는 韓國側의 요인을 들고 있다. 國內·海外를 불문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는 兩者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데, 최근 韓國의 企業이 바로 이 信賴性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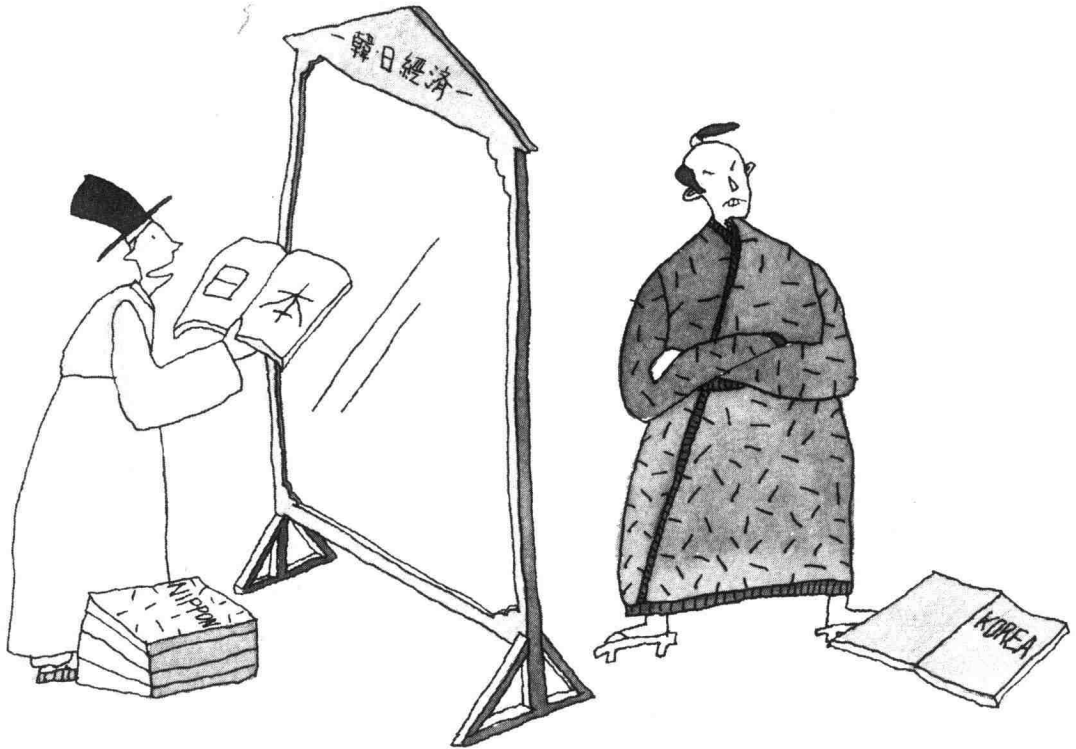
이전받은 기술로 성공하고 나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어버린 例, 國內經濟 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한 갑작스런 수출중단, 품질(특히 끝마무리)의 미흡으로 인한 잦은 클레임 발생, 納期 지연 등 거래파트너로서의 장기적인 신뢰감을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兩國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

히 91년도에는 韓國이 對日本뿐만이 아니고 對美·對EC 등 모든 나라들과의 交易에서도 赤字를 보였다는 것은 바로 韓國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업기술협력에 있어서도 韓國이 실제 필요한 것은 中小企業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생산기술이며, 또한 이러한 기술들은 실제 기업레벨에서 상당히 이전되고 있음에도 굳이 수용능력도 부족한 첨단기술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反證하는 實例로 韓國의 L그룹과 日本의 H그룹간의 10여년 이상의 友好的인 기술이전관계를 들면서 기술이전문제에 관한 한 민간레벨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言論과 學界의 의견은 어떠한가(政府는 各界의 의견을 集約代辯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제외한다).

言論의 視角 역시 한마디로 업계의 시각을 바탕으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먼저 韓·日 양국의 경제발전은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지금까지의 한국의 경제발전이 일본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지만, 일본이라는 큰 市場을 옆에 두고 있는 韓國도 日本의 內需指向 經濟體制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日本이 海外製品 수입을 지금보다 적극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특히 제품의 경쟁력강화, 적극적인 對日 市場개척 노력, 기술이전추진을 위한 투자환경의 정비 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하나 눈에 띄는 견해는 韓國의 기술이전 요구와 무역적자 감소는 兩立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최신기술의 도입은 관련설비의 수입을 유발함으로써 오히려 赤字의 증대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므로 지금 한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기술



은 더욱 바라면서 물건을 덜 사겠다는 것은 사실상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韓國은 자신에 맞는 기술을 도입 또는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學界에서도 역시 韓國側의 요인에 비중을 두고 먼저 중소기업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對日赤字의 대부분이 부품수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를 담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1950년대의 自動車工業 육성 초기에 海外商品의 수입 제한이 있었으나, 그때 장기적 視野에서 국내 中小企業으로 하여금 자체 조달을 계속 추진한 것이 크게 성공적이었다 한다.

또한 日本의 投資進出에 대한 차별과 감정적 사고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戰前에 한국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를 清算(적어도 外樣的으로는)하여 日本기업의 진출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보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처

한 입장 등에 따라 여러가지 視角이 있을 수 있겠으나, 종합적으로 感知되고 있는 것은 '日本의 관심이 韓國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現地に 진출해 있는 韓國商社 등 관계자들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序頭에서 말한 것처럼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 정도 만들면 美國에서는 잘 팔리는데 日本에서는 왜 까다롭게 구는지 알 수가 없다”는 企業家의 視角이 아직도 남아 있는 한, 日本 現地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한 현재의 對日 경제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계속 방치하면 戰前世代는 물론, 戰後世代마저 서로를 혐오하게 될 상황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 이번에는 다소 시간과 고충이 따르더라도 확실히 실현 가능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진]

단 상에는 美해병군악대가 남북전쟁 당시 코네티컷 제2보병연대의 군가를 연주하고 있다. 몇 곡의 연주가 끝나자 갑자기 불이 꺼지며 실내가 캄캄해진다. 잠시 후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추면 조명을 타고 軍旗手가 성조기를 들고 입장하여 단상 앞에 선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국가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잠시후 軍旗手는 퇴장한다. 美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의 한 장면이 아니라, 美상공회의소의 92년도 집회를 묘사한 대목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필자는 美기업인이 성조기와 美合衆國(United States)에 대해 보이는 열의에 깜짝 놀랐다. 해외토픽에서 美國처녀가 입은 반바지의 엉덩이에서 열썬거리는 성조기를 보곤, 또는 영화에서의 성개방 풍조를 보고는 自由가 마냥 넘치는 美國인 줄 알았는데, 워싱턴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 미국을, 아니 보다 정확히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 엘리트집단인 '워싱턴 사람들'을 보고는 미국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미국의 많은 부분은 헐리우드나 大學문화이지 미국의 진면목이 아니다. 필자가 출퇴근시 이용하는 지하철역은 백악관과 주요기관이 몰려 있는 市内中心地에 있다. 이곳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출퇴근 인파들을 보면 여름에도 예외없이 짙은 정장에 넥타이 차림이다. 워싱턴의 한여름이 서울 못지않게 무덥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엄청난 관료주의·형식주의이다. 점심 때 포토맥 강변을 지나다보면 옷통을 벗고, 뛰고 있는 청년남자를 많이 볼 수 있다. 거의가 펜타곤이나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점심먹고 소화되라고 취미삼아 뛰는 것이 아니다. 배가 나오면 출세에 당장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백주에 노상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관료들은 거의 골프를 안 친다.

하급관리 때는 돈이 없어서, 고급관리 때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한다. 저녁에 관청가를 지나다 보면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위직은 야근수당을 받지만, 관리직 이상은 자기가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야근대장에 올려 다음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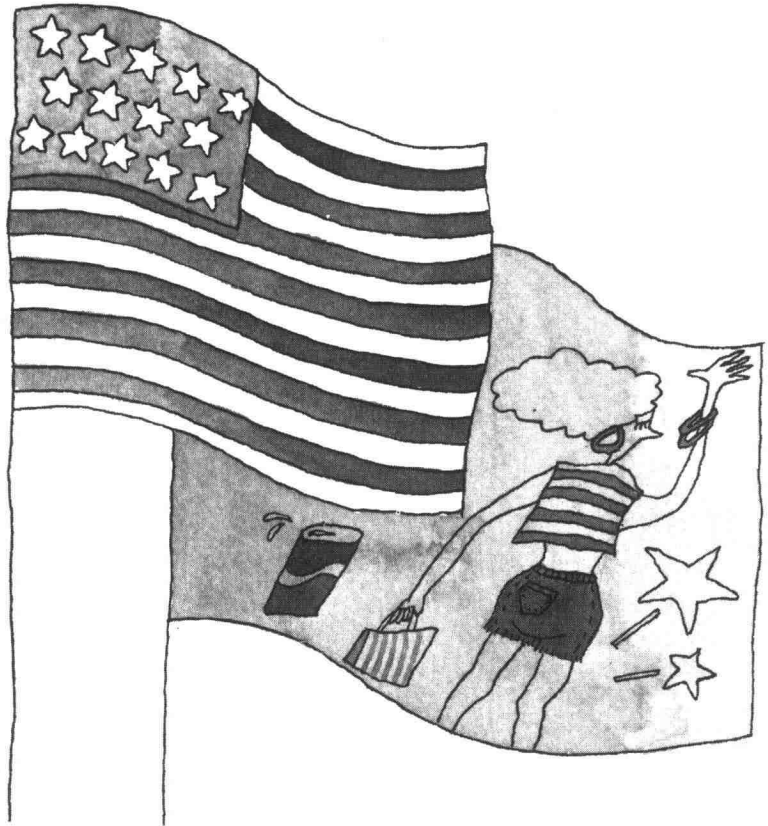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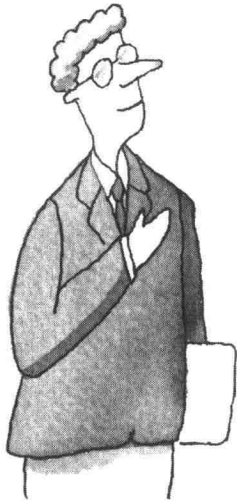
미국 엘리트사회의 다른 일면은 미국에 오래 살아 성공한 우리 교포들의 탄식을 들어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다.

교포2세들의 경우 어차피  
미국인으로 키워야  
하므로 철저히  
美國化교육을

## 워싱턴 사람들

안세영 상공부 서기관/UNIDO 파견

시키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제법 미국인처럼 되어 간다고 한다. 그런데 눈이 찢어지고 코가 납작한 '조선족의 미국인 만들기'는 대학에 가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다. 일류 고등학교에서 수재다 하여 미국 친구들과 서슴없이 어울리던 똑똑한 교포2세들도 대학에 들어가면 그간의 친구가 뚝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그렇게 미워(?)하던 일본인과 어울리게 된다는 것이다. 명문가의 미국인이 중고등학교 시절엔 미국식 보편주의에 의해 피부색이 노랑건 까맣건 모두와 가깝게 지냈지만, 명문大學에 들어가자 자신들이 소속될 집단으로의 '길'을 가기 시작



할 때 그간의 동양친구들과는 어울려줄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미국 人口의 많은 부분은 도저히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계층이다. 부가가치의 창출은커녕 사회복지의 떡고물을 먹고 산다. 미국의 평범한 가정주부는 샤프나 파나소닉이 어느 나라의 회사인지 모른다. 단지 물건이 좋으니까 산다. 미국의 자존심인 제네럴모터스가 45억달러의 적자를 내고 여남은개의 공장을 폐쇄하는데도 日製 혼다의 인기는 여전하다.

이같이 중구난방인 것 같은 미국을 하나로 묶어 위대한 USA로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일까? 풍부한 자원 등 여러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정계·재계·행정부 파워엘리트集團의 힘이다. 이들은 엄청나게 克己를 해야 하며, 항상 國民들에게 감시받고 합중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승승장구하던 클린턴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20여년전 월남戰의 징집기피 시비 때문이고, 벽지 네브라스카의 무명 정치인 케리가 예상외로 善戰하는 것은 월남戰 당시 海軍특수부대요원으로서 월맹에 침투했다가 부상당한 참전상이용사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워싱턴의 파워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美정책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제 냉전도 끝나고 세상도 많이 변했다. 특히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美·日 산업전쟁(?)을 생각할 때 북미 대륙에서 일본을 향해 쏘아 대는 포탄의 流彈(?)을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들 워싱턴 사람들의 行態와 思考를 빨리 알아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과 우의를 다져나감으로써 우리의 國益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본지

# 새로운 경쟁시대에서의 우리 기업의 진로



전승훈  
경제기획원 부이사관

세계경제는 지금 ‘국제화’와 ‘기술혁신’의 큰 물결을 타고 있다. 개방과 국제화는 제품은 물론 생산요소가 국경의 장벽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술혁신은 컴퓨터·로봇 등 도입에 의한 생산의 자동화와 신소재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맞물려 진행하면서, 물자의 공급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과 아울러 생산에서 단순노동의 역할을 줄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와 기술혁신의 흐름은 기업의 역할과 경쟁여건에 근원적 변혁을 가져다 주고 있다.

첫째로, 국경이 낮아지면서 종래의 국가단위의 경쟁력에서 이제는 개별기업이 경쟁의 主體요, 경쟁력의 源泉이 된다. 개방화·국제화의 시대에서는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야말로 진정한 실체이다.

둘째로, 기업의 경쟁이 아주 가혹하게 된다. 먼저 경쟁상대의 외연적 확대이다. 기업은 국내외 시장의 구분이 없어짐으로써 국내 경쟁자뿐 아니라 세계의 기업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맞이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에 의해 물자의 공급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됨과 아울러, 제품의 生命週期가 짧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경쟁이 내면적으로 심화된다. 기술변화의 속도가 아주 빠르고 공급능력이 충분하게 된 시장에서 세계의 기업들과 덤(handicap) 없이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로, 기업이 경쟁력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요소가 바뀌고 있다. 종래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낮은 임금은 자동화 생산의 발전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더 이상 유효한 경쟁력의 요소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생산요소를 국경장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시대에서는 기술과 경영만이 유일한 경쟁력

의 원천으로 남는다.

## 국제화시대의 企業

현실 경제를 보면 이와 같은 새로운 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의 주체인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화와 기술혁신의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새로운 경제질서의 변혁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선진국 기업들간의 國籍을 가리지 않는 전략적 제휴로 기술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다. 고도의 기술과 엄청난 투자를 요하는 미래의 新市場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적인 보완관계를 갖고 있는 선진국의 우량기업들끼리 공동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큰 흐름으로서는 하드웨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기업과 소프트웨어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기업과의 제휴이다. 저임금을 가진 개도국 기업들은 더 이상 선진국 기업의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지 못한다.

그 과정에서 開途國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선진국은 기술집약적 산업에 特化해오던 종래의 국제분업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60~70년대와 같은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그 동기도 개도국의 저임금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 시장에서의 진출이 목적이 되고 있다. 오히려 종래 개도국에 이전되었던 노동집약적 산업이 자동화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선진국에서 소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의 특징은, 日本企業이 확고한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최적 생산·판매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일본 기업들은 80년대에 들면서 21세기에는 미래기술 분야에서 마저 확고한 우위를 가지기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세계를 생산기지로 최적 생산·판매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두드러진 것이 ASEAN과의 連繫이다. 일본 自國내에는 고부가가치제품을 중심으로 제조업을 국내생산의 3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자원보유 ASEAN 국가들과 연계를 맺어 中·低價品の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어느 제품에 있어서도 최고급품으로부터 중저가품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杼(set)을 갖춘 생산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예로서 전자·전기업에서만도 ASEAN에 약 350개의 공장 또는 지사가 설립되어 있다. 다음으로 주력 미국시장에의 보호무역에 대응해서도 미국내는 물론 인접 멕시코 등에까지 생산체제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지역별로 生存戰略이 나타나고 있다. EC의 통합, 북미권통합(NAFTA) 등 지역화가 진행되고, 아시아 국가들도 일본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남기 위한 산업별 특화 내지는 분업체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대만의 경우 애초에는 일본기업에 반감을 가졌으나, 이내 ‘新興工業國(ANIES)=日本枝葉論’을 표방하고 일본기업과 제휴하여 활로를 찾는다. 그래서 일본과 결합하지 않는 첨단기술 분야의 소량 다품종 기계·정보산업에 특화한다. 홍콩·싱가포르 등은 도시형 국가들로서 전자와 정밀부품, 소프트웨어, 금융과 물류센터로서 고도서비스에 特化하고, ASEAN은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ANIES에 대신하여 중저가품의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국가 기업들의 대응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대만은 비록 일본으로부터는 赤字이지만, 무역흑자가 누적되어 91년도 13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외환보유고 825억달러의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 우량기업들끼리의 제휴에 의한 기술발전의 가속화, 일본기업의 세계를 기지로 한 생산·판매체제의 구축, 이에 대응한 지역별 블럭경제 형성 등 저마다의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격변하는 경쟁환경하에서 우리 기업이 설 땅은 어디인가.

- 현실 경제를 보면 새로운 경쟁시대에서 경쟁력의
- 주체인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국제화와 기술혁신의
-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새로운 경제질서의 변혁을
-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 

## 우리 기업의 성장과정과 현재의 좌표

그러면 새로운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의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디딤돌로서 그동안의 우리 기업의 성장과정과 현재의 위치를 살펴보자.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이 바로 우리 기업의 성장사이다. 60년대의 개발경제시대 이래 우리 기업은 불과 30년의 짧은 기간동안에 크게 성장해서 몇몇 企業群은 세계적인 대규모 기업에 낄 정도가 되었다. 우리 기업들이 이와 같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동안의 유리했던 생산요소의 공급조건과 시장여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본과 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 도입될 수 있었고, 낮은 임금의 노동력 공급이 풍족하였다. 국내시장의 산업기반이 미약한 가운데 외국기업의 參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면 선발기업으로서 독점적 지위가 확보되었다. 투자를 하기만 하면 이윤이 확보되고 쉽게 커나갈 수 있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터에 경영은 위험을 負擔(risk taking)하는 용기와 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연줄이 효율적인 경영관리 능력보다 우선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의 速成 성장과정에서 기업은 경쟁력에 취약한 체질을 가지게 된다. 우리 기업은 우선 기업규모, 재무구조, 소유 및 경영관계, 사회적 인식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선진국 우량기업들과 거꾸러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첫째, 기업규모와 계열조직면에서 볼 때 선진국의 우량기업에 비해 크게 뒤진다. 우리 주력 수출상품인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의 경우, 일본기업은 그 규모가 수십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린 우리의 企業集團의 규모 이상이며, 게다가 이들 기업은 수직적으로 수백개의 부품제조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같은 기업자산을 수많은 비관련 산업분야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수직적으로 한 주력

- 우리 기업은 우선 기업규모, 재무구조, 소유 및
- 경영관계, 사회적 인식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선진국
- 우량기업들과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 못하고 있다.
- 

업종에 집중 투자해 온 것이다. 기업규모가 작고 계열화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개발력이나 마케팅에서 뒤진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우리 기업의 財務構造가 건실하지 못하다. 인플레이하에서 주로 해외저축에 의존하는 성장과정에서 차입경영이 체질화되어 있다. 우리 기업의 부채의존도는 선진국 우량기업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가뜰이나 금리도 높은 터에 빌린 돈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원가를 상승시키고 경기변동에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

셋째로, 소유의 집중도가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그에 따라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소유가족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고, 기업의 노사관계가 소유가족과의 갈등관계로 표출된다. 선진국 우량기업처럼 경영이 근대화되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기업에의 귀속감도 강하지 못하다.

끝으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아서 기업이 富를 창조하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선진국처럼 강하지 못하다. 국민경제상 비중이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주의 사유물로 관리되고 있고 근로자로서도 일시적인 생계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는 면이 있다. 기업을 알뜰이 가꾸는 사회적 토양이 깊지 못하다.

한편,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취약한 경쟁 체질이 배태됨과 아울러 생산요소상의 애로가 나타나고 경쟁도 심화하게 된다.

먼저 노동력 면에서 完全雇傭에 가까워지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적합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하던 때와 달리 일에 대한 열성도 줄고 일을 시키기도 힘들어 졌다. 인력상의 애로는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하지만 기술은 이제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싼 技術料 때문에 사서는 경쟁해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있다.

한편 시장조건을 보면 국내시장의 성숙과 개방에 따

라 국내경쟁도 심해질 뿐만 아니라, 해외 우량기업들과의 正面的인 경쟁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주로 일본기업으로부터 기술전수를 받아 그들의 자투리 시장(niche market)에서 성장해 올 수 있었으나, 일본 기업들이 범세계적인 最適 생산·판매체제를 갖추게 됨에 따라 이제는 설 땅이 아주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동안 쉽게 기업을 해 올 수 있었던 기업인들의 의욕도 沮喪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 외적으로는 성장과정에서 노동력상의 비교우위가 소멸되고 세계적인 국제화의 흐름으로 경쟁이 가혹해지는 가운데, 기업내적으로는 속성 성장과정에서 취약한 기업체질이 露露되고 그에 따라 기업의욕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근원이 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인으로서 왜 이렇게 갑자기 기업하기가 어렵게 되었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 금리를 내려라, 노조문제를 해결해 달라, 수출 금융을 달라, 시장을 막아달라 등의 요구를 하게 된다. 종전처럼 기업하기 좋은 市場條件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길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옛날처럼 기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장조건을 정부가 개선해 주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경쟁조건을 받아들이고 살아남는 길을 찾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공급조건을 개선하는 첫째 과제가 금리를 내려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일이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實物價格, 즉 물가상승률과 함께 한다. 인플레이율보다 낮은 금리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물가는 임금과 생산성, 통화량 및 수입물가에 의존한다. 정부가 돈을 푼다면 결국 물가와 임금을 상승시켜 金利를 더 오르게 한다. 높은 금리를 내리는 확실한 길은 현재의 금리수준에서 자금수요가 줄고 자금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자면 자금의 주 수요자인 기업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도리밖에 없다.

두번째 과제가 人力問題이다. 임금이 오르는 것은 생산성의 향상과 완전고용에의 접근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 근로기강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일시적인 사회적 분위기 탓에다가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다. 어쨌든 가난을 벗기 위해 일하던 때와 같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요는

기업이 그 임금에서 근로자의 사기를 높여 生産性을 최대한 올리는 수밖에 없다.

세번째가 기존기업의 시장을 보호해 주고 국내시장의 개방을 늦추는 일이다. 經濟學의 지혜는 경쟁 없이는 경쟁력이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방으로 선진국 기업은 세계적인 전략으로 생산요소를 최적으로 고용하고, 우량기업끼리 기술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영구히 문을 닫고 지낼 수 없는 한 시장개방을 늦추는 것은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늘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생산요소상의 애로와 개방에 따른 치열한 경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어진 조건이며, 이제는 우리 기업이 이에 빨리 적응하여 새로운 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다.

### 새로운 경쟁시대에서의 우리 기업의 진로

새로운 경쟁시대에서는 기업이 경쟁의 주체요, 경쟁력의 원천인 이상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층에 있다. 기업이 개방과 국제화의 새로운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은 자기의 제품에 관한 한 국제경쟁력상 우위가 있어야 한다. 먼저 우리 기업이 선진국의 우량기업과 競爭力에서 얼마나 뒤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보고, 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본다.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는 정확히 짚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보아 或者는 일본에 20년 가량 뒤졌다고도 하고, 한 때는 우리의 성장속도가 과거 일본의 그것보다 2배나 빠르니 10년후면 현재의 일본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를 産業別로 볼 때 가전제품에서는 조립 생산기술이 선진국의 80%, 설계기술은 선진국의 50% 수준이고 자동차에서는 각각 90%, 40%라는 研究機關의 분석도 있다. 불과 30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100년의 산업화 역사를 가진 선진국과의 격차를 그만큼 좁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로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기술에서는 마지막 1%의 격차야말로 엄청난 것이다. 경쟁에서 2등은 별 의미가 없고, 1등은 아무나 시간이 지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쟁력을 정확히 計量化해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상당한 격차를 실감케

- 경쟁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첫째는, 기술개발에
- 전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기업의 생명은 技術力과
- 情報이다. 이제는 기술이 있어야 기술을 살 수가 있을
- 뿐더러 기술 없이는 살아 남을 수 없다.
- 
- 

해 준다. 단적인 예로 일본 아끼하바라(秋葉原)에서 일제 VTR은 25만엔 짜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 것은 고작 5만엔도 안될 뿐더러 그나마 제품 값의 상당 부분은 일본 것이다. 일본 電子會社에서는 TV를 한 사람이 하루 평균 30대, 우리는 12대를 조립생산하고 있다. 우리의 용산전자상가에 가면 거의 전부가 日製요, 대만제이다. 시장이 완전히 개방될 경우 국내시장 전부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기업인이나 근로자의 외모는 별 차이가 없는데 만들어내는 물건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경쟁력 격차를 줄여나가는 첫째가,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기업의 생명은 技術力과 情報이다. 이제는 기술이 있어야 기술을 살 수가 있을 뿐더러 기술 없이는 살아 남을 수 없다.

일본기업들은 60년대초에 연구소 설립 붐을 이룰 정도로 기술개발에 노력해서 오늘 그 果實을 거두고 있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미래 첨단기술에서 세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다시 연구소 설립 붐을 이루고 있다. 각 산업별로 매출액 對比 연구개발 투자비율 계획을 보면 기계·전기의 경우 90년도의 3.0%, 5.5%를 95년에는 4.5%, 7.0%로 각각 크게 늘리도록 잡고 있다. 우리의 경우 그나마 기술투자자의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30대 계열기업군의 91년도 평균치가 1.8%이다. 조속히 선진국 우량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 財源이 모자라면 계열기업이나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해야 한다.

둘째는, 그간의 速成 성장과정에서 배태된 연약한 기업체질을 과감히 청산하는 일이다. 대기업은 우선 다각화된 투자를 집중시켜서 선진국 우량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기술력과 마케팅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최근 어느 그룹기업은 장기계획을 검토한 결과, 21세기에 그룹이름이 남아 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40여 單位業種에서 가까운 장래에 4개 정도의 단위업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투자를 집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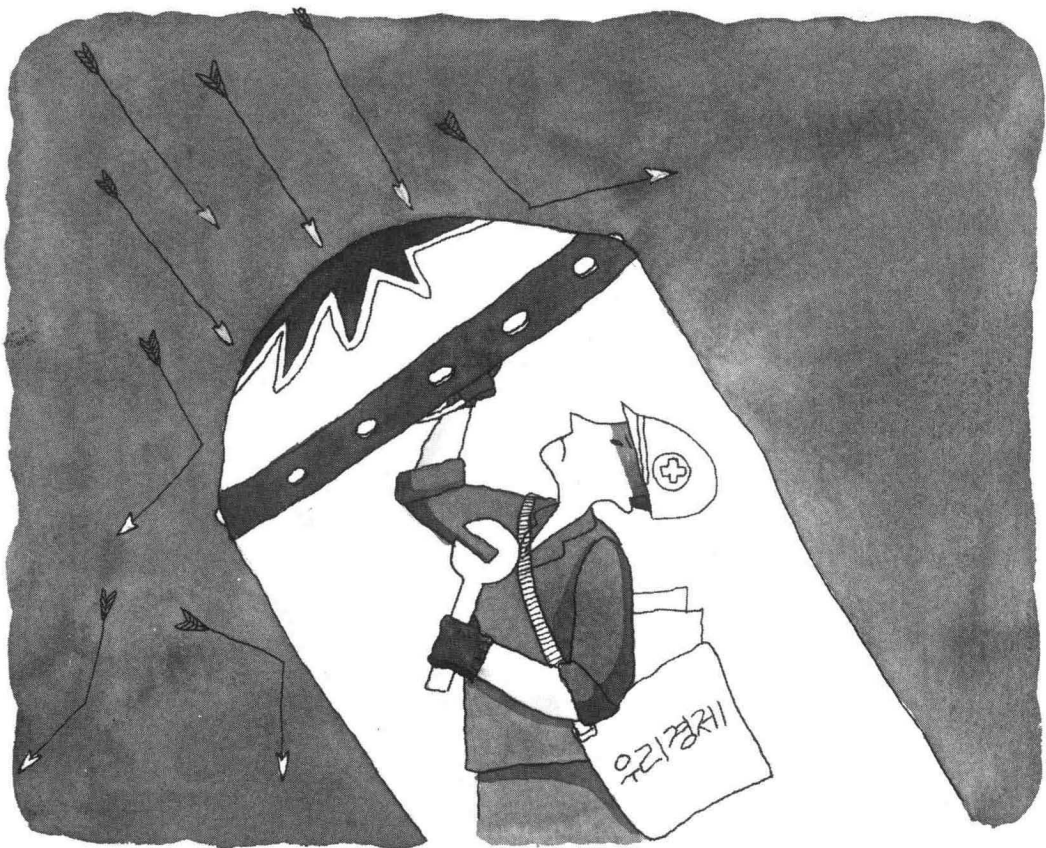
- 새로운 경쟁시대에서의 정부의 기본과제는 경쟁에서
-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경쟁의 주체인 기업이
- 제대로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며,
- 그 다음으로 거기에 따르는 弊害를 조정해 나가는
- 일이다.

키면서 기업을 과감히 공개하고 차입경영의 타성을 버려 선진국 우량기업과 같은 건전한 재무구조와 근대적 경영방식을 하루속히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버려야 산다.

셋째는, 기업의 참여자로부터 최대한의 사기와 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經營과 組織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기술과 품질경쟁시대에서는 수만개의 부품을 만드는 수십만 근로자의 아이디어와 손 끝의 성의에 의해 한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이 결정된다. 조직원의 최대한의 열성이 살아있지 않은 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 그러자면 우선 조직이 '위로부터 아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바뀌어야 한다. 創業의 시대에서

는 한 사람의 명령이, 기술과 품질경쟁의 시대에서는 열 사람의 아이디어와 열성이 필요한 것이다. 조직이 그렇게 바꾸어 짐과 아울러 위가 아래로부터 존경과 信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으로 얻은 재산을 미래의 인재양성에 고스란히 투자하고 부끄럼 없이 세금을 내고 상속을 하며, 남긴 부동산이랴야 살던 집 한 채밖에 없었다는 최근 작고한 일본 굴지의 어느 기업인의 예는 근로자들로부터 존경받는 본보기로서, 바로 그것이 그 기업으로 하여금 세계 최대의 우량기업의 하나로 성장하게 한 비결이라고 하겠다.

넷째로는, 세계적인 시각에서의 戰略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의 기술력은 실력이고 전략은 지혜이다. 국제화의 시대에서는 세계가 요소의 調達市場이요, 제품의 판매시장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은 아직 선진국 우량기업들과 맞겨루어 나갈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자면 힘을 집중하면서 남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 혼자서 모두를 하겠다는 것은 모두를 잃는 확실한 방법이다. 대기업으로서는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기업의 범세계적인 전략과 선진국 우량기업들



끼리의 기술경쟁의 가속화, 각 지역별 불력화의 와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덧붙일 것은 평범한 이야기지만 企業人 스스로가 기업을 지켜야 한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기업은 왕성한 企業家精神에 힘입어 크게 성장해 왔다. 경쟁이 가혹해지고 인력 등 생산요소상의 애로가 있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해 나가야 한다. 기업가가 기업 일을 뒷전으로 하고 그 財力과 기업의 힘을 이용하여 다른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일은 장군이 병사를 이끌고 전선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기업을 이루고 나니 한때 정치에 욕심이 생겼지만 내가 할 일은 사회를 위해 좋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며, 그러고도 할 일은 기업으로 얻는 재력을 21세기 일본을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데 쓰는 일’이라는 신념을 한 평생 실천하고 타게 한 일본 마쓰시다 그룹의 창설자의 예는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 政府의 역할

기업이 경쟁의 주체가 되는 전방위 기술경쟁시대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종래 국경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경제를 꾸려나갈 때와는 아주 달라진다. 새로운 경쟁시대에서의 정부의 기본과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경쟁의 주체인 기업이 제대로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며, 그 다음으로 거기에 따르는 弊害를 조정해 나가는 일이다.

기업이 제대로 경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첫째는 우선 기업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 관한 한 마음대로 뒤흔 수 있어야 한다. 기업활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스스로 경쟁에 유리하도록 생산요소인 사람과 資本을 동원해서 쓰거나, 기업결합·분할 등 기업조직을 바꾸는 일이다. 이와 같은 기본활동에 지나치게 제약이 따라서는 기업이 제대로 경쟁해 나갈 수 없다. 최소한 선진국 기업들이 겪는 이상의 제약은 없어야 한다. 여기서 걸리는 것이 현실과 이상의 충돌이다. 系列企業群에 대해 여신을 제한하지 않으면 막대한 신용력으로 금융을 독식해서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 없게 된다. 바람직한 것은惡을 악으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악을 빨리 시정해서 善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활동에 불가피하게 수반하

- 새로운 경쟁에서는 경쟁의 주체인 기업을 강하게
- 기르는 일과 아울러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 전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目標은 전방위 경쟁에서
- 어떻게 하면 기술과 기업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느냐
- 하는 것이다.

는 각종 인허가·품질관리·환경규제 등 정부의 공공 서비스와 규제이다. 이들 공공 서비스와 규제가 새로운 경쟁시대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맞추어 재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技術週期가 시간을 다두고 빨라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공공 서비스가 아주 신속해져야 한다. 선진국에서 工場設立이나 상품제조허가에 3개월 걸리는 일이 1~2년 이상 걸린다면 결국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쓸데 없이 행정 서비스에 능장을 부리거나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국제경쟁에서 외국기업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自生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경쟁을 시켜 그 결과가 기업 스스로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의 경쟁력에 의해서만 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바로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 계열기업군의 기업끼리의 財務上 연결고리나 경쟁력 없는 기업이 시장에서 쉽게 도태되는 것을 막는 금융관행이나 회사정리제도는 바로 기업을 튼튼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무구조·소유관계·경영관행 등에서 기업의 체질이 강해지고 기업 종사자들로부터 최대한의 사기와 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제도나 정책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경쟁에서는 경쟁의 주체인 기업을 강하게 기르는 일과 아울러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目標은 전방위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과 기업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느냐이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좌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목표는 우리에게 너무나 무리하고 야심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길밖에는 없으니 도리가 없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가려서 거기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웃 대만의

- 이제 기업은 정부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세계
- 구석구석의 消費者를 보면서, 선진국 우량기업들과
- 맞겨루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타성을 버리고
- 자기혁신을 해야 산다. 여기서 좌절하면 도태될
- 것이고, 살아남으면 생명력을 가진 국민경제의 소중한
- 기업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경우 81년에 이미 4대 기술, 自動化·情報化·新素材·에너지 등을 국가의 중점과제로 선포하고 꾸준히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汎世界的인(global) 기술협력 전술이 있어야 한다. 기술개발은 혼자만으로는 될 수 없으니 앞선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의 기술투자 동향을 보면 産業化 초기에는 저임금을 보고 투자를 했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투자환경이 나빠졌을 뿐더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도국에의 투자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기술수준은 아직 선진국 기업과의 기술적 보완관계에 의한 공동개발을 할 정도는 되지 않으니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울러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전만 벌여놓고 앉아 기다리기만해서는 안된다.

기술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산업의 바탕이 되는 전자·자동차·반도체 등의 製品技術은 거의가 일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앞선 나라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러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를 이웃으로 둔 것이 우리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 일본으로부터 기술전수를 받는 방법은 먼저 정부 차원에서 기술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기업의 私的 資産이요 기업의 生命과 같은 것이니만큼,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먼저, 일본기업이 한국기업과 기술협력관계를 가지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견 뽕족한 수가 없는 것 같지만 궁리를 하면 길이 있다. 다음은 무조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인력이 모자라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만큼 일본의 생산현장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다른 나라에 앞서 많이 보내서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술을 달라는 백 마디의 말보다 現場에서 일을 통

해서 배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대만의 경우는 앞을 내다보는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4대技術 발전에 목표를 두면서, 우선 기술집약적 기업을 기르기 위해 첨단단지를 조성하고 간단한 사업계획서만으로 3개월 내에 공장 설립조치가 되고 필요하면 정부가 나서서 자본주를 대어준다. 國際關係에서는 일본 기업에 대한 당초의 거부감을 버리고 시장을 개방하여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면서, 일본을 제대로 알기 위해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일본어 실력·생활습관·골프실력을 가진 일본관계 비즈니스 요원을 양성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국 MD社에 투자해서 첨단기술의 보고인 민간항공기 플랜트를 유치하기도 한다. 우리가 물가 10%나 9%나, 통화량 17%나 18%나 논쟁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경쟁국들은 세계적인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포석에 몰두해 온 것이다. 그 결과가 벌써 國際收支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경쟁에 대응해서 기업을 무조건 키우다보면 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농사짓기 위해 송아지를 잘 키우는 일이 중요하지만, 나중에 고삐 풀린 황소가 농사를 망가뜨리거나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소수에게 지배된 기업과 자본의 힘이 社會的 힘의 均衡을 깨뜨리고 사회가 천민자본주의로 흘러서는 안된다. ‘富’를 추구하는 단일 가치관이 사회의 지도이념이 될 수는 없다. 천민자본주의를 막고 사회가 健實하게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과 개인, 個人과 公權力 사이의 경제적 거래가 투명해야 한다. 농부는 황소에게 여물을 잘 주어 튼튼히 기르면서 고삐는 놓치지 않는다. 기업을 강하게 하되, 축적된 힘의 오용이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경쟁시대에서 정부가 해야 할 경제정책의 중심과제가 된다.

## 맺음말

국제화와 기술혁신의 세계적 조류는 기업에게 국경 없는 가혹한 전방위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선진국 우량기업들끼리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 기업은 세계를 生産基地로 최적 생산·판매 체제를 구축했다. 그동안 주로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아 그들의 자투리시장에서 성장

해 올 수 있었던 韓國企業으로서는 설 땅이 자꾸만 좁아지고 있다. 한편 이를 헤쳐나가야 할 우리 기업의 사정을 보면, 종래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하던 때의 노동력상의 比較優位가 소멸되고, 기업의 속성 성장과정에서 취약한 경쟁체질이 노정되고 있으며, 과거 기업을 쉽게 해올 수 있었던 타성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자 기업인의 의욕도 떨어지고 있다. 생사를 건 경쟁이 벌어지는 판인데 몸이 무거워 땀 수가 없다.

우리 기업은 아주 짧은 기간에 상당히 컸다. 그러나 이는 스스로의 기술개발로 치열한 경쟁에서 얻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남의 기술로 손 쉽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여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기술로 냉혹한 전방위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식민지경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이 되는 主生産要素를 남의 나라에 의존하고 경제적 잉여를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식민지경제이다. 농경시대에서는 토지가 주생산요소요, 國土를 잃게 되면 식민지경제가 된다. 오늘날 기술시대에서는 주생산요소인 기술과 정보를 남에게 의존하게 될 때에 마찬가지로 입장이 되고 만다. 이제 우리 경제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 農耕時代에서 국가를 지키는 길은 武力을 유지하여 국토를 보존하는 일이다. 군사력의 우위가 국가를 지키고 이의 주체는 군대요 병사이다. 技術時代에는 국가를 지키는 일은 기술력, 기업경쟁력의 우위이다. 기술시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차적인 역할은 企業이요 勤勞者이다.

새로운 경쟁시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인이 사명감과 투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기업을 지켜주어야 한다. 선진국 우량기업 수준으로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구성원이 최대한의 열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이 再組織되고 管理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경쟁환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가져야 한다. 이제 기업은 정부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세계 구석구석의 消費者를 보면서, 선진국 우량기업들과 맞겨루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타성을 버리고 자기혁신을 해야 산다. 여기서 좌절하면 도태될 것이고, 살아남으면 생명력을 가진 국민경제의 소중한 기업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변화를 내다보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기업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 사회 각 부문 중에도 企業部門이 그래도 개방과 경쟁을 겪었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국 우량기업 수준으로

하루빨리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役割도 달라져야 한다. 공공 서비스가 선진국 수준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본 전략을 가져야 한다. 정부 각 부서가 집단적 이기주의로 각기 기업과 민간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조직의 속성이 깨뜨려져야 한다. 기업에게 선진국 우량기업 수준의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면 정부도 선진국 정부 이상의 생산성을 가져야 한다.

엄청난 변화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10년 후의 우리 기업의 모습이 이대로일 수 있겠는가.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웃 대만에서 86년 家電産業을 개방하면서 6개월 만에 최대의 전자회사가 수입상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지금 세계의 우수한 대기업들이 머지않아 일본기업에 의해 도태되거나 일본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략할는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 앞의 현실이다.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닥치면 또 잘 해 나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을 수 있다. 국제화와 기술혁신 시대의 경쟁의 냉혹함을 당해서 느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후이다. 기업들이 그나마 꾸려나가고 있는 것은 特定地域으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덕이다. 당장 트면 모두 깨질 터이니 시간을 벌자는 것이지만, 세계가 개방을 하고 상품의 國籍이 없어지고 있는 마당에 문을 닫을 수도 없을 뿐더러 닫혀지지도 않는다. 끝면 끝수록 더 어렵게 된다. 일본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식할 수는 없을 터이니 우리가 빌붙을 뭇은 있을 것이라는 패배적 기대마저 일본의 범세계적 최적 생산기지의 구축과 자원보유 개도국의 산업화로 허용될 수 없게 되고 있다. 기업인·근로자·정부가 한 마음이 되어 새로운 경쟁시대에서 우리의 삶의 젖줄인 기업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쏟아부어야 할 때이다. 갈 길은 멀고 험한데 시간은 없다. **정현**

# 우리의 대외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



서용현  
외무부 통상2과 서기관

우리가 세계의 13대 교역국이 되고, OECD 가입 권유를 받는 등 선진권 진입의 문턱에 서 있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대외통상정책 관행이나 사고방식의 선진화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는 특히 脫冷戰時代를 맞아 각국의 경제적 실리 추구 경향이 부쩍 두드러지고 우루과이라운드, 歐洲 經濟 統合,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과거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주도하에 브레튼우즈 체제 및 GATT를 基軸으로 하여 오랫동안 안정을 유지해온 세계경제 질서에 변혁의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태세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일이기도 하다.

## 우리의 대외통상교섭의 발자취

지난 85~86년 韓·美간 지적재산권 및 보험 301조 협상은 사실상 우리의 본격적인 대외통상교섭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종 쿼터협상 등이 있었으나 이는 대개 특정 산업분야에 국한되고 경제제도적 개혁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일단 논외로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대외통상교섭의 초기단계에서 우리는 경험 미숙으로 인하여 혼란과 시행착오를 적지않게 경험해 왔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부분은 우리의 대외시장개방 정책이 극단적인 開放論과 극단적인 保護論의 양극을 왕복한 데에서 초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80년대 중반 이래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가 대외경

제정책의 근간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고위정책 수준에서는 개방화 경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반면, 국부적·미시적 분야에서는 분야별 특수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상존하여 결과적으로 그때 그때의 時流에 따라 때로는 무모한 과잉개방 경향을 보이다가, 때로는 과보호적인 경향으로 급선회하기도 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 예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전술한 對美 지적재산권 301조 협상 당시에는 급격히 증가된 대미무역 흑자를 바탕으로 개방론이 득세하여 일면 경솔한 시장개방 조치를 약속한 감도 없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특혜적인 특허권 소급효 인정으로 EC 및 일본의 동등대우 요구를 초래하여 이후 상당 기간동안 이들 국가와의 통상관계에 주름을 안겨주었고, 의약품 등에 관한 未市販 特許(이른바 pipeline products)의 대상범위나 규모도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호를 약속하여 이후 3~4년간이 소요된 후속 협상과정을 겪으면서야 미시관 특허의 진정한 의미와 그 대상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 등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반면에 국제수지가 악화되거나 국내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때에는 보호주의적 경향이 수시로 고개를 들어 결과적으로 우리의 무역상대국에게 혼동된 신호를 주고, 우리가 개방의 걸음을 걸치고 있으나 실상은 보호의 속옷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는 데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외국산 자동차시장을 개방한 후에 外產자동차 국내판매회사에 대한 관계부처의 압력 행사설이 뒤따르고, 프렌치 프라이용 냉동감자 시장개방 후 국내업자에 대한 국산품 사용 압력설이 나오고,

키위 등 外産과일 수입허용 후에 국내호텔의 외산 과일 판촉 전시회를 취소한 것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협상단계에서 이행상 문제 점을 지적하고 약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일도 많았다. 외국업체들은 이미 한국시장 진출의 청신호를 받고 시장조사·유통망 구축 등 노력과 경비를 쏟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 후퇴할 수 없는 입장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행상 문제에 관한 외국업체 압력의 강도도 시장개방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은 쉽게 연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시장개방후의 외국업체 국내시장진출 방해행위는 결과론적으로도 외국업체의 진출을 저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대한 신뢰의 실추라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뿐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대외통상교섭 태도의 선진화 필요성

우리의 經濟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눈에 비친 우리 경제의 규모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커진 데 반해,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태도는 이러한 경제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괴리가 이러한 혼란의 根底에 깔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불균형 성장, 국제수지 적자 또는 구조조정 의 어려움보다는 우리의 GNP, 무역규모 등을 척도로 삼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우리도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경제력에 맞게 성숙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의 실제 대외교섭 태도와 관행이 과연 얼마나 선진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첫째, 부분이익을 전국가적 대외경제정책보다 우선시키는 경향이 최근 들어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심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수출에는 관심이 없고 내수시장을 지키는 데 주력하는 산업, 예컨대 의약품·화장품·과자류 등의 업체나 이러한 업종을 관장하는 정부 부서는 외국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받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피해를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인지 局部的 이익 수호를 앞세우는 경향이 많다. 사실상 이러한 업종은 국제경쟁의 도입에 의해 국산품의 품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분야로서 이러한 산업에 대한 과보호는 우리의 대외통상관계 전반에 대한 악영향은 차치

- 시장개방후의 외국업체 국내시장진출 방해행위는
- 결과론적으로도 외국업체의 진출을 저지하는 데
-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대한
- 신뢰의 실추라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뿐임을
-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하더라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화 과정에서 개별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문제는 이러한 분산된 목소리를 여하히 조화·조정시켜서 일관된 대외경제정책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민주화 과정은 정부조직내에서 경제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던 부서의 역할 약화를 수반하게 되어 부분이 이익 추구경향에 대한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립상을 막기 위해서는 분야 중립적인 (sector-neutral) 대외경제관계 담당부서에 적절한 대내적 견제수단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두번째로, 우리가 對外通商交渉에 얼마나 페어 플레이적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난날에 비하여 대외통상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은 우리의 마음가짐 변화로 초래된 것이라기보다는, 임시 변통적인 미봉책들이 금방 한계를 드러내고 뒷날에 훨씬 큰 문제를 유발시키는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은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외통상관계의 관심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된 일부 분야에서도 아직 대외교섭 경험이 日淺하여 회피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로, 아직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정책과 실행의 괴리라고 생각된다. 정책부서에서 외국에 약속한 개방화 조치에 대하여 일선부서에서 오도된 애국주의 또는 국내 경쟁업체의 영향 등에 따라 약속사항과 다른 조치를 실행하는 사례는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될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외국업자의 직접적인 재산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례를 지적하여 우리의 교역상대국들은 우리의 무역관련 제도나 관행에 일관성과 명료성이 부족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집행과의 괴리는 우리가 群小貿易國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우리가 세계의 13대 교역국으로 성장한 지금에 와서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 및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외국인의 투자의욕을 움츠려들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나아가 선진기술의 도입측면에서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부시 美國대통령 방한시 한·미 양국 정상간에 상호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상품 교역, 투자 및 기술교류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입각하여 지난 2월 개최된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통관 및 수입절차·투자·기술협력·표준 및 규제절차의 4개 분야 실무작업반을 설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협의는 한·미 통상관계의 원활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의 제반 대외경제 관련 제도가 後進의 구태를 벗고, 우리의 경제가 진정한 선진경제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네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 의한 신중한 對外交渉이라 하겠다. 과거에 우리는 GATT 가입 당시 쇄고기에 대한 양허관세율을 25%로 하고, 東京라운드 당시에 이를 20%로 내리는 데 동의한 바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수십년간의 만성 국제수지 적자를 벗어나 갑자기 GATT상의 쇄고기 수입제한 근거를 상실하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소치라 하겠으나, 지금까지도 우리가 경솔한 대응을 하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한 게 아닌가 우려되는 현상들이 적지않게 눈에 띈다.

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현재 제도나 상대방의 제도수정 요구가 각각 국제규범과 관행 등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와 제도수정시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 이를 기초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준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이며, 힘이 약할수록 논리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協商이 논리에 입각하지 못할 때는 힘에 의해 협상결과가 결정되는데 힘이 약한 우리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서 1차적

으로 국내법규 규정상 곤란하다는 점을 내세우고는 하는데, 국내법규가 국제 규범이나 관행에 일치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설득력이 없다. 또한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 자주 사용되는 것이 우리 업계의 競爭力이 미약하여 당장 개방이 곤란하다는 논리인데, 이런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우리 업계의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 경쟁력 신장 전망 등을 제시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개방가능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외교섭에 있어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리주장은 앞서 언급한 우리의 의무이행과 동전의 앞뒷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舊소련연방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연결되는 광섬유 해저케이블 설치를 위한 콘소시움 형성이 거론되고 있을 때 미국정부가 '對共產圈 전략물자 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결의안을 이유로 우리의 케이블 공급권에 이의를 제기해온 데 대해 우리측에서 관련 근거를 제시, 종국에는 美國으로 하여금 이의를 철회토록 한 것이 그 實例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대방은 과거 오랫동안 통상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법적 논리를 축적해온 百戰老將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적극적 권리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이론무장을 하여 하자 없는 엄밀한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도 외국에서 反덤핑, 相計關稅 조치를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외국업체의 덤핑, 보조금 지급에 적극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무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업체의 불공정 무역행위 제재를 위한 첫 조치로서 미국·일본·독일업체의 폴리아세탈 덤핑행위에 대해 반덤핑 과세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대상국들은 동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아가 GATT 패널구성을 요청하여 현재 GATT 분쟁 해결절차가 진행중인바, 만약 동 패널에서 우리측이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생 무역위원회의 신뢰성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多者·兩者 교섭간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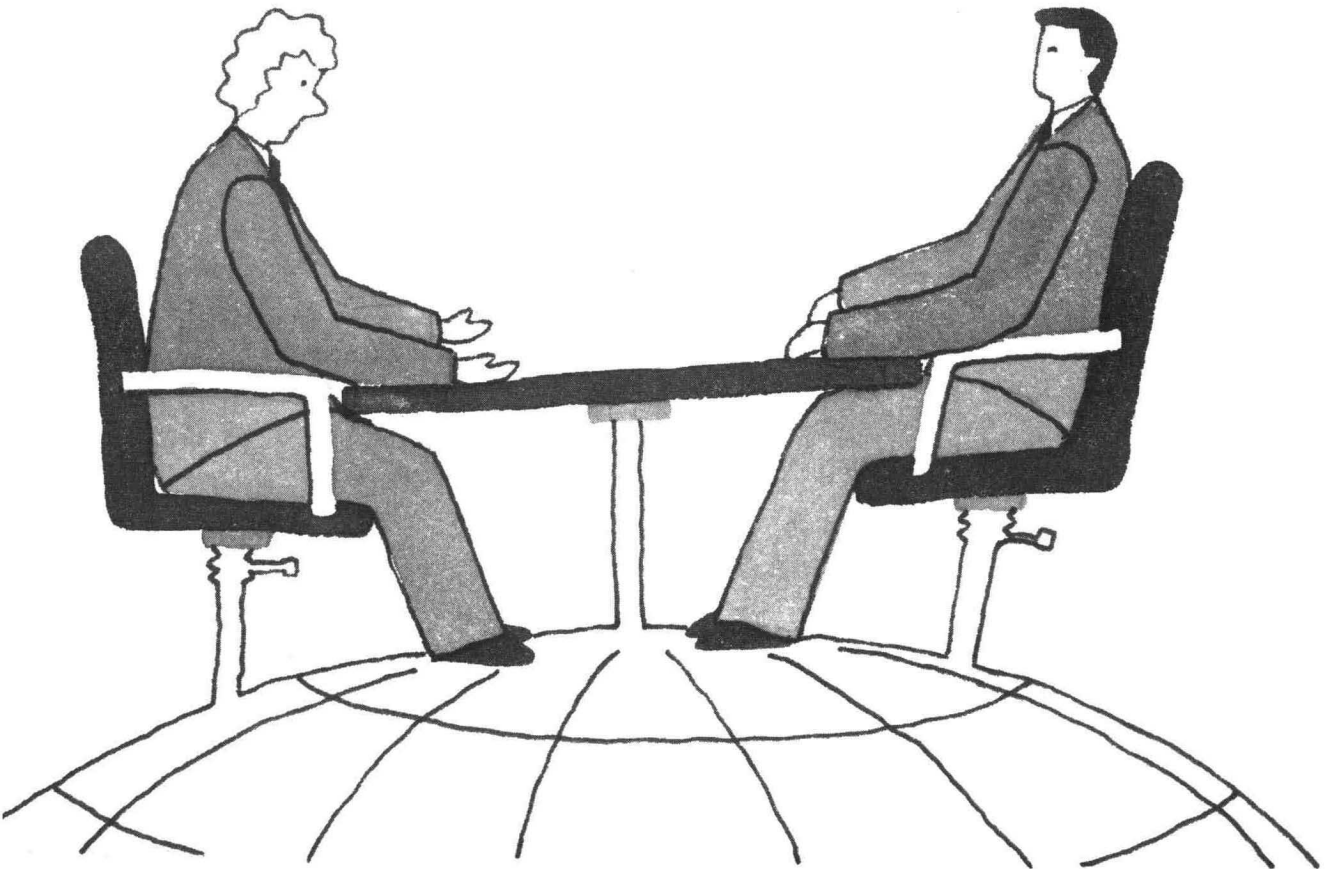
80년대에 들어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이 부쩍 강화됨에 따라 우리는 당혹감을 느꼈으며, 특히 해방이

후 우리에게 자비로운 보호자의 역할을 해오던 미국이 태도를 돌변하여 시장개방 압력의 선봉에 나선 데 대해 분노를 느끼고 이것이 反美감정으로 발전되기도 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태도변화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금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높은 무역장벽을 쌓고 있지만 선진국들이 이에 대해 시비를 거는 예는 거의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시장개방 압력의 표적이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종래에는 무시할 만한 존재였다가 이제 주목의 대상으로 바뀌고 선진국들이 우리를 자신들의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과거 50~60년대 미국에서 원조를 받던 시대에는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시각이 외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고려는 외교정책에 종속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통상정책이 외교정책으로부터 독립·분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이러한 미국의 태도변화에 대해 우리가 섭섭하게 느낄 이유도 필요도 없으며, 이제 우리도

- 외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현재
- 제도나 상대방의 제도수정 요구가 각각 국제규범과
- 관행 등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와 제도수정시에
-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
- 이를 기초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냉정하게 대등한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통상관계를 이러한 경쟁관계에서 파악한다면, 우리가 對美 양자 통상교섭에서 겪는 약점 내지 핸디캡 또한 분명해진다.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수출의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26%에 달하는 반면, 우리가 미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한 상태에서 우리의 교섭입장이 열세에 놓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더구나 우리는 GNP의 무역의존도가 미국의 3배가 넘는 상황이므로 그만큼 국제



무역에 死活이 걸려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무역보복을 전제로 하는 통상교섭에서 어려운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國際貿易의 이면에는 이러한 힘의 논리, 弱肉強食의 원리가 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과거 1930년대와 같은 경제전쟁이나 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지면 약자가 먼저 타격을 받기는 하겠으나 중국적으로 강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강대국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은 국제통상의 경쟁관계에 일정한 게임규칙을 정하여 왔는데, GATT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체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무역이 지난 20여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것은 GATT 체제에 의한 세계무역 자유화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UR협상 성공이 우리에게서 유리

현재 이러한 多者間 국제무역체제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이러한 다자간 통상교섭은 양자교섭과 비교하여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러한 다자교섭에서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갖는 나라들과 제휴함으로써 큰 교역국들에 대한 상대적 교섭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둘째,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범세계적 협상에서는 強國이 힘의 논리를 동원코자 하더라도 이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正義 내지 合理的 명분으로 도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자교섭과는 달리 힘의 논리 주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나라에서 쌀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 문제와 거의 동의어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국내적으로 큰 反響을 불러일으켜 왔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만약 우루과이라운드가 좌초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요 농산물 시장을 고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하면 농산물·서비스 등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토의되어 온 제반문제들이 양자관계로 환원될 것이 분명하며, 위에서 언급한 양자교섭상 취약성 때문에 오히려 더욱 어려운 입장에 빠질 가능성은 없겠는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 北美自由貿易協定の EC에 대한 대항적 성격이
-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상호 배타적 장벽을 높여가는
- 악순환을 거쳐 결국 세계경제의 불력화를 초래할
-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파조 하원의원이 일본·한국·대만의 쌀 수입금지와 관련하여 미통상법 301조 조치 발동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는데, 이는 현재로서는 선거용 법안의 색채가 강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세적 法案들이 현실로 대두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이 먼저 쌀시장을 개방하면 일본도 국내 정치적으로 명분이 서기 때문에 뒤이어 쌀시장을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일본인들의 비공식적 언급도 있었지만, 실제로도 미국이 일본의 쌀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해 먼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교섭입지가 불리한 우리나라나 대만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실패에 따른 또 하나의 우려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실패가 세계경제의 불력화 경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무역 전환 효과보다 더 큰 무역창출 효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역외국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北美自由貿易協定の EC에 대한 대항적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상호 배타적 장벽을 높여가는 악순환을 거쳐 결국 세계경제의 불력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경제의 불력화는 우리의 수출시장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단순논리에 의하더라도 경제의 對外依存度가 큰 우리나라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할 때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에 대한 우리의 利害는 지대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농산물 문제도 우선 우루과이라운드의 화살을 피한다는 미봉책보다는 가능한 한 우루과이라운드 내에서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한글

# 한국철도의 발전 방향



**이재봉**  
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

지금 세계의 철도는 새로운 황금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교통혼잡의 완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점증하는 욕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송수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궤도 교통수단인 철도가 지역간 대도시 교통에서 유력한 교통수단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 새로이 각광받고 있는 鐵道

철도는 1930년대 영국에서 처음 상업 운행을 개시한 이래 20세기초까지는 육상교통에 있어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항공기 산업의 발달과 대량보급으로 철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으며 20세기 중반부터는 여타 교통수단의 보조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함께 철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퇴조되면서 철도시설이 낙후되고 항공기나 자동차산업만큼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20세기의 마지막 4반세기에 이르러 선진각국은 사회전반의 移動性 증가와 경제규모의 확대 및 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수송수요의 끊임없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도로와 공항을 계속 증설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공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저공해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EC 가맹국간의 수송량 가운데 75년에는 철도와 항공이 각각 동일한 수송분담률을 보였지만 86년에는 항공기 62%, 철도가 38%로 항공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EC역내의 버스와 승용차에 의한 도로 수송은 70년의 1조7천억 人·Km<sup>1</sup>에

서 86년에는 2조8천억 人·Km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송량의 증가에 대응하여 도로와 항공로는 크게 증설되었지만, 철도는 19세기말의 기초수준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도로의 정체와 공항시설의 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EC 생산량의 2.6%~3.1%에 달하게 됨에 따라 철도는 안전성·고속성·대량수송성·에너지 절약성과 아울러 저공해 교통수단으로서 새로운 관심을 끌게 되었다.

## 철도의 고속화

오늘날 철도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고속철도가 절대적으로 공헌한 결과라 할 것이다. 50년대 고속철도의 건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레일과 차륜의 마찰에 의한 속도의 한계는 200Km를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新幹線이 200Km의 벽을 깨고 64년에 운행을 개시하였고, 그후 계속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90년 5월에는 프랑스의 TGV가 513Km/H라는 高速化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의 철도는 새로운 고속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21세기 중반에는 磁氣浮上列車가 실용화됨으로써 중·장거리 교통에서 철도의 역할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新幹線과 프랑스의 TGV의 성공 외에도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문제나 에너지절약 시책을 배경으로 하여 철도의 고속화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1) 人·Km : 차량·Km의 반대개념으로 실제 승차인원에 차량의 운행거리를 곱한 값

프랑스는 81년에 동남선을, 89년에 대서양선을 완성 운영하고 있으나 북부선 중 파리-릴르(225Km) 구간을 93년에 개통할 예정이며, 향후 20년간 약 3천Km의 고속전철 新線을 건설하는 동시에, 기존선 1만1천Km는 고속선으로 개량하여 유럽교통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91년에 도시간 고속열차 Inter-City Express의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는데, 여객과 화물겸용으로 최고속도 300Km 수준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路線의 건설과 기존선의 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외에도 스페인이 마드리드-세빌리아, 마드리드-바르셀로나간에 고속전철을 신설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이탈리아·스웨덴 등은 기존 철도시설과 열차의 개량으로 최고 250Km/H 수준의 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고속전철을 실용화한 일본은 대중교통수단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90년대의 교통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현재 운영중인 4개 노선 1,838Km의 新幹線 철도를 2000년까지 3,300Km(장기적으로 7천Km)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텍사스에 TGV방식으로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것 외에 캘리포니아·플로리다·네바다·미시간주 등을 중심으로 고속전철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70년대말부터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여 수송할 수 있는 열차를 개발하여 大陸間橫斷 화물을 대부분 철도(1개 열차에 컨테이너 최대 500개)로 수송하고 있다.

〈표 1〉 세계의 고속전철 현황

(단위 : Km/H)

	구 간	개 통 연 도	최 고 속 도
일 본	도쿄-오사카	64년 10월	220
	오사카-하카다	75년 3월	230
	우에노-모리오카	82년 6월	240
	오미야-니가타	82년 11월	240
프랑스	파리-리용	81년 9월	270
	파리-르망	89년 9월	300
	파리-릴르	93년 개통예정	300
독 일	하노버-뉘른부르크	91년 5월	270
	만하임-스트루트가르트	93년 개통예정	270
스페인	마드리드-세빌리아	92년 개통예정	300
미 국	달라스-샌안토니오	98년 개통예정	300
이태리	로마-피렌체	89년	250
영 국	런던-리즈	89년	225
대 만	대북-고웅	98년 개통예정	300

- 세계각국은 환경오염문제나 에너지절약 시책을
- 배경으로 하여 철도의 고속화를 앞다투어
- 추진하고 있다.
- 오늘날 철도가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다시 각광을
- 받기 시작한 것은 고속철도가 절대적으로 공헌한
- 결과라 할 것이다.

### 경영혁신의 추구

철도는 그 발전의 초기단계에 원료의 수송이나 제품의 출하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국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의 발전 이전에 철도가 발달하여 국민의 수송욕구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보다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많은 나라에서 국유철도 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며 철도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法的 규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철도의 수송분담률 저하와 항공기 및 자동차의 이용증대에 따라 수송부문에서 철도가 독점성을 잃어가면서 철도의 재건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철도의 경영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동차 수송에 약간의 정책적 억제력을 가하면서 철도의 경영을 호전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 하나는 독점금지 정책의 일환으로 19세기 이래 취하여 온 철도에 대한 규제를 가능한 한 완화하여 철도경영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것이었는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사유화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公社 형태인 國鐵이 64년 적자로 반전된 이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일본교통의 중심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면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사제도 및 거대조직에 의한 전국 일원적 운영이라는 경영형태를 개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국철은 10여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87년 4월 주식회사 형태인 半官半民 형태의 특수회사인 '日本鐵道(JR)'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日本鐵道'는 전국의 철도를 6개의 여객회사로 분할하고 철도화물 회사와 정보시스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국철을 분할하여 민영화하였다. 이 6개의 여객철도회사는 驛勢圈에서의 각종 수익사업, 호텔·식음료 사업 등 철도관련 주변산업으로 적극적인 경영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설철도의 경우 총수입 중 운임수입 비중은 54%에 그

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누적되는 경영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선로와 신호, 열차의 통제, 전철설비에 관한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철도를 완전한 상업적 차원에서 경영하여 赤字線은 해당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과감히 路線을 폐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또한 자동차의 운행을 감소시키고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스톡홀름의 경우 도심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는 그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대중교통 수단의 정기승차권을 구입하여 부착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의 수익증대와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1830년대 민간기업의 형태로 철도가 출발하였으나 1948년 하나의 국영기업인 '英國鐵道(BR: British Rail)'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英國鐵道'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로부터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으며, 도시간 철도·화물운송·철도시설 보수·輕軌鐵道 등에 관하여 별도의 자회사를 설치·운영하고 지역별로 철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경영혁신을 꾀하고 있다. 또

〈표 2〉 철도시설과 수송추이

	80	85	90	증가율(81~90)
궤도연장(Km)	6,007	6,299	6,435	0.7%
여객(백만명)	431	503	645	4.1%
화물(백만t)	49	55	58	1.7%

〈표 3〉 각국의 철도사업에의 지원현황

(단위: %)

	소유기관	총수입 중 보조금 비율					
		80	81	82	83	85	88
한 국	정부기관	2	-	8	7	2	4.8
자유중국	정부기관	23	14	12	10	5	10.6
알제리아	공 기 업	11	9	9	22	20	12.1
그리스	정부기관	30	26	30	28	36	32.7
포르투갈	공 기 업	50	55	35	59	49	34.7
일 본	공 기 업	10	9	11	10	7	-
서 독	정부기관공단	34	36	35	35	34	33.1
네덜란드	공 기 업	43	43	45	47	44	43.2
오스트리아	공 기 업	17	17	17	18	20	29.3
프 랑 스	공 기 업	31	5	32	31	31	28.2
핀 란 드	정부기관	3	3	3	3	3	3.4
영 국	공 기 업	23	31	35	32	29	15.1

한 최근에는 전력·상수도·버스사업 등의 민영화 성공에 힘입어 '英國鐵道'를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한국철도의 발전방향

그동안 한국철도는 경제규모의 신장에 따른 수송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도로의 체증현상으로 定時·대량·신속·안전성 면에서의 우월성에 힘입어 지난 5년간(86~91) 새마을호는 연평균 26%, 무궁화호는 15%, 컨테이너화물은 21%의 높은 수송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의 부족으로 總軌道延長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최대 용량까지 운행하고 있으나 수요는 이를 초과하여 이용 국민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조직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철도는 세계철도의 흐름과 급변하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이제 여러 면에서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93년 새로이 公社 체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와 제도·의식의 개혁이 요구된다 하겠다.

### 경영의 쇄신

93년 1월로 예정된 철도공사 체제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변경에 끝나서는 안되며 우리의 철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 경영여건을 과감히 개혁하여 흑자 경영을 위한 경영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영책임자가 경영상의 중요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경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은 경영내역이나 사업내용이 상이할 것이므로 따로 분리하여 子會社를 설립하는 등 독립채산 책임경영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철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여객부문에서는 도시권수송·지역간수송·관광수송에 역점을 두고 철도서비스의 고 급화와 다양화를 시도하는 한편, 여객수송노선의 전철화 및 각 노선간의 연계 환승체제 개선 등을 통한 여객의 유치에 힘써야 할 것이다. 화물수송 분야에서도 신속한 대량수송을 위해 각 주요거점에 貨物基地를 조성

하고 컨테이너수송을 증대시키는 한편, 화물트럭 운송과 연계하여 화물자동차 자체를 화차에 싣고 수송하는 협동일관운송(piggy back)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로서도 철도운임과 요금의 적정원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규제와 공공정책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이고 선별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고속철도 건설 등 간선철도의 정비

현재 전세계는 적어도 200Km 이상의 상업철도를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빠른 새마을호가 최고속도 160Km, 평균속도 107Km로 운행하고 있어 고속철도 시대에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부선 등 주요 幹線이 용량한계에 도달해 있어 철도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정부는 서울-부산간에 최고속도 300Km에 달하는 고속전철을 올해 6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호남선과 서울-동해안 간에도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고속철도망의 구축에 있어서는 중·장거리 대량수송 수단으로서의 철도의 특성을 살리고 地方中樞都市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속철도뿐 아니라 재래철도도 겸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열차를 개발하여 갈아타는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고속철도의 편익을 기존선까지 확대하며, 제도의 보완으로 신형차량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신호보안 설비를 개량하여 재래철도의 고속화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속철도망 완공후 화물수송능력 증강 등을 통하여 기존철도의 이용률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수도권 막대한 화물을 분산처리하기 위해서는 인천-수원간의 水仁線을 현재의 협궤에서 표준 광궤철도로 개량하여 인천항 및 경인지역 공단과 직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 하겠다.

간선철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또하나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현재 서울이 철도교통의 종점으로 되어 있으나, 장래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의 허리에 위치하여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 확실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다.


- 교통혼잡의 완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점증하는 욕구는
-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송수단을 요구하고
- 있으며, 궤도 교통수단인 철도가 지역간 대도시
- 교통에서 유력한 교통수단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 

### 지방철도의 정비

지방철도는 자가용승용차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지방인구의 계속적인 감소로 이용자가 감소되고 있어 경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철도에 의한 수송보다는 버스로 수송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판정된 노선이 90년 4월까지 45개선 1,846Km에 이르러 버스 수송으로 전환되었고, 38개선 1,311Km가 제3섹터<sup>2)</sup> 등 지방이 주체가 되어 경영하는 철도로 전환이 완료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적자선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가 미약하여 철도경영에 부담을 준 것을 감안한다면 철도공사화에 있어 전체교통망 형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일본의 신간선 기술을 실용화시킨 것은 일본 철도의 기술연구소인 점을 감안할 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도 고속철도시대의 도래와 함께 신기술을 습득하고 자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기능과 조직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2) 과거 정부가 수행해온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시설 건설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정부 등 公共機關과 민간이 합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안